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연구책임자: 민태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실장)

공동연구자: 조정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현인애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초빙연구위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신통일대계(4/4년차)

KINU 연구총서 17-06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자	민태은, 조정아, 현인에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아미고디자인(02-514-5043)
인쇄처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02-6401-8891)
I S B N	978-89-8479-895-3 93340 탈북자[脫北者], 정착 생활[定着生活] 342.158-KDC6 /323.623-DDC23
가격	13,000원

CIP2017034866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 약	13
I. 서론	21
1. 연구목적	23
2. 조사방법	27
II. 기초 통계(1): 교육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33
1. 교육에 대한 기대 및 학교관	36
2. 남한 교육 적응 실태	39
3. 남한 교육에 대한 평가	45
4.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51
5.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	54
III. 기초통계(2):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63
1.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의식	65
2.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태도	78
3.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과 통일복지 의식	84
IV. 기초통계(3):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91
1.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94
2. 자율적 시민성	97
V. 심층분석(1):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교육 및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 ...	103
1. 연구주제와 의의	105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2.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109
3.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	127
4. 정책제언	149
VI. 심층분석(2):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특징과 통일 이후 복지정책	157
1. 연구주제와 방법	159
2.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65
3. 북한이탈주민의 통일복지 의식	189
4. 정책제언	200
VII. 심층분석(3):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205
1. 연구주제와 의의	207
2. 시민성의 개념	210
3.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215
4.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적 시민성	224
5.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234
6. 정책제언	252
VIII. 결론	257
〈별첨〉 북한이탈주민 종합의식조사 설문지	265
참고문헌	2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93

표 차례

표 I-1	조사대상 지역 책임자	28
표 I-2	입국 현황(2017년 9월말 현재 거주자 기준)	29
표 I-3	지역별 거주 현황(2017년 6월말 현재 거주자 기준)	29
표 I-4	연령별 분포(2017년 6월말 현재 기준)	30
표 I-5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징	30
표 V-1	변수별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111
표 V-2	변수별 교육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	113
표 V-3	변수별 교육과 사회적 성취와의 연관성 인식	114
표 V-4	변수별 남한 교육의 문제점(1순위)	116
표 V-5	변수별 남한 교육 중 교육통합 후 적용 희망 사항(1순위) ..	118
표 V-6	변수별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121
표 V-7	변수별 북한 교육의 문제점	122
표 V-8	변수별 북한 교육 중 교육통합 후 적용 희망 사항(1순위) ..	125
표 V-9	변수별 남북한 교육통합 방식	128
표 V-10	변수별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북한 지역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1순위)	130
표 V-11	변수별 남북한 교육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남한의 사전 준비 과제(1순위)	133
표 V-12	변수별 남북한 통일 후 교육통합 시 자녀 교육 희망 지역 ..	135
표 V-13	변수별 남한 교사 선호	137
표 V-14	북한 출신 학생 우대 정책	139
표 V-15	변수별 통합교육과정 도입 시기	141
표 V-16	변수별 남북한 학생들의 교육적 이동 제한 정책에 대한 견해 ..	143
표 V-17	기존 북한 교사 재고용에 대한 견해	147

표 차례

표 VI-1	가구 내 복지대상자 수	166
표 VI-2	가구 내 수급자 여부	167
표 VI-3	가구의 복지 지위	168
표 VI-4	복지제도 가입 여부	169
표 VI-5	빈곤의 원인 비교	170
표 VI-6	복지 정당성 평균값	171
표 VI-7	복지제도의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173
표 VI-8	복지 제공 주체 의식 비교	175
표 VI-9	인구사회학적 요인	176
표 VI-10	구체적인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177
표 VI-11	복지 당사자 태도 분석	178
표 VI-12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 비교	180
표 VI-13	복지비용 부담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181
표 VI-14	세금 증납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183
표 VI-15	복지부담 태도와 자기이해 변수 간의 상관관계	183
표 VI-16	복지제도 설계	185
표 VI-17	복지정책 요구 비교	186
표 VI-18	복지정책 요구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상관관계	187
표 VI-19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 요구와 자기이해 변수와의 상관관계	188
표 VI-20	통일방식에 대한 의식 평균값	189
표 VI-21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191
표 VI-22	통일 이후 복지비용 마련	193
표 VI-23	통일 이후 복지수준	195
표 VI-24	북한 학력 및 당원 유무와 정치이념 관계	199

표 차례

표 VI-25	복지비용과 복지수준 간의 상관관계	202
표 VII-1	의무적 시민성 문항	215
표 VII-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비교	216
표 VII-3	투표의무: 연령, 남한 교육 및 거주기간별	219
표 VII-4	납세의무: 연령, 남한 교육 및 거주기간별	221
표 VII-5	법과 규칙 준수: 연령, 남한 교육 및 거주기간별	222
표 VII-6	자율적 시민성 항목	224
표 VII-7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자율적 시민성 비교	226
표 VII-8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	227
표 VII-9	사회·정치단체 참여	228
표 VII-10	타인에 대한 이해	229
표 VII-11	윤리적 소비	231
표 VII-12	어려운 사람 돕기	232
표 VII-13	의무적 시민성: 연령집단별 평균값	234
표 VII-14	의무적 시민성: 남한 교육 여부에 따른 평균값	237
표 VII-15	의무적 시민성: 거주기간에 따른 평균값	238
표 VII-16	의무적 시민성	240
표 VII-17	자율적 시민성: 연령집단별 평균값	243
표 VII-18	자율적 시민성: 남한 교육 여부에 따른 평균값	244
표 VII-19	자율적 시민성: 거주기간별 평균값	244
표 VII-20	거주기간 11년~15년 집단의 평균값과 최고 평균값 집단 간 분산분석	246
표 VII-21	자율적 시민성	251

그림 차례

그림 II-1	교육의 기대 효과(1순위)	36
그림 II-2	학교관(1순위)	37
그림 II-3	교육 기대수준	38
그림 II-4	남한에서 정규 초중등학교 교육 경험	39
그림 II-5	남한 학교 적응의 어려움(1순위)	40
그림 II-6	교과 학습의 어려움(1순위)	41
그림 II-7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1순위)	42
그림 II-8	교우 관계의 어려움(1순위)	43
그림 II-9	남북한 학교 교육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1순위)	44
그림 II-10	현재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45
그림 II-11	교육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	46
그림 II-12	교육과 사회적 성취와의 연관성	47
그림 II-13	사교육의 효과	48
그림 II-14	남한 교육의 문제점(1순위)	49
그림 II-15	남한 교육의 장점(1순위)	50
그림 II-16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51
그림 II-17	북한 교육의 문제점(1순위)	52
그림 II-18	북한 교육의 장점	53
그림 II-19	통일 후 남북한 교육통합 방식	54
그림 II-20	남북한 교육통합 시 북한 지역 주민의 어려움(1순위)	55
그림 II-21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남한의 사전 준비 과제(1순위)	56
그림 II-22	남북한 교육통합 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지역	57
그림 II-23	남한출신 교사를 북한 학교 파견 시 북한 학부모(학생)의 예상 반응	58

그림 차례

그림 II-24 통일 이후 북한 출신 학생이 남한 대학 입학 시 우대 정책 제공	59
그림 II-25 새로운 통합교육과정 도입에 필요한 과도기	60
그림 II-26 남북한 학생들의 교육적 이동 제한 정책에 대한 견해 ·	61
그림 II-27 남한 주도의 통일 시 북한 교사 재임용	62
그림 III-1 경제발전과 평등분배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	65
그림 III-2 남한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66
그림 III-3 빈곤의 원인	67
그림 III-4 사회복지 실시 목적	68
그림 III-5 복지제도는 평등 기여	69
그림 III-6 사회복지혜택 수급권리	70
그림 III-7 복지제도의 상호부조 기여	71
그림 III-8 사회복지 확대가 근로의욕 저하에 주는 영향	72
그림 III-9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73
그림 III-10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하는지 여부	74
그림 III-11 부모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는지 여부	75
그림 III-12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76
그림 III-13 소득격차 해소에서의 정부책임	77
그림 III-1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부지출 요구	78
그림 III-15 가장 도움되는 정책(1순위)	79
그림 III-16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1순위+2순위)	79
그림 III-17 누진세에 대한 의견	80
그림 III-18 세금부담 의지	81

그림 차례

그림 III-19 복지국가 지향	82
그림 III-20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태도	83
그림 III-21 북한의 불평등수준	84
그림 III-22 북한에서 복지수혜 정도	85
그림 III-23 북한이탈주민의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86
그림 III-24 북한 주민에게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험제도(1순위)	87
그림 III-25 북한 주민에게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험제도 (1순위+2순위)	87
그림 III-26 복지비용 조달	88
그림 III-27 통일 이후 복지수준	89
그림 IV-1 의무적 시민성: 투표 참여	94
그림 IV-2 의무적 시민성: 납세의무 준수	95
그림 IV-3 의무적 시민성: 법과 규칙 준수	96
그림 IV-4 자율적 시민성: 정부 일에 관심	97
그림 IV-5 자율적 시민성: 사회·정치단체 활동	98
그림 IV-6 자율적 시민성: 다른 생각의 타인 이해	99
그림 IV-7 자율적 시민성: 윤리적 소비	100
그림 IV-8 자율적 시민성: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	101
그림 VI-1 연구모형	165
그림 VI-2 통일방식에 대한 의식 평균값	190

요 약

통일 후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통합 양상에 대한 이해는 통일 후 북한 주민의 통합 양상을 예측하는 데 주효하다. 이러한 예측은 북한 주민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통합되는 과정에 발생할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수혜와 같은 정책적 혜택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자동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그들이 민주사회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괴리가 있는 정책을 가지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착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전제가 되는 남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에 통일연구원에서는 2015년에 『신통일대계 연구』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어 2016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치태도와 불평등 의식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의식, 경제 및 불평등 의식, 그리고 정치의식 및 정당일체감을 심층 분석하였다. 2017년에는 2016년 조사에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을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 분야로 나누어 살펴

요 약

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설문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과제의 세 가지 중점 연구사항을 반영한 설문 문항은 교육 인식 및 실태 의식 27문항, 복지 인식 및 실태 19문항,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 의식 및 정치의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계층인식 문항(정치신분, 경제계층), 탈북 동기, 사회경제학적 사항(직업, 소득, 학력),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 등 총 80문항이 조사되었다.

학교 교육은 세대를 거듭해 특정 사회가 지향하고 발전시켜 온 지식, 가치, 문화 및 철학을 전달하는 핵심이다. 동시에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를 배우는 곳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이들의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교육통합 방식 및 교육통합 관련 정책 쟁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연령, 교육 수준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한 조사결과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연령, 성별, 남한과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에 따른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 교육통합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교육 통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고, 북한 교육보다 남한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남한 교육의 특징 중 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사

요 약

교육을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교육통합에 있어, 남한 중심의 통합보다는 남북한 교육의 장단점을 고려한 절충적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교육통합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새로운 제도, 정책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어려움과 교육내용 차이로 인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의 부담을 꼽았다. 셋째, 남북한 교육통합정책과 관련하여 북한 학생이 남한 학교 입학 시 우대혜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 간 교육 이동이 본격화되는 경우 남한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배분과 선발기준을 둘러싸고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과반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의 적용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남북한 학생들의 이동 허용 문제에 있어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기간 내의 급격한 교육통합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주도로 통일이 되는 경우 북한 교사를 재임용하는 데 있어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교사에 대해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경우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적인 교육통합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과 교사·학생들이 받아온 기존 교육에 대한 존중과 관련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일 후 사회보장성 지출, 즉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독일 통일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정치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책수용성 파악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에 대한 주요한 예측지표를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요 약

대한 실태와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중 가구원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49%(145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의료보험가입자보다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평등한 사회가 되고 복지는 사람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의식은 북한 체험의 영향으로 시혜적 복지 의식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복지의 주체를 국가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즉, 국가를 복지 제공의 주체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식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고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서 찾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식이 강했다.

셋째,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정책,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에 대한 요구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연령과 남한에서 학력이 복지의식과 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데 비해 북한에서 학력은 복지의식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 지식인이 국가실패 요인을 사회주의 정책에서 찾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후 복지의식은 저부담 고수준 복지 태도로 조사되었다. 즉 '통일비용 부담은 남한'이 복지수준은 '남한과 같게'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비용을 북한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국 연한이 최근일수록

요 약

복지를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민의 역할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은 미시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 시민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의무적 시민성과 자율적 시민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먼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두 가지 시민성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은 의무적 시민성을 보였다. 20대와 40대는 30대보다 낮지만 비슷한 수준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30대 그리고 40대가 각각 50대의 의무적 시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로,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받지 않은 경우보다 종합적으로 의무적 시민성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전통적인 시민의 의무와 관련한 시민성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한에서의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거주기간의 경우 거주기간이 가장 긴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1년~5년 그리고 11년~15년인 집단이 유사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의무적 시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1년~5년 집단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의무, 특히 납세나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

요 약

이탈주민이 그보다 짧은 6년~10년 동안 거주한 북한이탈주민보다 낮은 의무적 시민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기간이 11년에서 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 규범에 대해 실망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시기가 남한 사회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시민상이라는 믿음이 낮아지는 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이 되면서 시민성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주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남한 사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복지정책, 교육정책, 시민성

Abstract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on Education, Welfare, and Civil Rights

Min, Tae-Un et al.

The 2017 『New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explores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s of South Korean society in three areas through survey analysis: 1) education; 2) welfare; and 3) civil rights. Specifically, this research analyzes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s on South Korean education, the current status of welfare, the welfare system, and qualities of democratic citizens or citizens.

Chapter II analyzes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s of education in a comprehensive manner. This research delves into North Korean defectors' views on both South and North Korean education. It also examines their attitudes towards South and North Korean education integration and related policies. Such perceptions are analyzed in detail in terms of social adaptation variables, including age, gender, education in North Korea, period of stay in South Korean, and socioeconomic status in South Korea.

Chapter III examines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s of and their level of expectations for welfare. There is growing concern regarding welfare spending after unification.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type of welfare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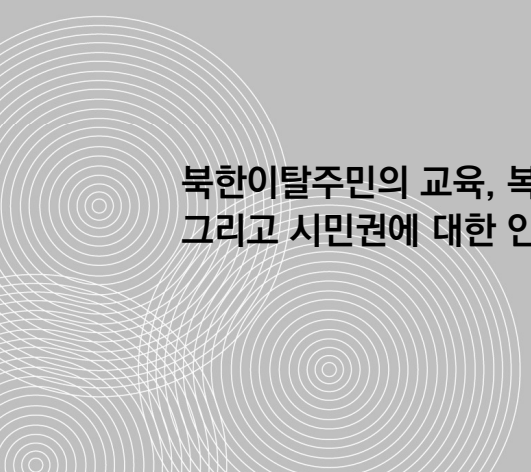
polices North Korean residents would need. North Korean defectors serve as a key predictor. Their demands in this regard for welfare and their level of expectation thereof should be analyzed first. In specific, how North Korean residents perceive welfare system will be analyzed, as well as their attitude changes over welfare policy. In addition, possibility of operating temporal separate government, and welfare expectancy of North Korean residents will be examined. Thus, attitudes on welfare of North Korean residents will be indirectly identified through the len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Lastly, Chapter IV analyze how North Korean defectors understand qualities of democratic citizens. In order to function, it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understand their desirable roles and internalize them. This research, therefore, contemplates a way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to become desirable citizens of a democratic society by delving into how they understand democratic citizenship.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 Social Integration, Welfare policy, Education policy, Citizenship

I.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1. 연구목적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회구성원의 통합은 통일의 원동력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통일역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정치체제 및 제도가 통합되는 방식과 대북정책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다. 이러한 통일 후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양상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통합 양상에 대한 이해는 통일 후 북한 주민의 통합 양상을 예측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측은 북한 주민을 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통합되는 양상을 예측하고 발생할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미리 온 통일’ 혹은 ‘통일의 역군’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 국민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주거할 집, 일자리,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수혜와 같은 정책적 혜택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자동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그들이 민주사회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

주민의 인식과 괴리가 있는 정책을 가지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착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전제가 되는 남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제도 및 정책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취업, 복지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정착도우미 제도, 취업보호와 신변보호를 위해 보호담당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소비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이러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부족하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통합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정책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남한제도 전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 사실 지원정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과 기대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운영원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개별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의 적응과 통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제도와 운영원리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는 통일 후 북한주민과 통합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기대와 경험을 예측할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고용이나 생활수준을 조사하는 한국 사회 적응실태 조사 성격이 강했다. 그 결과 전혀 다른 정치 및 경제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러한 이해는 향후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의 통합 과정에서 생길 혼란과 통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통일연구원은 2015년에 『신통일대계 연구』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2016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치 태도와 불평등의식을 심층 분석·연구하였다. 2017년에는 2016년 조사에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을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성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남한의 교육, 남한의 복지실태 및 복지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의 자질 혹은 시민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분석한다.

먼저 II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은 사회화(socialization)를 통해 세대를 거듭해 전달된다. 그리고 학교는 그러한 사회화가 일어나는 핵심 장소이다. 즉 학교 교육은 세대를 거듭해 특정 사회가 지향하고 발전시켜 온 지식, 가치, 문화 및 철학을 전달하는 핵심이다. 동시에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를 배우는 곳이다. 이에 II장에서는 교육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의 교육관, 남한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적응실태를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을 연령, 성별, 북한 교육수준, 그리고 남한 사회 거주기간, 남한 학력, 남한 계층 등의 사회적응변수에 따라 심층 분석 한다.

III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대 수준을 조사한다. 통일 후 사회보장성 지출, 즉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독일 통일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정치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책수용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복지 요구와 기대 수준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현실점에서 파악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주요한 예측지표를 제공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복지 요구와 기대 수준의 예측에 주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을 재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일 후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한다. 더불어 최근 많이 논의되는 통일비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의 복지 가치관과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와 변화를 조사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통일 시 남북 일시적 분리운영의 가능성과 북한 주민의 복지기대 수준을 살펴본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 주민의 복지경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바람직한 시민의 역할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 시민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으로 적응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성을 의무적 시민성과 자율적 시민성으로 나누어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사회적응에 주요 변수인 연령, 교육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분석한다.

2. 조사방법

가. 조사내용

본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첫째, 2016년에 이어 정치·경제제도 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이해와 수용을 예측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둘째, 사회의식, 경제 및 불평등 의식 그리고 정치의식 및 정당일체감을 심층 분석한 2016년 조사에 이어 2017년에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제도 적응 및 수용
-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제도 인식
-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시민자질에 대한 인식

셋째, 남북한 주민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항목을 다수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중점 연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인식 및 실태 의식 27 문항, 복지 인식 및 실태 19문항,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 의식 및 정치의식 13문항을 설문문항에 포함하였다. 이 밖에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계층 인식 문항(정치신분, 경제계층), 탈북 동기, 사회경제학적 사항(직업, 소득, 학력),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 등 총 80문항이 조사되었다.

나. 조사설계

(1) 표집안

본 연구는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더불어 통일 시 북한 주민들의 태도를 추론하려는 연구이므로 특정한 조사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응답자를 모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했다. 이 중 297명이 유효 응답자로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시기는 입국자 통계와 비슷한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2)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1:1 개별 면접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 4명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을 사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문조사원을 채용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조사원들이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1-1 조사대상 지역 책임자

지역	조사원	조사 인원
서울 강동구	서재명	56명
서울 방화동	문영순	56명
서울 노원구	전경희	56명
서울 양천구, 광진구	조현정	56명
인천	김성남	56명
기타	현인애	20명

출처: 필자 작성

표 1-2 입국 현황(2017년 9월말 현재 거주자 기준)

(단위: 명)

항목	계	성별	
		남	여
입국(년)			
~1998	947	831	116(12)
~2001	1,043	565	478(46)
2002	1,142	510	632(55)
2003	1,285	474	811(63)
2004	1,898	626	1,272(67)
2005	1,384	424	960(69)
2006	2,028	515	1,513(75)
2007	2,554	573	1,981(78)
2008	2,803	608	2,195(78)
2009	2,914	662	2,252(77)
2010	2,402	591	1,811(75)
2011	2,706	795	1,911(71)
2012	1,502	404	1,098(73)
2013	1,514	369	1,145(76)
2014	1,397	305	1,092(78)
2015	1,275	251	1,024(80)
2016	1,418	302	1,116(79)
2017	593	86	507(85)
계	30,805	8,891	21,914(71)

출처: 필자 작성

표 1-3 지역별 거주 현황(2017년 6월말 현재 거주자 기준)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310	2,178	770	283	239	241	154	217	301
여	4,670	6,399	1,932	743	827	804	548	922	1,045
합계	6,980	8,577	2,702	1,026	1,066	1,045	702	1,139	1,346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44	177	156	146	123	161	68	7,668	
여	456	532	455	476	410	372	214	20,805	
합계	600	709	611	622	533	533	282	28,473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표 I-4 연령별 분포(2017년 6월말 현재 기준)

(단위: 명)

구분(세)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계
남	632	1,587	2,434	2,048	1,309	501	328	8,839
여	623	1,940	6,208	6,764	3,897	1,182	927	21,541
합계	1,255	3,527	8,642	8,812	5,206	1,683	1,255	30,380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2017년 『북한이탈주민 의식 조사』는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된 300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유효 응답자 297명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I-5>와 같다.

표 I-5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징

(단위: 명)

		사례수	%
전체		297	100
성별	남성	87	29.3
	여성	200	67.3
	무응답	10	3.4
연령대	20대**	64	21.5
	30대	66	22.2
	40대	82	27.6
	50대	48	16.2
	60대 이상	37	12.5
	남한체류 기간	5년 이하	79
	6년~10년 이하	100	33.7
	11년~15년이하	99	33.3
	16년 이상	19	6.40
탈북 후 해외체류 기간	1년 이하	156	52.5
	2년	17	5.7
	3년	24	8.1
	4년	17	5.7
	5년	14	4.7
	6년 이상	69	23.3

		사례수	%
학력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	인민학교 졸업	28	9.4
	전문학교 졸업	46	15.5
	대학교 졸업 이상	36	12.1
	고등중학교 졸업	169	56.9
	대학교 중퇴	13	4.4
	학교 다닌적 없음	5	1.7
당원 여부	당원이다	36	12.1
	당원이 아니다	260	87.5
	무응답	1	0.3
탈북이유	신변의 위협	54	18.2
	경제적 이유	87	29.3
	가족 상봉	39	13.1
	삶의 기회 추구	107	36
	기타	8	2.7
	무응답	2	0.7
남한연계 여부	연계가 있었다	63	21.2
	연계가 없었다	26	8.8
북한정치 계층	무연고	208	70
	최상층	6	2
	상층	24	8.1
	중상층	81	27.3
	중하	76	25.6
	하층	63	21.2
	최하층	47	15.8
북한경제 계층	최상층	2	0.7
	상층	13	4.4
	중상층	108	36.4
	중하층	82	27.6
	하층	54	18.2
	최하층	38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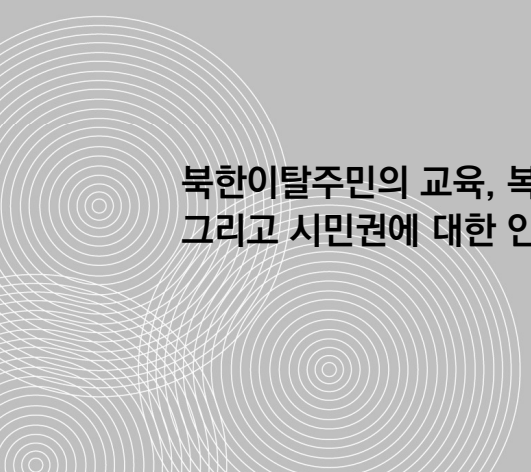
		사례수	%
남한 계층	최상층	1	0.3
	상층	3	1
	중상층	27	9.1
	중하층	88	29.6
	하층	121	40.7
	최하층	57	19.2
정치성향	진보	67	23
	중도	127	42.8
	보수	100	33.2
	무응답	3	1

**19세 1명 포함

출처: 필자 작성

II. 기초 통계(1): 교육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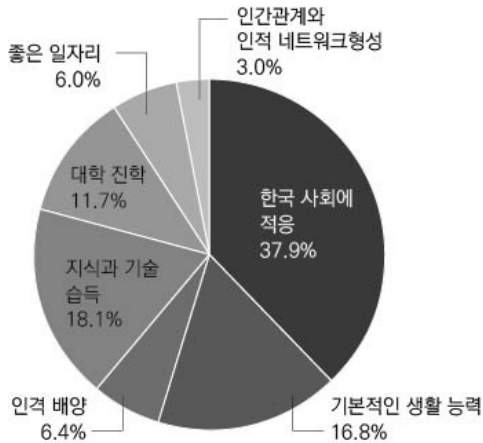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2017 북한이탈주민 종합의식 조사」에서는 총 27개 문항을 사용하여 남북한 교육 및 교육통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은 세부적으로 교육에 대한 기대 및 학교관을 묻는 3개 문항, 남한 교육 경험 및 교육 적응을 묻는 6개 문항, 남한 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6개 문항, 북한 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3개 문항,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을 묻는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관 관련 문항은 교육의 결과로 기대하는 것, 학교에 대한 인식, 학교 교육 기대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자녀 혹은 본인이 남한 초중등학교에서 취학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남한 초중등학교 교육 적응 실태 관련 문항을 통해 남한 학교 교육 경험 여부, 교육 적응 시 어려움, 학교 교과학습의 어려움,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남북한 간 학교 교육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등을 알아보았다. 남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인식 관련 문항은 남한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평가, 남한 교육 기회 평등성에 대한 평가, 남한에서 교육과 사회적 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 사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 남한 교육의 문제점, 남한 교육의 장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인식 관련 문항은 북한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평가, 북한 교육의 문제점, 북한 교육의 장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인식 관련 문항은 교육통합 진행 방식, 교육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 주민의 어려움, 교육통합 준비를 위한 남한의 과제, 교육통합 시 교육 선호 지역, 교육통합 시 남한 출신 교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예상 반응, 통일 이후 북한 학생의 남한 대학 입학 시 혜택 제공에 대한 생각, 교육통합 시 북한 지역의 과도기 설정에 대한 생각, 급격한 통일 시 교육적 이동 제한에 대한 생각, 남한 주도 통일 시 북한 교사 고용정책 등으로 구성하였다.

1. 교육에 대한 기대 및 학교관

교육에 대한 기대 및 학교관에 대해서는 총 3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37.9%가 남한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을 꼽아, 이들이 교육을 사회적응의 중요한 기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이외에도 ‘지식과 기술 습득’(18.1%), ‘기본적인 생활능력’(16.8%), ‘대학 진학’(11.7%) 등을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의 주요 기대 효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식과 기술 습득’(17.6%), ‘기본적인 생활능력’(10.4%), ‘대학 진학’(9.0%)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구직을 가장 주된 교육의 목적은 아니지만 교육의 중요한 기대효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I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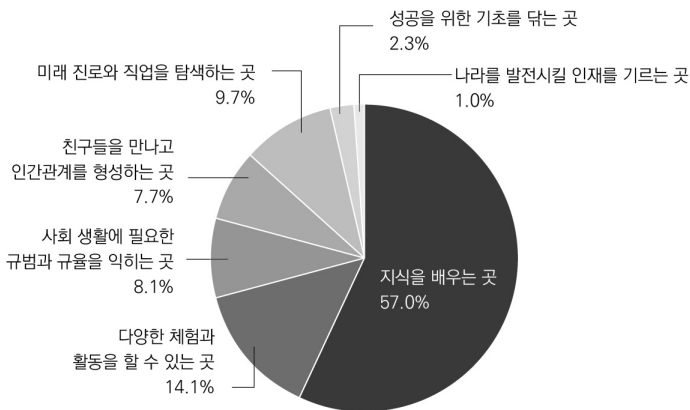
그림 II-1 교육의 기대 효과(1순위)



출처: 필자작성

학교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7.0%의 응답자가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고 대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식 습득을 가장 중요한 학교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다양한 체험과 활동’(14.1%)이었으며, ‘미래 진로와 직업탐색’(9.7%),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규율 익힘’(8.1%), ‘친구들을 만나고 인간관계 형성’(7.7%)이 그 다음으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성공을 위한 기초 형성’, ‘국가 발전 인재 양성’이라는 응답은 각각 2.3%, 1.0%에 그쳤다. 2순위 응답의 응답률을 보면, ‘미래 진로와 직업 탐색’이 33.0%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들을 만나고 인간관계 형성’(19.7%), ‘국가 발전 인재 양성’(16.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¹⁾ 학교관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II-2〉 참조)

그림 II-2 학교관(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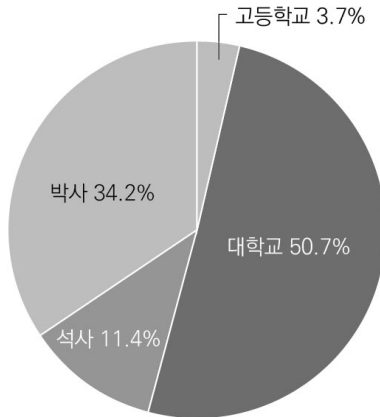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¹⁾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9년 첫 번째로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간헐적으로 이를 실시해오다가 2010년부터는 매년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본 조사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 및 학교관을 남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 및 학교관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교육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성인들의 교육에 관한 주요 문제나 정책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고 있는데, 조사 내용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 교육의 질, 교사, 교육과정

다음으로, 자녀(또는 본인)의 개인적인 교육 기대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0.7%)의 응답자가 ‘대학교까지 교육을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고등학교까지 교육 받겠다’는 응답자는 3.7%에 불과한 반면, 대학교 50.7%, 석사 11.4%, 박사 34.2%로 교육 기대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성별, 연령은 물론이고 남한과 북한에서의 학력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대수준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림 II-3> 참조)

그림 II-3 교육 기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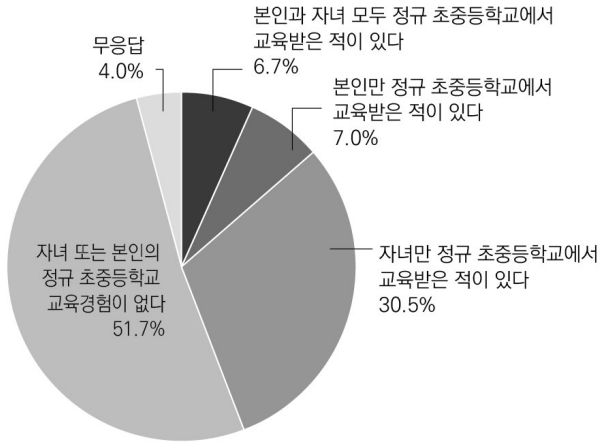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운영, 학생 생활, 고교 정책 및 대입,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 교육관 등 9개 영역에서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에 실시했던 ‘교육여론조사’에서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묻는 항목이 포함되었지만, 선택지 항목의 구성이 다르다. 그 조사에서 남한 주민들은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인재를 기른다’(20.3%), ‘좋은 경험을 통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한다’(14.1%), ‘성공 또는 출세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준다’(11.3%), ‘쓸모 있는 시민으로 길러낸다’(11.3%), ‘앞날의 사회를 맡을 후진을 기른다’(10.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균상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8)』(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8), p. 176.

2. 남한 교육 적응 실태

남한 사회에서의 학교 적응 실태에 관해서는 총 6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남한의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30.5%의 응답자가 ‘자녀들만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각각 7.0%, 6.7%의 응답자들이 ‘본인만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 ‘본인과 자녀 모두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자녀 또는 본인의 남한 정규 초중등학교 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51.7%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이하의 남한 교육 적응 실태에 관한 5개 문항은 총 297명 중 자녀 또는 본인이 남한의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132명에 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그림 II-4> 참조)

그림 II-4 남한에서 정규 초중등학교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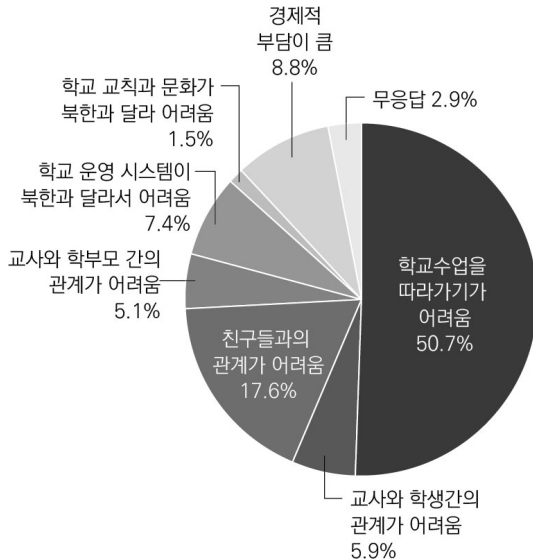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자녀 또는 본인이 남한의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학교 적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문의한 결과, 과반수 정도인 50.7%의 응답자가 ‘학교수업 따라가기’라고 응

답하였다. ‘친구들과 관계’를 꼽은 응답자가 17.6%로 두 번째로 많았고, ‘경제적 부담’, ‘학교 운영 시스템 차이’, ‘교사와 학생 관계’, ‘교사와 학부모 관계’라는 응답자는 각각 8.8%, 7.4%, 5.9%, 5.1%로 나타났다. ‘교칙과 문화 차이’라는 응답은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칙과 문화 차이’라는 응답도 2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어 ‘친구들과의 관계’(12.0%)와 ‘학교 운영 시스템 차이’(12.0%), ‘교사와 학부모 관계’(8.8%), ‘교사와 학생 관계’(7.2%), ‘학교수업 따라가기’(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정규 초중등학교 적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는 학업이지만, 이 이외에도 친구관계, 교사-학생 관계, 교칙과 문화 차이 등의 측면에서도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학부모 입장에서도 경제적 부담과 교사-학부모 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그림 II-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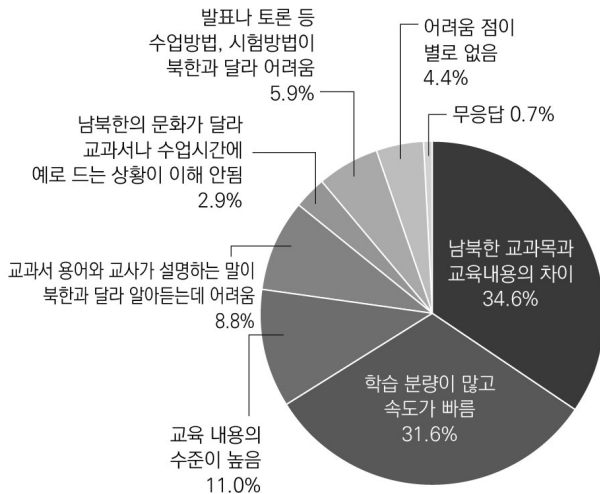
그림 II-5 남한 학교 적응의 어려움(1순위)



출처: 필자 작성

그 다음으로 학교 적응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 인지를 영역별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먼저, ‘교과 학습에서 가장 어려웠 던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어려웠던 요인으로 34.6%의 응답자가 ‘남북한 교과목과 교육내용의 차이’를, 31.6%가 ‘학습 분량이 많고 속도가 빠름’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육 내용의 수준이 높음’(11.0%), ‘교과서 용어와 교사가 설명하는 말이 북한과 다름’(8.8%) 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점으로는 ‘남북한 교과 목과 교육내용의 차이’(26.6%), ‘교육 내용의 수준이 높음’(21.1%), ‘수업 방법, 시험방법의 차이’(19.3%), ‘학습 분량이 많고 속도가 빠름’(16.5%), ‘남북한 문화차이로 수업 중에 예로 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음’(15.6%) 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수업 적응 측면에서 남북한 교과 목과 교육 내용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 이외 에도 남북한 간 교육 내용, 방법, 학습 난이도,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차이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 II-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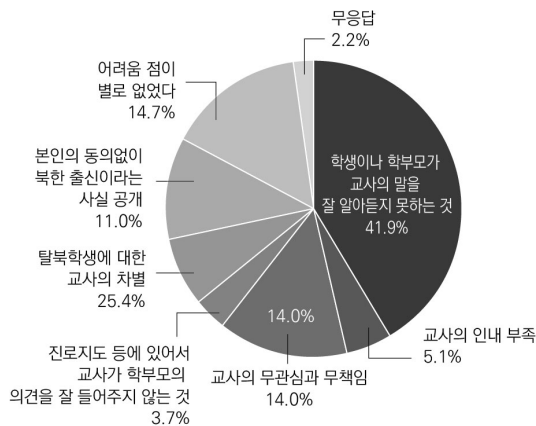
그림 II-6 교과 학습의 어려움(1순위)



출처: 필자 작성

학교 적응 시 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1.9%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여, 언어 차이가 학생-교사 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이외에 ‘탈북학생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과 무책임’(14.0%), ‘본인 동의 없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공개’(11.0%)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어려운 점이 별로 없었다’는 응답도 14.7%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어려운 점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공개’가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탈북학생에 대한 차별’도 2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이외에 ‘탈북학생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과 무책임’(15.5%), ‘진로지도 등에 있어 교사가 학부모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12.7%),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인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는 것’(11.3%)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 이외에도 탈북학생에 대한 차별, 교사의 무관심, 인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적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II-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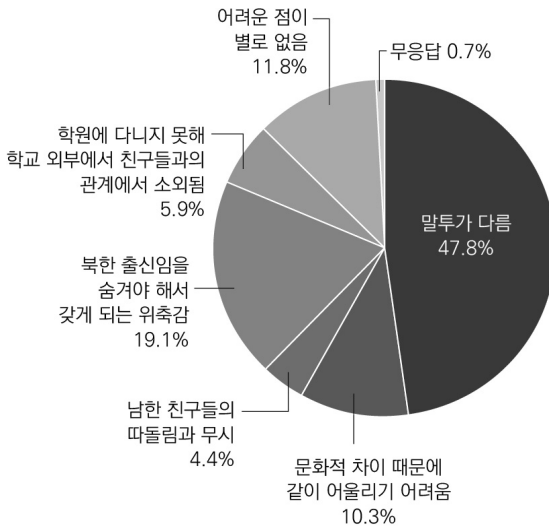
그림 II-7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1순위)



출처: 필자 작성

학교 적응 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7.8%가 ‘말투가 다름’이라고 응답하여, 교사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어 차이가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북한 출신임을 숨겨야 해서 갖게 되는 위축감’(19.1%),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같이 어울리기 어려움’(10.3%)이라는 응답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한편 ‘어려운 점이 별로 없었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북한 출신임을 숨겨야 해서 갖게 되는 위축감’이 37.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적 차이’(24.4%), ‘학원에 다니지 못해 학교 외부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20.9%), ‘남한 친구들의 따돌림과 무시’(11.6%)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차이 못지않게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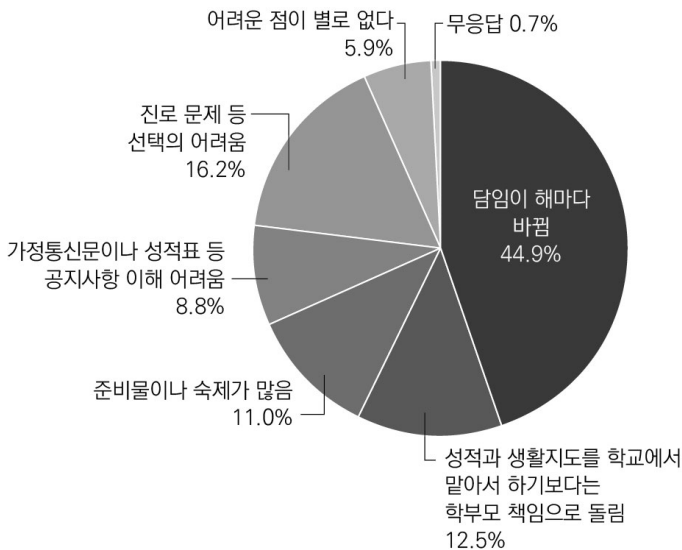
그림 II-8 교우 관계의 어려움(1순위)



출처: 필자 작성

학교 적응 시 남북한 학교 교육의 차이로 인한 가장 큰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44.9%가 ‘답임이 해마다 바뀜’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진로 문제 등 선택의 어려움’(16.2%), ‘성적과 생활지도를 학교에서 맡아서 하기 보다는 학부모 책임으로 돌림’(12.5%), ‘준비물과 숙제가 많음’(11.0%), ‘가정통신문, 성적표 등 공지사항 이해 어려움’(8.8%)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점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진로 문제 등 선택의 어려움’이 57.5%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가정통신문, 성적표 등 공지사항 이해 어려움’, ‘준비물과 숙제가 많음’, ‘성적과 생활지도를 학교에서 맡아서 하기보다는 학부모 책임으로 돌림’이 각각 16.1%, 13.8%, 11.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남북한 학교 교육 시스템의 차이와 관련하여 진로 문제 등 선택의 어려움과 답임교사가 매년 바뀌는 문제가 북한이탈주민들의 학교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그림 II-9> 참조)

그림 II-9 남북한 학교 교육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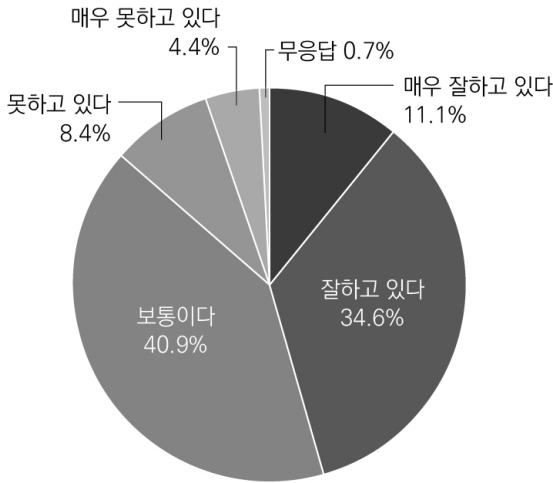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3. 남한 교육에 대한 평가

남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총 6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5점 척도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선택지 중 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잘하고 있다’ 11.1%, ‘잘하고 있다’ 34.6%, ‘보통이다’ 40.9%, ‘못하고 있다’ 8.4%, ‘매우 못하고 있다’ 4.4%로 나타났다. ‘매우 잘하고 있다’를 5점, ‘잘하고 있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못하고 있다’를 2점, ‘매우 못하고 있다’를 1점으로 환산하여 무응답자를 제외한 평균을 계산하면, 3.4점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남한의 교육에 대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다’는 정도의 평가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II-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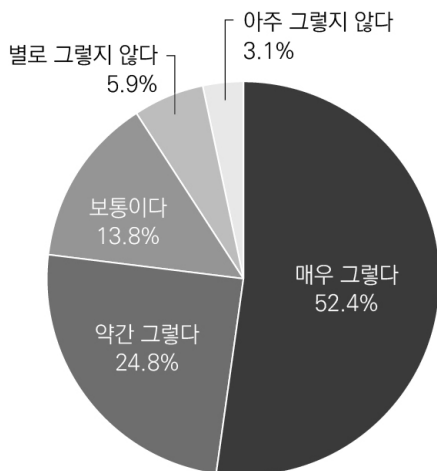
그림 II-10 현재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출처: 필자 작성

다음으로, ‘한국은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매우 그렇다’ 52.4%, ‘약간 그렇다’ 24.8%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3.8%였고, ‘별로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각각 5.9%, 3.1%에 그쳤다. 이를 ‘매우 그렇다’ 5점, ‘아주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 척도 점수로 변환하여 평균을 계산하면 4.17점으로 ‘약간 그렇다’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교육의 기회 평등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다 후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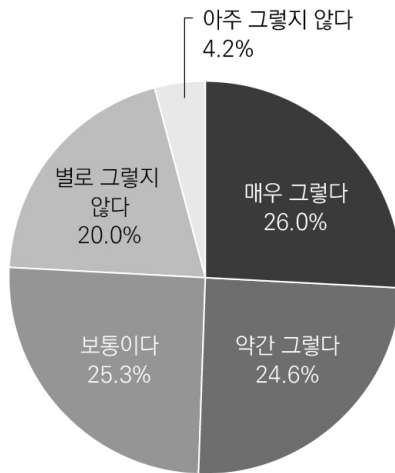
그림 II-11 교육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



출처: 필자 작성

교육과 사회적 성취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으로 ‘한국은 교육을 잘 받으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인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26.0%, 24.6%, 25.3%, 20.0%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아주 그렇지 않다’는 응답만 4.2%로 낮게 나타났다. 5점 척도 환산 평균은 3.4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과 사회적 성취의 연관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견해는 다소 엇갈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II-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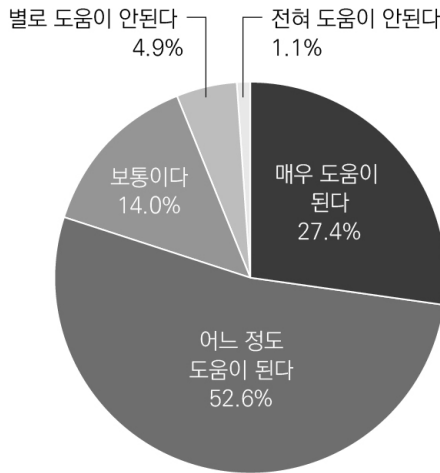
그림 II-12 교육과 사회적 성취와의 연관성



출처: 필자 작성

남북한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사교육의 비중이다. 남한의 경우 북한과 달리 사교육의 비중이 높다. 남한에서 학교 교육 이외에 사교육을 받는 것이 자녀 또는 본인의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도 27.4%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4.0%였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각각 4.9%, 1.1%에 불과하였다. 5점 척도 환산 평균은 4.00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수준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교육에서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II-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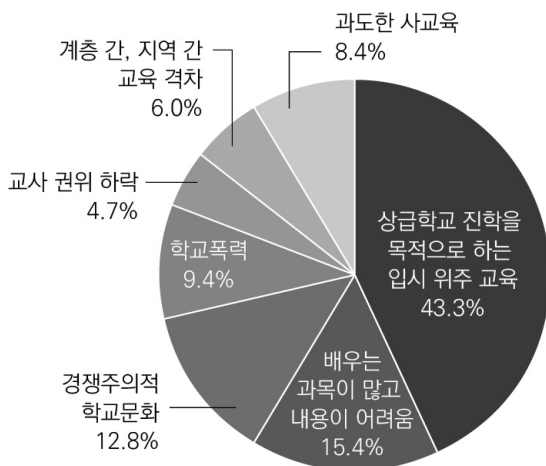
그림 II-13 사교육의 효과



출처: 필자 작성

다음으로, 남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43.3%가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입시 위주 교육’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이외에 ‘배우는 과목이 많고 내용이 어려움’(15.4%), ‘경쟁주의적 학교문화’(12.8%), ‘학교 폭력’(9.4%), ‘과도한 사교육’(8.4%),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6.0%), ‘교사 권위 하락’(4.7%)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사교육’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쟁주의적 학교문화’(19.2%),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13.3%)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입시 위주 교육, 과도한 사교육, 경쟁주의적 학교문화를 남한 교육의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II-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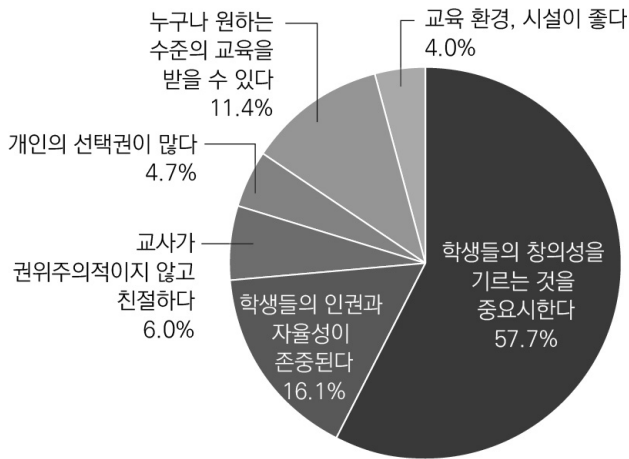
그림 II-14 남한 교육의 문제점(1순위)



출처: 필자 작성

‘남한 교육 중 남북한 교육통합 이후 꼭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장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남한 교육의 장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과반수를 넘는 57.7%의 응답자가 ‘창의성 중시’를 남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 16.1%가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 중시’, 11.4%가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꼽았다. 두 번째 장점으로 각각 33.9%의 응답자들이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과 ‘교육 환경, 시설이 좋음’을 꼽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과 평등한 교육 기회, 양호한 교육 환경 등을 남한 교육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II-15〉 참조)

그림 II-15 남한 교육의 장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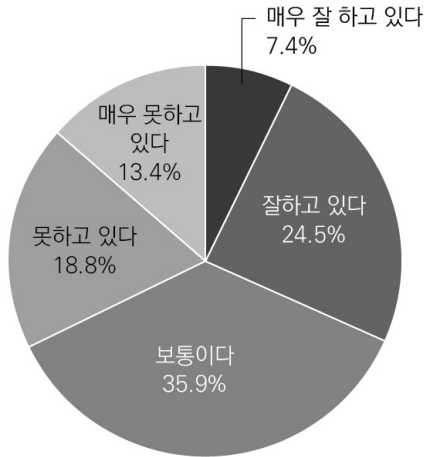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4.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총 3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북한의 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5점 척도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선택지 중 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는 ‘보통이다’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잘하고 있다’ 7.4%, ‘잘하고 있다’ 24.5%, ‘못하고 있다’ 18.8%, ‘매우 못하고 있다’ 13.4%로, 부정적인 평가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변환 점수 평균은 2.7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남한 교육에 대한 평가점수 평균 3.4점과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교육에 비해 북한 교육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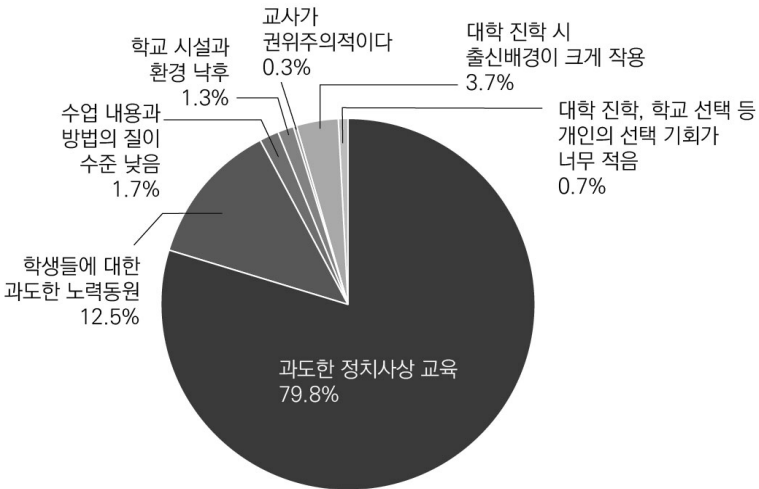
그림 II-16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출처: 필자 작성

다음으로 북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79.8%의 응답자가 ‘과도한 정치사상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12.5%의 응답자가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노력동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응답률은 4% 미만으로 높지 않았다. 북한 교육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노력동원’을 꼽은 응답자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진학 시 출신배경이 크게 작용’(16.4%), ‘세 부담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14.1%), ‘대학 진학 등 개인선택의 기회가 적음’(9.7%), ‘학교 시설과 환경 낙후’(6.7%), ‘수업 내용과 방법 수준 낮음’(6.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과도한 정치사상 교육을 북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노력동원과 대학 진학 시 출신 배경의 작용이나 경제적 부담 등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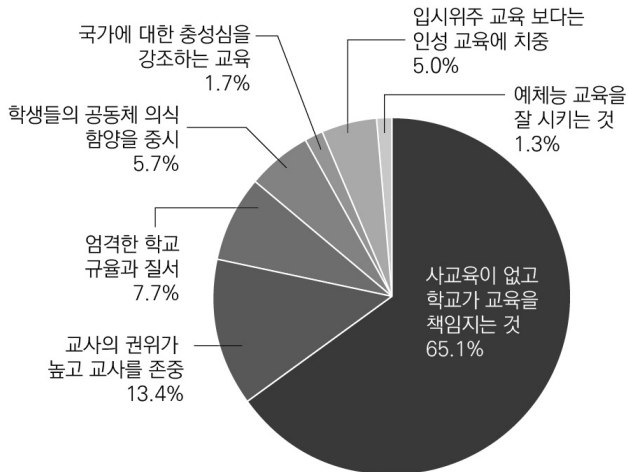
그림 II-17 북한 교육의 문제점(1순위)



출처: 필자 작성

‘북한 교육 중 남북한 교육통합 이후 꼭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장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북한 교육의 장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북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응답자의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65.1%가 ‘사교육이 없고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교사의 권위가 높고 교사를 존중’(13.4%), ‘엄격한 학교 규율과 질서’(7.7%),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중시’(5.7%), ‘입시교육보다 인성교육에 치중’(5.0%) 순으로 응답하였다. 두 번째 장점으로서는 응답자의 33.0%가 ‘입시교육보다 인성교육에 치중’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교육’(14.5%), ‘예체능 교육을 잘 시킴’(14.1%), ‘엄격한 학교 규율과 질서’(11.8%), ‘교사의 권위가 높고 교사를 존중’(11.4%),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중시’(11.4%)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교육의 장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임성과 인성교육, 교사의 권위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18> 참조)

그림 II-18 북한 교육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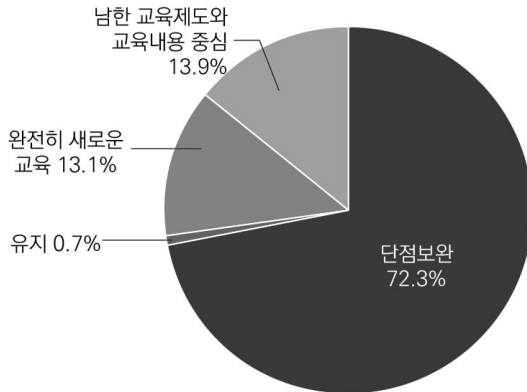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5.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

남북한 교육통합과 관련하여 교육통합의 방식과 과제 등 일반적인 사안과 함께 교육통합 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견해를 9개 문항을 통해 질문하였다. 먼저 통일 후 바람직한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72.3%가 ‘남북한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육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 쪽의 교육을 중심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장단점을 고려한 절충적 방안의 통합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외에 ‘남한의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 ‘완전히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내용 도입’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13.9%, 13.1%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의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0.7%로, 북한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소수에 그쳤다.(<그림 II-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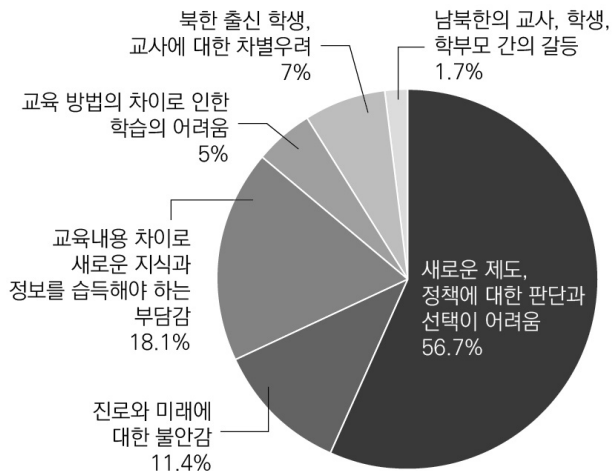
그림 II-19 통일 후 남북한 교육통합 방식



출처: 필자 작성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북한 지역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반수인 56.7%가 ‘새로운 제도, 정책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내용 차이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감’(18.1%),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11.4%) 순으로 응답하였다. 예상되는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남북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24.6%), ‘교육내용 차이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감’(23.6%), ‘교육 방법의 차이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22.2%), ‘북한 출신 학생, 교사에 대한 차별 우려’(17.2%),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10.1%) 등을 고루 꼽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교육통합으로 인해 새롭게 도입될 제도와 정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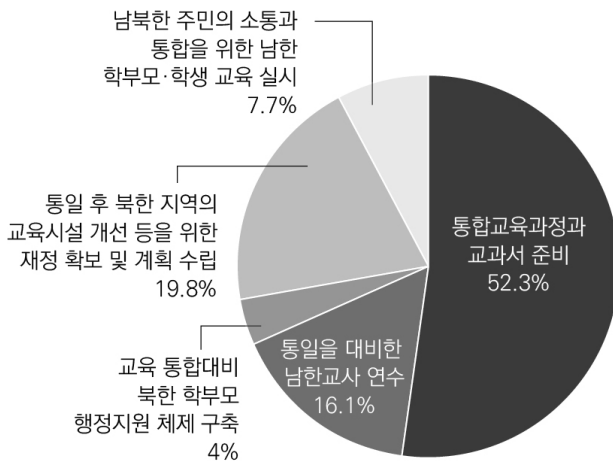
그림 II-20 남북한 교육통합 시 북한 지역 주민의 어려움(1순위)



출처: 필자 작성

남북한 교육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 이전에 남한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응답자의 절반인 52.3%가 ‘통합교육과정과 교과서 준비’를 꼽았다. 또한 19.8%의 응답자가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계획 수립’, 16.1%가 ‘통일을 대비한 남한 교사 연수’, 7.7%가 ‘남북한 주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남한 학부모, 학생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로 ‘남북한 주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남한 학부모·학생 교육 실시’(33.3%), ‘대북 교육지원을 통한 북한의 교육 환경 개선’(25.2%),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계획 수립’(19.7%), ‘통일을 대비한 남한 교사 연수’(15.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교육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남한의 과제로 통합교육과정 및 교과서 준비와 함께 재정 확보 및 계획 수립과 학부모·학생 교육, 교사 연수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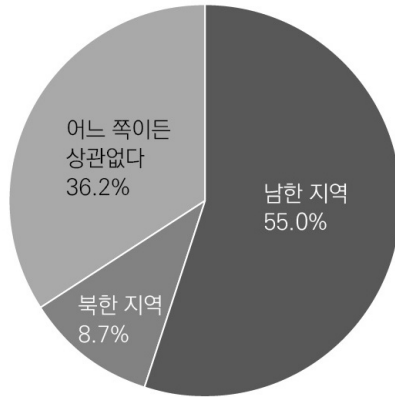
그림 II-21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남한의 사전 준비 과제(1순위)



출처: 필자 작성

통일 후 교육통합 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지역으로 55.0%의 응답자가 '남한 지역'을 선택하였고 36.2%의 응답자가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 지역'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될 경우 북한 지역 거주자 중 다수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남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그림 II-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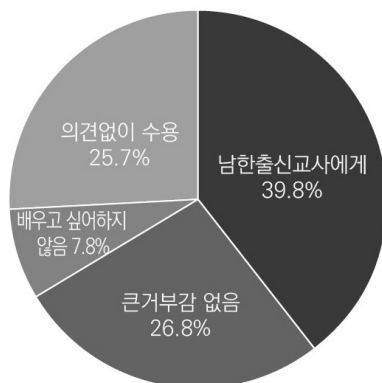
그림 II-22 남북한 교육통합 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지역



출처: 필자 작성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남한 출신 교사가 북한 학교에 파견되어 배치될 경우 북한 학부모(학생)들의 예상 반응에 대해서 ‘북한 출신 교사보다 남한 출신 교사에게 배우고 싶어 할 것’이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았고, ‘남한 출신 교사를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큰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과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수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6.8%, 25.7%로 나타났다. ‘문화, 사고방식,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 출신 교사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이들에게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이 결과를 통해,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파견되는 남한 교사는 북한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환영받거나 적어도 거부당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II-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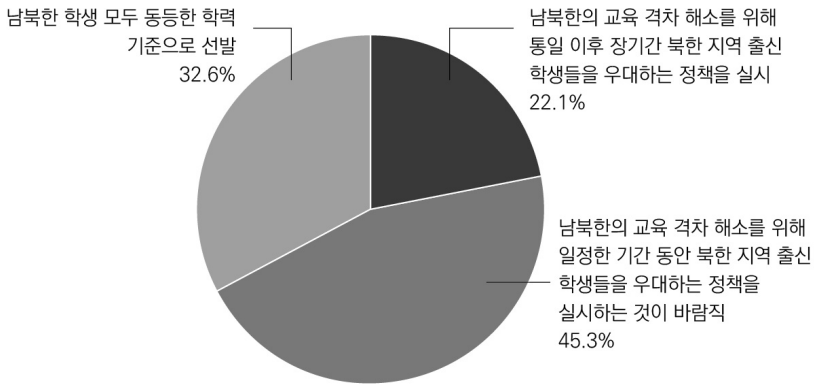
그림 II-23 남한출신 교사를 북한 학교 파견 시 북한 학부모(학생)의 예상 반응



출처: 필자 작성

마지막으로,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한 4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통일 이후 북한 학생이 남한 대학에 입학할 때 선발 우선권이나 인원 할당제 등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45.3%가 '남북한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북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22.1%는 '남북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장기간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32.6%의 응답자는 '남북한 학생 모두 동등한 학력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북한 출신 학생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그림 II-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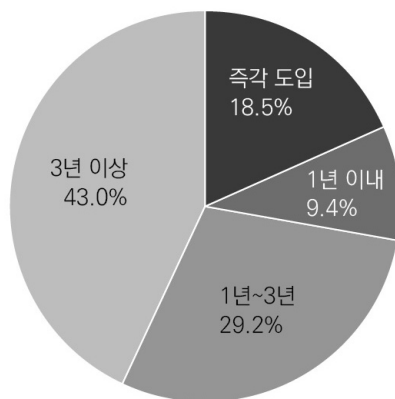
그림 II-24 통일 이후 북한 출신 학생이 남한 대학 입학 시 우대 정책 제공



출처: 필자 작성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북한 교육과정을 대폭 수정한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통합교육과정을 완전히 도입하는데 필요한 과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3년 이상'이 43.0%, '1년~3년'이 29.2%로 비교적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통합교육과정 도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즉각 도입'은 18.5%, '1년 이내'는 9.4%로 통합교육과정을 단기간에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교적 높지 않았다.(<그림 II-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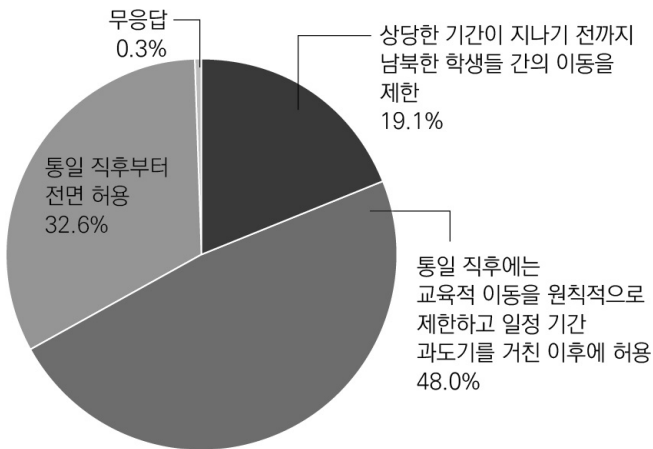
그림 II-25 새로운 통합교육과정 도입에 필요한 과도기



출처: 필자 작성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서 통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학생들이 상대편 지역으로 교육 목적의 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과반수에 가까운 48.0%가 '통일 직후에는 교육적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2.6%는 '통일 직후부터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남북한 학생들 간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19.1%였다. 이는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의 교육적 목적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지만, 통일 직후에는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이동을 제한하는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그림 II-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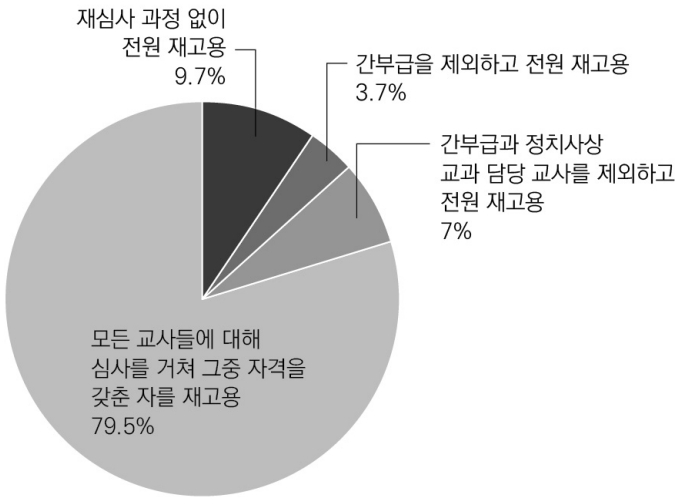
그림 II-26 남북한 학생들의 교육적 이동 제한 정책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마지막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교사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9.7%의 응답자는 ‘재심사 과정 없이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는 ‘간부급을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0%는 ‘정치사상 교과 담당 교사를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라고 응답하였다. ‘모든 교사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그중 자격을 갖춘 자를 재고용 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79.5%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조건 없는 전원 재임용이나 특정 대상을 배제한 전원 재임용보다는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 심사를 통한 재임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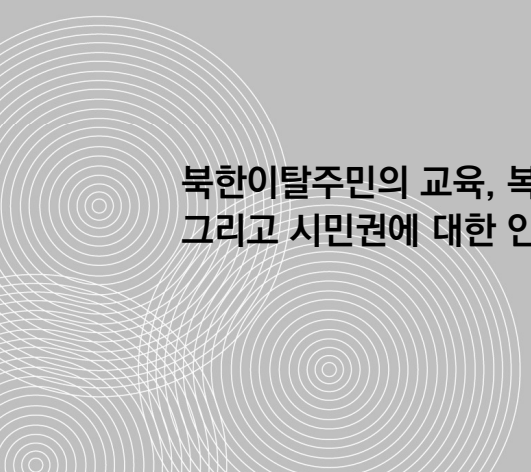
그림 II-27 남한 주도의 통일 시 북한 교사 재임용



출처: 필자 작성

Ⅲ. 기초통계(2):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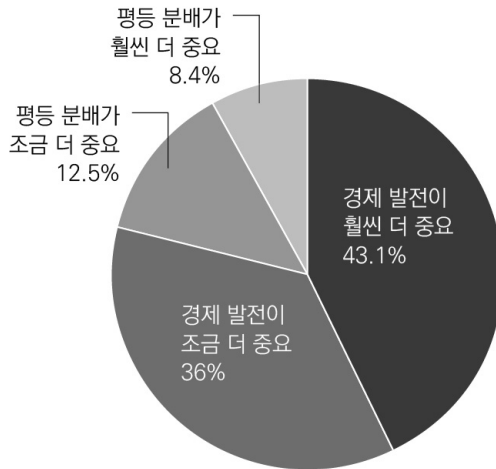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복지관련 조사문항은 19개다. 그 가운데서 14개 문항은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문항이고, 5개 문항은 통일과 관련한 복지문항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조사문항은 복지의식과 관련 7문항, 복지지출 관련 2문항, 복지부담 의식 관련 2문항, 복지이해 관련 3문항이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의식

가. 경제발전과 평등분배 중 우선순위에 관한 견해

경제발전과 평등분배 중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경제발전이 평등분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43.1%, ‘조금 더 중요하다’ 36%, 평등분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 8.4%, ‘조금 더 중요하다’ 12.5%로 나타났다.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대답이 79.1%로 나와 북한이탈주민은 경제발전과 평등분배 중 경제발전을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경제발전과 평등분배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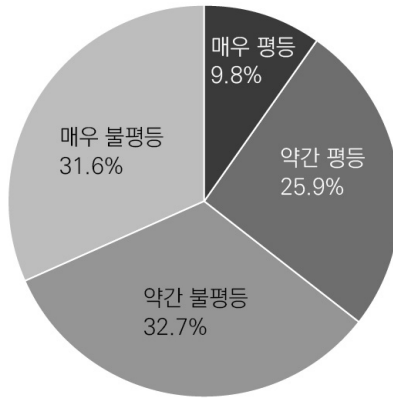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나. 남한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남한은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평등’ 9.8%, ‘약간 평등’ 25.9%, ‘약간 불평등’ 32.7%, ‘매우 불평등’ 31.6%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64.3%)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35.7%)보다 더 많았다.(〈그림 III-2〉 참조)

그림 III-2 남한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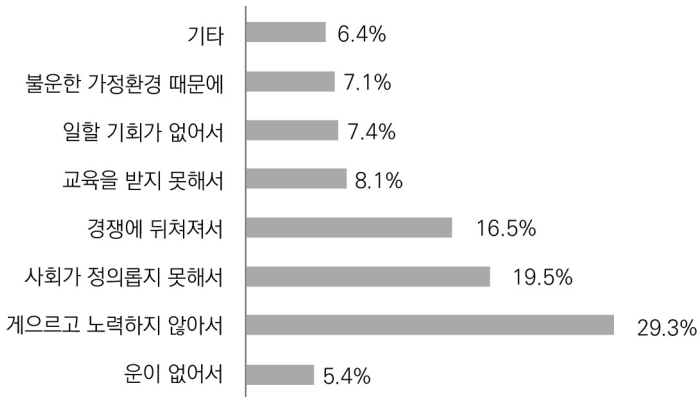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견해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운이 없어서’ 5.4%,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29.3%, ‘경쟁에 뒤처져서’ 16.5%,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19.5%, ‘교육을 받지 못해서’ 8.1%, ‘일할 기회가 없어서’ 7.4%,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7.1%, ‘기타’ 6.4%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운이 없어서’,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경쟁에 뒤처져서’ 같은 개인의 탓으로 보는 응답이 51.2%,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일할 기회가 없어서’,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는 비율이 42.2%로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는 비율보다 개인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그림 III-3〉 참조)

그림 III-3 빈곤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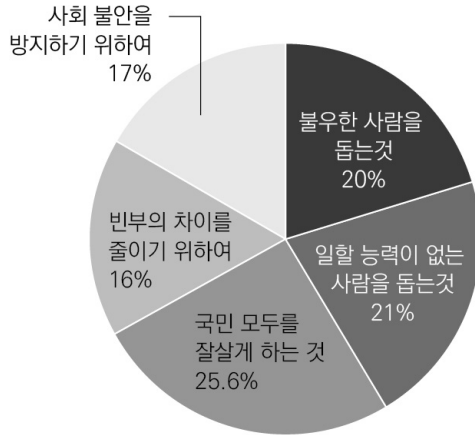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라. 사회복지 실시 목적

사회복지 실시 목적 조사결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 25.6%,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 20%,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 21%, ‘빈부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16%,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17%로 나타났다.(<그림 Ⅲ-4> 참조)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국민 모두를 잘 살게하기 위한 것보다는 불우한 사람을 돕고 소득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Ⅲ-4 사회복지 실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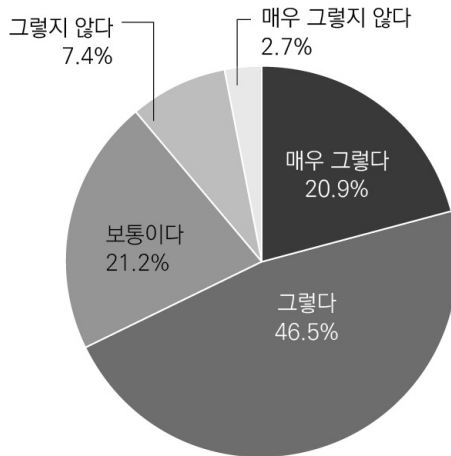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마. 복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1) 복지제도는 평등 기여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평등한 사회가 된다’에 대한 견해는 ‘매우 그렇다’ 20.9%, ‘그렇다’ 46.5%, ‘보통이다’ 21.2%, ‘그렇지 않다’ 7.4%, ‘매우 그렇지 않다’ 2.7%로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하는 비율이 67.4%로 과반수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5〉 참조)

그림 III-5 복지제도는 평등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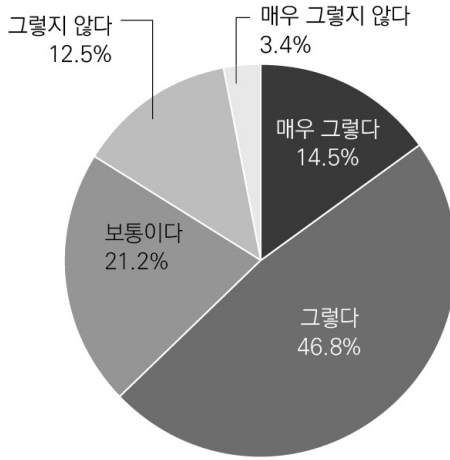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 사회복지혜택 수급권리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떳떳한 일이다’는 견해에서는 ‘매우 그렇다’ 14.5%, ‘그렇다’ 46.8%, ‘보통이다’ 21.2%, ‘그렇지 않다’ 12.5%, ‘매우 그렇지 않다’ 3.4%로 나타났다.(<그림 III-6> 참조)

그림 III-6 사회복지혜택 수급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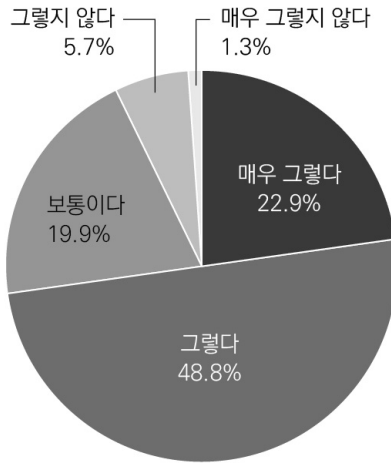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3) 복지제도의 상호부조 기여

‘복지는 사람들끼리 돕게 만든다’는 견해에서는 ‘매우 그렇다’ 22.9%, ‘그렇다’ 48.8%, ‘보통이다’ 19.9%, ‘그렇지 않다’ 5.7%, ‘매우 그렇지 않다’ 1.3%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했다.(<그림 Ⅲ-7> 참조)

그림 Ⅲ-7 복지제도의 상호부조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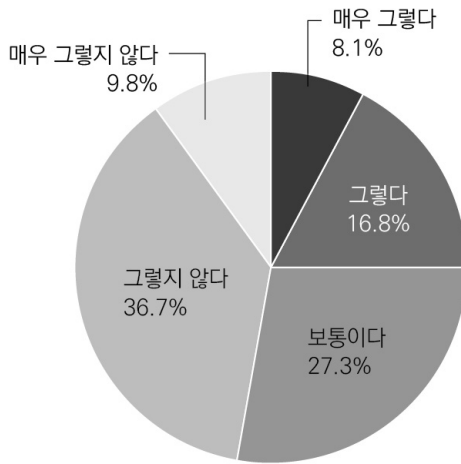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4) 사회복지 확대가 근로의욕 저하에 주는 영향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의욕이 저하 된다’는 견해에서는 ‘매우 그렇다’ 8.1%, ‘그렇다’ 16.8%, ‘보통이다’ 27.3%, ‘그렇지 않다’ 36.7%, ‘매우 그렇지 않다’ 9.8%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다.(〈그림 III-8〉 참조)

그림 III-8 사회복지 확대가 근로의욕 저하에 주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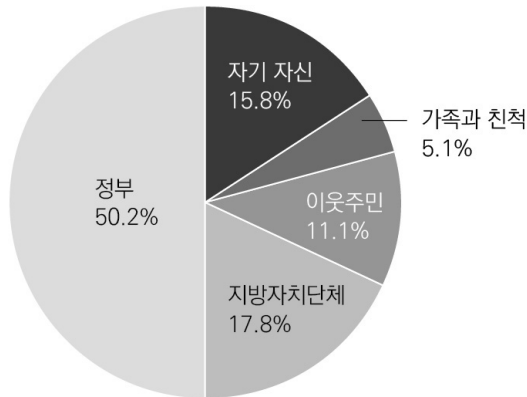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바.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복지를 책임질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2%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17.8%, ‘자기 자신’ 15.8%, ‘이웃주민’ 11.1%, ‘가족과 친척’ 5.1% 순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복지를 책임질 주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비율이 68%로 공공기관을 복지의 주체로 보는 비율이 사적인 대상으로 보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그림 III-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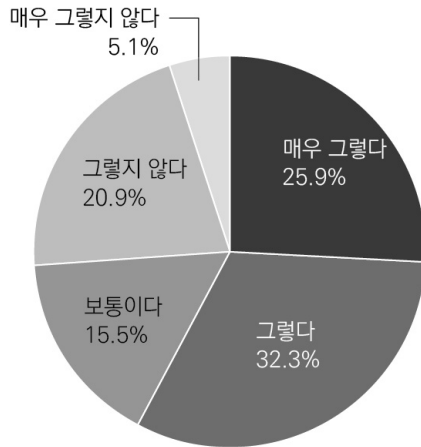
그림 III-9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출처: 필자 작성

복지책임의 주체의식을 좀 더 구체화하여 질문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5.9%, ‘그렇다’ 32.3%, ‘보통이다’ 15.5%, ‘그렇지 않다’ 20.9%, ‘매우 그렇지 않다’ 5.1%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그림 III-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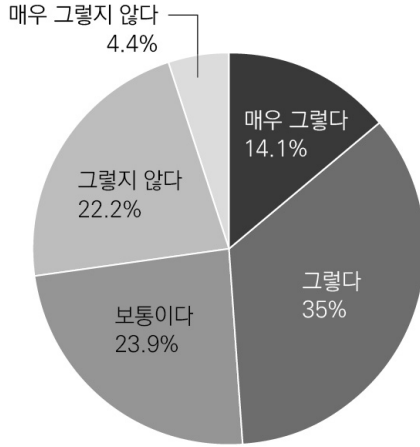
그림 III-10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하는지 여부



출처: 필자 작성

‘부모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4.1%, ‘그렇다’ 35%, ‘보통이다’ 23.9%, ‘그렇지 않다’ 22.2%, ‘매우 그렇지 않다’ 4.4%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그림 III-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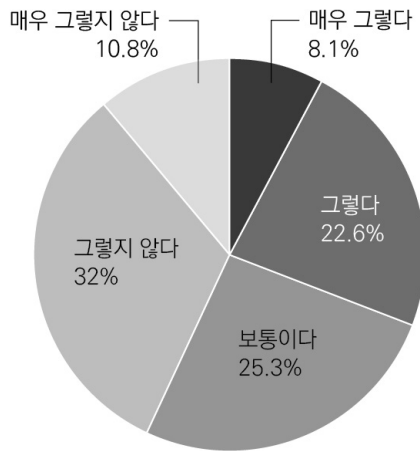
그림 III-11 부모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는지 여부



출처: 필자 작성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8.1%, ‘그렇다’ 22.6%, ‘보통이다’ 25.3%, ‘그렇지 않다’ 32%, ‘매우 그렇지 않다’ 10.8%였다. 동의하는 비율(매우 그렇다 + 그렇다) 30.7%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이 42.8%로 더 높았다.(<그림 III-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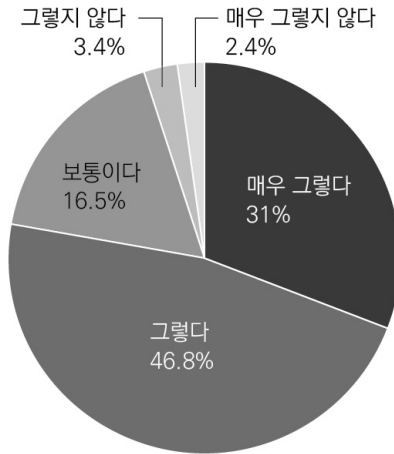
그림 III-12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출처: 필자 작성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1%, ‘그렇다’ 46.8%, ‘보통이다’ 16.5%, ‘그렇지 않다’ 3.4%, ‘매우 그렇지 않다’ 2.4%로 거의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했다.(〈그림 III-13〉 참조)

그림 III-13 소득격차 해소에서의 정부책임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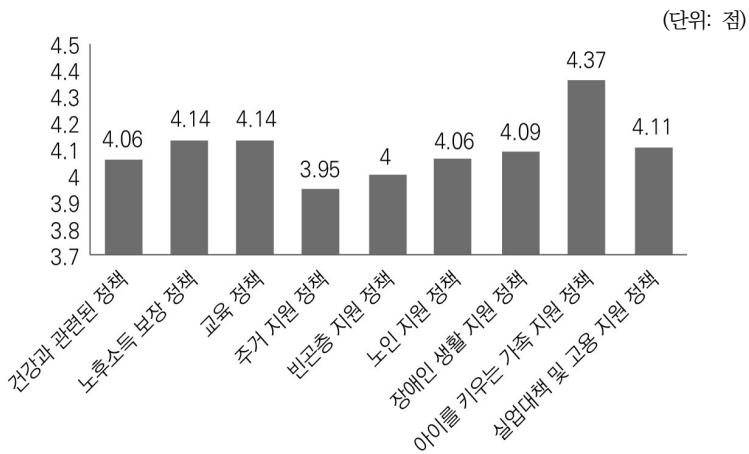
2.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태도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부지출 요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부지출 요구 수준을 정책별로 ‘매우 줄여야 한다’ 1점부터 ‘매우 늘려야 한다’ 5점까지 등급을 설정하고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건강과 관련된 정책’ 4.06점, ‘노후소득 보장 정책’ 4.14점, ‘교육 정책’ 4.14점, ‘주거 지원 정책’ 3.95점, ‘빈곤층 지원 정책’ 4점, ‘노인 지원 정책’ 4.06점, ‘장애인 생활지원 정책’ 4.09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정책’ 4.37점,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 4.11점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정책’이었으며 다음 ‘교육 지원 정책’, ‘노후소득 보장 정책’,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4〉 참조)

그림 III-1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부지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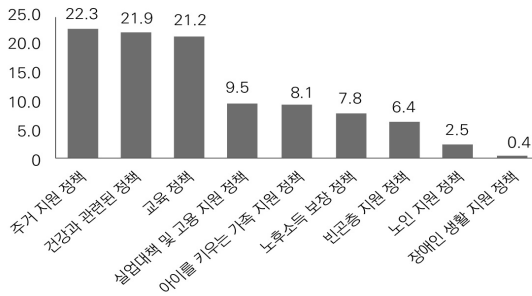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 가장 도움 되는 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주거 지원 정책’(22.3%) 이었으며 2순위는 ‘건강 지원 정책’(21.9%), 3순위는 ‘교육 정책’(21.2%)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했을 때 역시 1순위는 ‘주거 지원 정책’(41.3%), 2순위 ‘건강관련 정책’(37.7%), 3순위 ‘교육 정책’(35.2%), 4순위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 정책’(24.7%), 5순위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 정책’(24.3%)이었다.(<그림 III-15, 그림 III-16> 참조)

그림 III-15 가장 도움되는 정책(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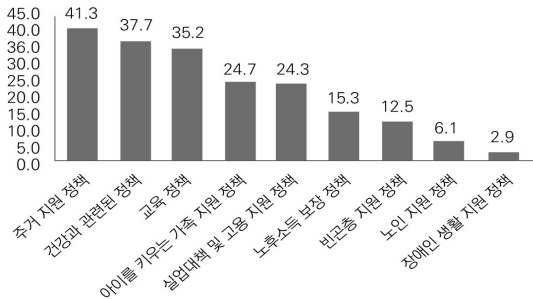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16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1순위+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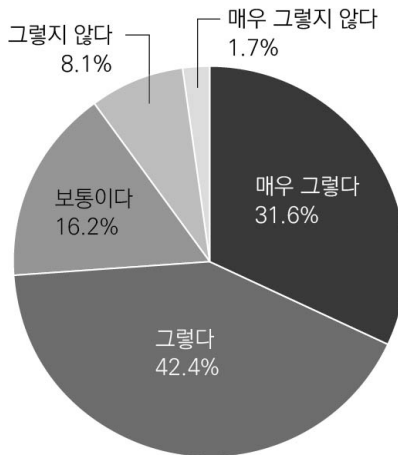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나.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

(1) 누진세에 대한 견해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를 조사한 데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1.6%, '그렇다' 42.4%, '보통이다' 16.2%, '그렇지 않다' 8.1%, '매우 그렇지 않다' 1.7%로 거의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7> 참조)

그림 III-17 누진세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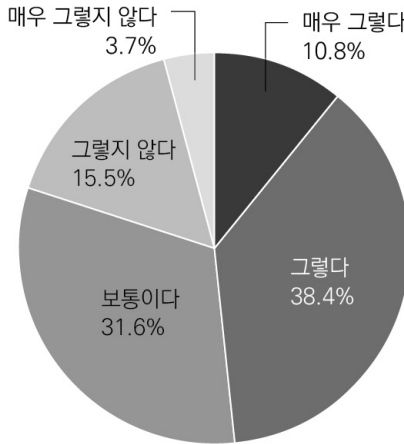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 세금부담 의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0.8%, ‘그렇다’ 38.4%, ‘보통이다’ 31.6%, ‘그렇지 않다’ 15.5%, ‘매우 그렇지 않다’ 3.7%로 세금부담을 하겠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그림 III-18> 참조)

그림 III-18 세금부담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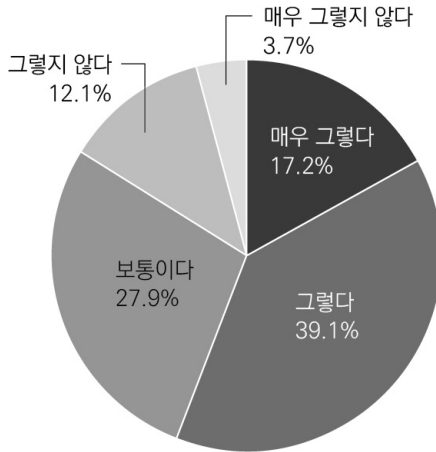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다.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인식

(1)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나는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가 복지를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좋다’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 17.2%, ‘그렇다’ 39.1%, ‘보통이다’ 27.9%, ‘그렇지 않다’ 12.1%, ‘매우 그렇지 않다’ 3.7%로 대다수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9〉 참조)

그림 III-19 복지국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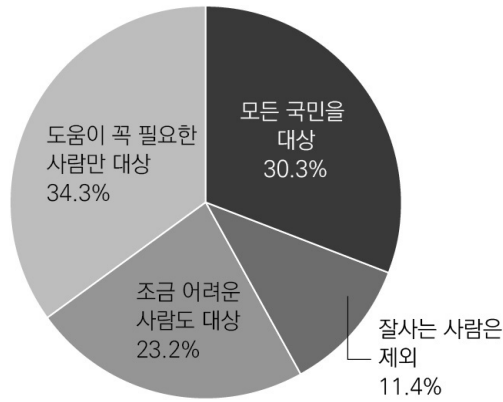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태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데 의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30.3%,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34.3%, ‘조금 어려운 사람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 23.2%, ‘잘사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한다’ 11.4%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더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20〉 참조)

그림 III-20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태도



출처: 필자 작성

3.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과 통일복지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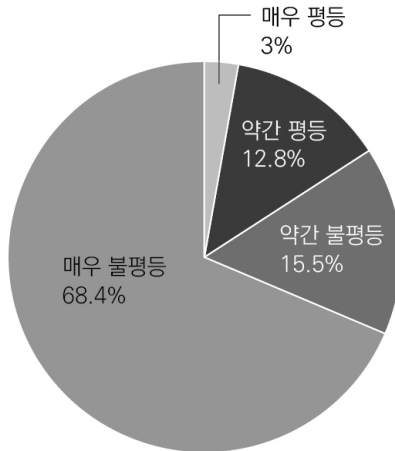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과 통일복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문항은 5문항이다. 그 중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에 관한 문항 2개, 통일방식에 관한 문항 1개, 통일 이후 복지정책에 관한 문항 2개이다.

가.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 의식

(1) 북한 불평등 실태 인식

북한의 불평등 인식 정도를 '매우 평등' 1점부터 '매우 불평등' 4점으로 4점 척도로 조사한 데 의하면 '매우 불평등' 68.4%, '약간 불평등' 15.5%, '약간 평등' 12.8%, '매우 평등' 3%로 나타나 매우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21> 참조) 북한 불평등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요인은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 속에서 연령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동의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21 북한의 불평등수준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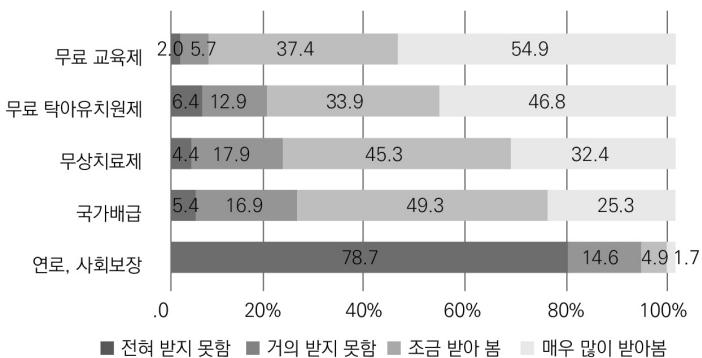
(2) 북한에서 복지수혜 수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받아 본 정도를 조사한 데 의하면 무료 교육제는 ‘매우 많이 받아봄’ 54.9%, ‘조금 받아봄’ 37.4%, ‘거의 받지 못함’ 5.7%, ‘전혀 받지 못함’ 2%로 나타났다. 무료 탁아유치원제는 ‘매우 많이 받아봄’ 46.8%, ‘조금 받아봄’ 33.9%, ‘거의 받지 못함’ 12.9%, ‘전혀 받지 못함’ 6.4%였다. 무상치료제는 ‘매우 많이 받아봄’ 32.4%, ‘조금 받아봄’ 45.3%, ‘거의 받지 못함’ 17.9%, ‘전혀 받지 못함’ 4.4%였다. 국가배급은 ‘매우 많이 받아봄’ 25.3%, ‘조금 받아봄’ 49.3%, ‘거의 받지 못함’ 16.9%, ‘전혀 받지 못함’ 5.4%로 나타났다. 연로보장 및 사회보장은 ‘매우 많이 받아봄’ 1.7%, ‘조금 받아봄’ 4.9%, ‘거의 받지 못함’ 14.6%, ‘전혀 받지 못함’ 78.7%로 나타났다.(<그림 III-22> 참조)

‘전혀 받지 못했다’ 1점부터 ‘매우 많이 받았다’ 4점으로, 4점 척도로 평균값을 구한 데 의하면 가장 많이 받아본 것은 ‘무료 교육제’(3.45점) 다음으로 ‘무료 탁아유치원제’(3.21점) ‘무상치료제’(3.06점), ‘국가배급’(2.95점) ‘사회보장 및 연로보장제’(1.30점) 순이었다.

그림 III-22 북한에서 복지수혜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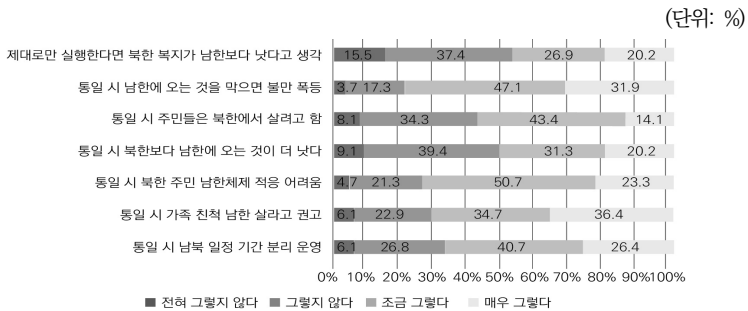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나. 통일 방식에 대한 태도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데 의하면 ‘통일이 되면 남북을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6.1%, ‘그렇지 않다’ 26.8%, ‘조금 그렇다’ 40.7%, ‘매우 그렇다’ 26.4%, ‘통일되면 가족 친척들에게 남한에 와서 살라고 권고하겠다’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6.1%, ‘그렇지 않다’ 22.9%, ‘조금 그렇다’ 34.7%, ‘매우 그렇다’ 36.4%,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4.7%, ‘그렇지 않다’ 21.3%, ‘조금 그렇다’ 50.7%, ‘매우 그렇다’ 23.3%,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남한에 오는 것이 더 낫다’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9.1%, ‘그렇지 않다’ 39.4%, ‘조금 그렇다’ 31.3%, ‘매우 그렇다’ 20.2%, ‘통일되어도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살려고 할 것이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8.1%, ‘그렇지 않다’ 34.3%, ‘조금 그렇다’ 43.4% ‘매우 그렇다’ 14.1%, ‘통일된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내려 오는 것을 막으면 불만이 폭등할 것이다’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3.7%, ‘그렇지 않다’ 17.3%, ‘조금 그렇다’ 47.1%, ‘매우 그렇다’ 31.9%, ‘통일된 후 북한 주민들은 제대로만 실행한다면 북한 복지가 남한 복지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5%, ‘그렇지 않다’ 37.4%, ‘조금 그렇다’ 26.9%, ‘매우 그렇다’ 20.2%였다.(<그림Ⅲ-23> 참조)

그림 Ⅲ-23 북한이탈주민의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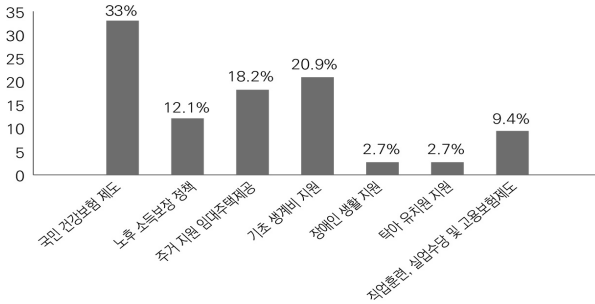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다. 북한 주민에게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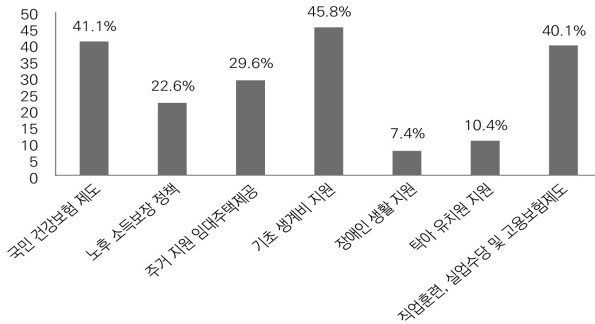
통일 이후 북한에서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험제도 1순위와 2순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1순위는 ‘국민건강보험’ 33%였고, 2순위 ‘기초 생계비 지원’ 20.9%, 3순위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제공’ 18.2%였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포괄하면 1순위 ‘기초 생계비 지원’ 45.8%, 2순위 ‘국민건강보험’ 41.1%, 3순위 ‘직업훈련, 실업수당 및 고용보험제도’ 40.1%, 4순위 ‘주거지원’ 29.6%이었다.(<그림 III-24, 25> 참조)

그림 III-24 북한 주민에게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험제도(1순위)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25 북한 주민에게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험제도(1순위+2순위)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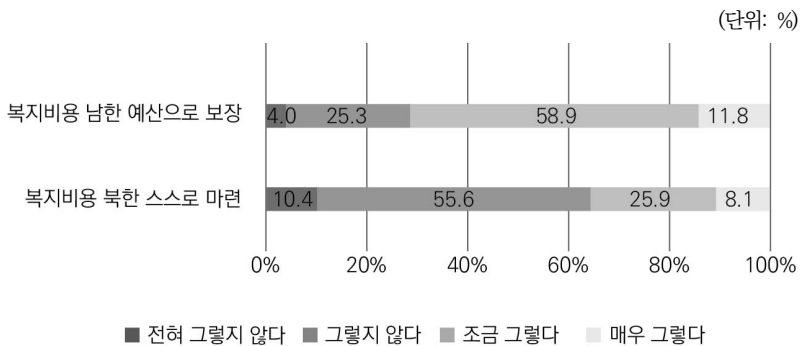
라. 통일 후 복지지출

(1) 복지비용 조달

‘통일 이후 사회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북한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8.1%, ‘조금 그렇다’ 25.9%, ‘그렇지 않다’ 55.6%, ‘전혀 그렇지 않다’ 10.4%로 과반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복지비용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통일 이후 사회복지비용을 남한의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1.8%, ‘조금 그렇다’ 58.9%, ‘그렇지 않다’ 25.3%, ‘전혀 그렇지 않다’ 4%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했다.(<그림 III-26> 참조)

통일 이후 사회복지비용 조달과 관련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환산한 점수(1~4점)는 ‘북한 스스로 마련’ 2.32점, ‘남한의 예산으로 보장’ 2.78점으로 ‘남한의 비용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그림 III-26 복지비용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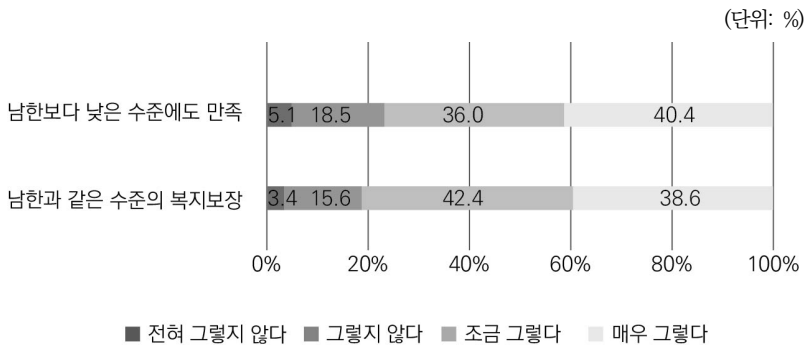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 통일 이후 복지수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8.6%, ‘조금 그렇다’ 42.4%, ‘그렇지 않다’ 15.6%, ‘전혀 그렇지 않다’ 3.4%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했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보다 낮은 수준에서라도 실제적인 복지혜택을 받으면 만족해할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 40.4%, ‘조금 그렇다’ 36%, ‘그렇지 않다’ 18.5%, ‘전혀 그렇지 않다’ 5.1%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그림 III-27 참조>)

통일 이후 사회복지수준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구한데 의하면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보장’ 3.16점, ‘남한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장해도 만족’ 3.12점으로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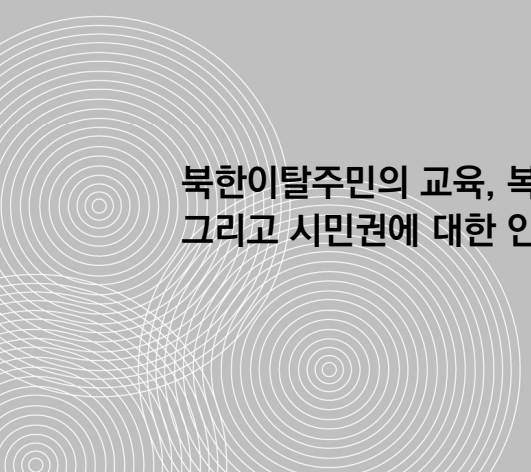
그림 III-27 통일 이후 복지수준



출처: 필자 작성

IV. 기초통계(3):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시민 자질, 즉 시민성의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 시민성 분포양상을 살펴본다. 본 조사 자료는 총 8개의 문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8개의 문항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시민성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본 연구는 시민성을 의무적 시민성과 자율적 시민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분포양상을 의무적 시민성과 자율적 시민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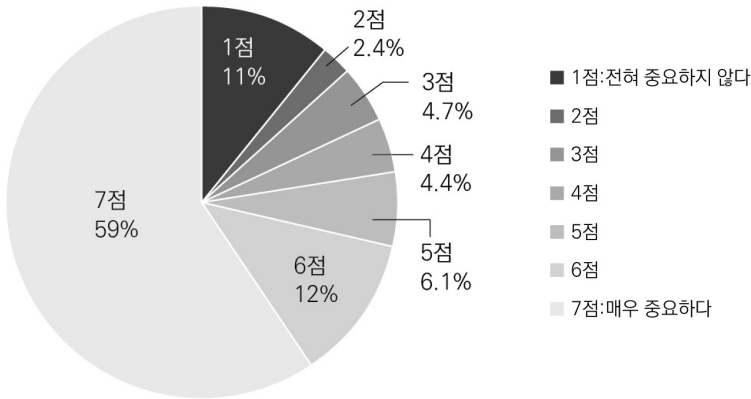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의무적 시민성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지켜야 할 규범적 시민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적 시민성은 투표 참여, 납세 의무, 그리고 법과 규칙 준수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자율적 시민성은 개인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민주주의 시민의 자질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사회·정치단체 참여, 타인의 다른 생각 이해, 윤리적 소비,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돕기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 좋은 국민이 되는데 무엇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매우 중요하다’에 7점을 준다면 귀하는 다음 사항 각각에 대하여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으로 측정되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투표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 297명 중 176명(59%)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33명 (11%)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투표의 중요성에 낮은 중요성(1점~3점)을 부여한 응답자는 약 18%(54명)이다. 반면 5점~7점을 부여한, 즉 '중요하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77%(230명)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 성별에 따른 특징적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V-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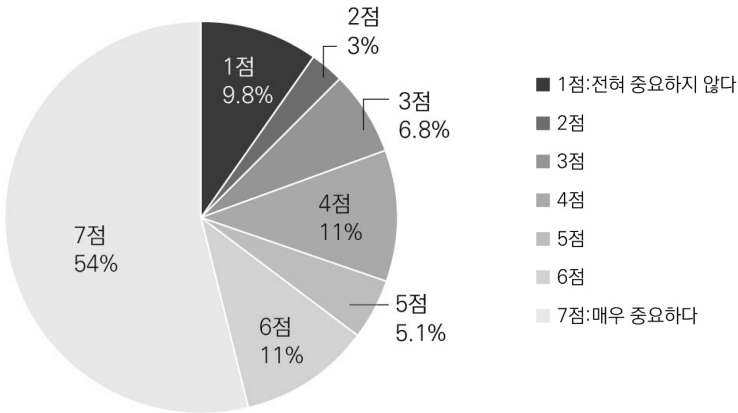
그림 IV-1 의무적 시민성: 투표 참여



출처: 필자 작성

‘결코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국민이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 296명 중 54%인 159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7점을 부여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인 6점을 부여한 응답자가 32명으로 11%를 차지했다.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정하는 5점 이상을 부여한 사람이 206명으로 전체 약 71%를 차지했다. 이는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자 비율 77%에 비해 다소 낮다.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에서도 남녀 성별에 따른 분포상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IV-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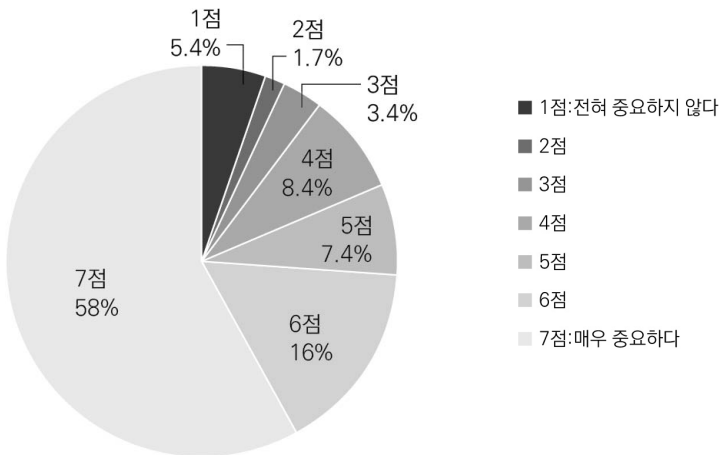
그림 IV-2 의무적 시민성: 납세의무 준수



출처: 필자 작성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림 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 296명 중 약 58%인 171명이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좋은 국민이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5점 이상을 부여한 응답자가 약 82%로 세 개의 의무적 자율성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즉 1점~3점을 준 응답자는 전체의 10%(31명)로 의무적 자율성 세 개의 항목 중 가장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무적 자율성 항목 중 법과 규칙의 준수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은 시민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준법 의무와 관련한 분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IV-3> 참조)

그림 IV-3 의무적 시민성: 법과 규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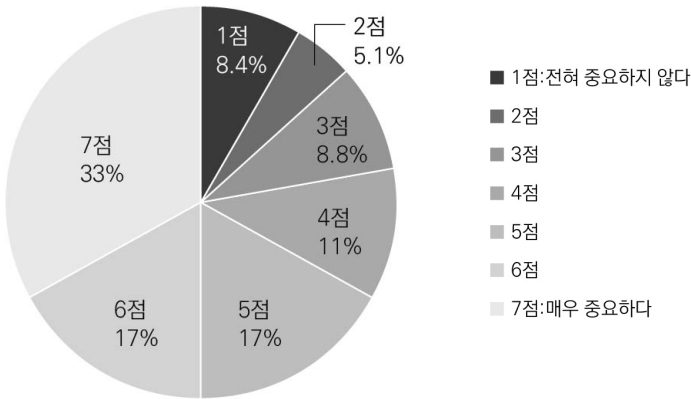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 자율적 시민성

자율적 시민성의 첫 번째 항목인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는 것에 대해 33%의 응답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문항에 답한 전체 응답자 296명 중 97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택한 답이다. 그리고 자율적 시민성 전 항목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7점을 부여한 문항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의무적 시민성에 최고점인 7점을 부여한 응답자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의무적 시민성의 경우 7점을 부여한 응답자는 세 항목에서 모두 54%를 넘었다.(<그림 IV-4> 참조)

그림 IV-4 자율적 시민성: 정부 일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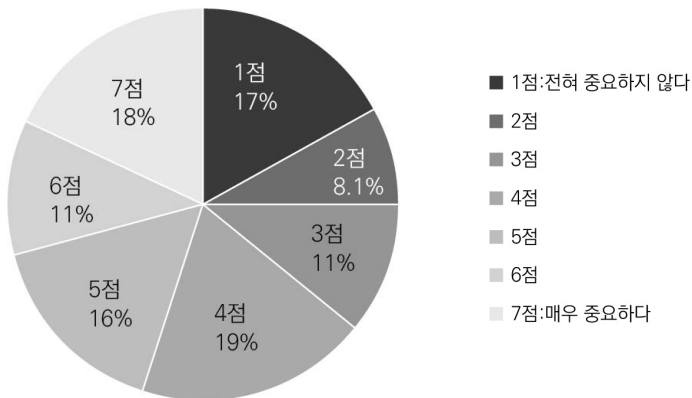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자 집단은 6점과 5점을 부여한 응답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6점과 5점을 부여한 사람이 각각 17%(50명), 그리고 17%(4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낮은 중요성을 부여(1점~3점)한 응답자의 비율은 22%로 앞서 의무적 자율성에서 같은 점수대를 부여한 응답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에 보이듯이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이탈주민은 18%(5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5점, 6점 혹은 7점을 부여한 응답자가 전체의 45%(133명)로 응답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문항 응답자 296명 중 50명으로 17%에 달했다. 이는 전 시민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즉 사회·정치단체 참여와 관련한 시민성에 전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비율로도 가장 높았다. 민주사회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여겨지는 ‘사회·정치단체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1점~3점)고 응답한 응답자가 36%(10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사회·정치단체 참여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많다. 그런데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정치단체 참여를 민주주의 시민의 바람직한 자질로서 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IV-5 자율적 시민성: 사회·정치단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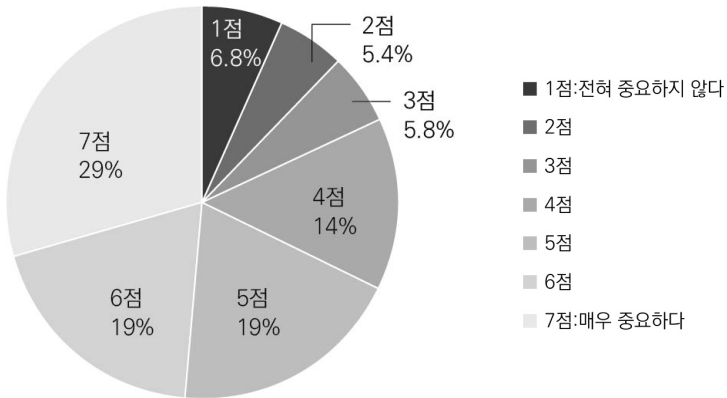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민주주의에서 좋은 국민이 되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그림 IV-6> 참조) 29%인 87명이 최고점인 7점을 부여하였다. 한편 약 7%(20명)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앞서 분석된 두 개의 자율적 시민성 문항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즉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북한이탈주민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반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5점, 6점 혹은 7점을 부여한 응답자가 약 67%로 사회·정치단체 참여에 중요성을 부여한 응답자 비율 45%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또한 다섯 개의 자율적 시민성 항목 중 ‘중요하지 않다’(1점~3점)로 응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18%(53명)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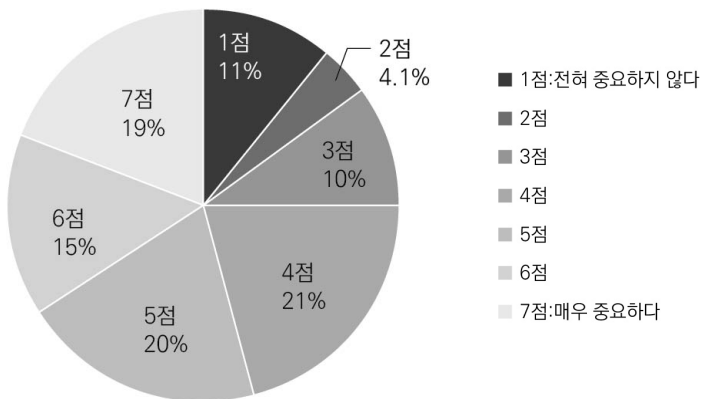
그림 IV-6 자율적 시민성: 다른 생각의 타인 이해



출처: 필자 작성

‘조금 비싸더라도 정치, 윤리 또는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좋은 국민이 되는데 중요하지도 중요하지 않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 문항 응답자 294명 중 21%인 61명이 4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자율적 시민성 5개 항목 중 중간척도인 4점을 택한 응답자 비율로는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5점을 선택한 응답자가 20%(58명)로 많았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9%(55명)로 세 번째로 많았다. 6점을 부여한 응답자는 15%(45명)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약 54%이다. 반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33명(11%)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회·정치단체 참여 문항에 같은 응답을 한 사람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다. 그러나 5개 자율적 시민성 항목 중 두 번째로 높다. 다시 말해 윤리적 소비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 주민이 비교적 많다는 것이다.(<그림 IV-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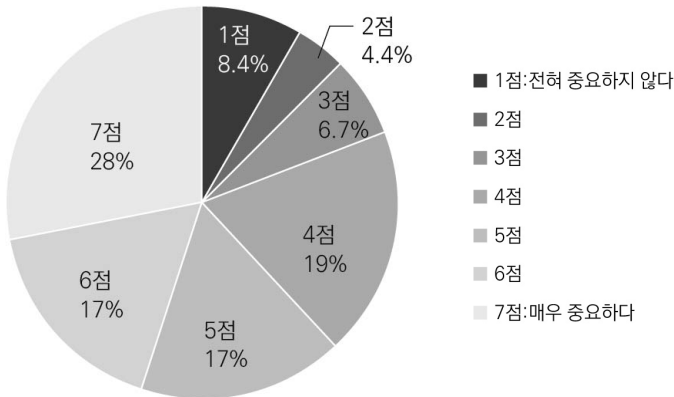
그림 IV-7 자율적 시민성: 윤리적 소비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이탈주민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면에서 측정된 타인에 대한 배려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좋은 시민이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83명(28%)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가장 적은 수의 응답자인 13명(4%)이 2점을 부여하였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응답자(1점~3점)는 전체의 약 20%(58명)로 다른 문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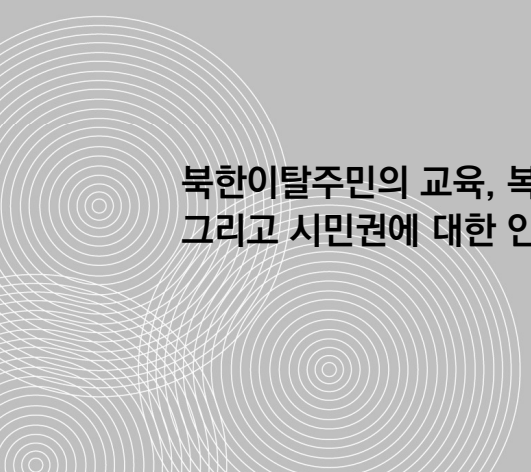
그림 IV-8 자율적 시민성: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



출처: 필자 작성

V. 심층분석(1):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교육 및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1. 연구주제와 의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후속 세대에게 그 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신념체계와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데, 이와 같은 지식과 가치체계의 집약체가 교육이다. 남북한은 70년 분단의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인간형을 양성해왔다. 남북한의 교육 목적은 교육의 일반적 목적을 반영하는 동시에 각 사회체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남한은 홍익인간의 이념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자력·체 발달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상의식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²⁾ 또한 남북한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도 차이가 있다.³⁾

이와 같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는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²⁾ 남북한의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은 남북한 교육의 방향성의 차이를 보여 준다. 남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2015); 북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는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선군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013.

³⁾ 남북한의 국가 교육과정에 따르면, 남한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은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이고, 1-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 같은 통합형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한 소학교에서는 국어, 사회주의 도덕, 수학, 자연, 정보기술, 체육, 음악무용, 도화공작, 영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린시절을 배운다. 남한의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은 국어, 사회(역사 포함), 도덕, 수학, 고학, 기술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과목(한문, 환경, 생활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이다. 이에 비해, 남한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북한 교육기관인 초급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은 국어, 조선 지리, 조선 역사, 사회주의 도덕, 수학, 자연과학, 기초기술, 정보기술, 체육, 음악무용, 미술, 영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등이다.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의 과정에서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의 통합뿐만 아니라, 학제 및 교육행정의 통합과 교사 확보 및 재교육, 교육시설 확충, 재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제기된다. 남북한 교육통합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인간형 양성을 추구해왔던 남북한의 학제,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인간의 통합, 사회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통일과 사회 통합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남북한 교육통합 관련 연구는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북한의 급격한 체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육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과 남북한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교육통합 연구로, 한만길 외(2001), 윤종혁 외(2002), 윤종혁 외(2007) 등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통합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북한 교육지원,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 교육통합 방안 및 과제를 다루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교육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하다가, 2000년대 초중반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다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된 한만길 외(2012)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기초로 하여 3단계 통일방안에 따른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학제,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행정체제, 교원제도 교육문화 등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교육통합 시 고려해야 하는 남북한 교육의 배제·수용 요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김정원 외(2015)는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의 일부로, 남한 및 북한 교사 각 6명에 대한 집담회를 실시하여 학교 교육을 받는 이유, 아동의 성장에서 교육이 지니는 의미, 학교급별 교육에 부여하는

의미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한 교사들은 남한 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를 교육을 통한 계층의 유지 혹은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비해, 북한 학교 교육에서도 사적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사적 소유로서의 ‘공부’의 의미가 강화되고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한과는 달리 북한 교육에서의 경쟁은 무한 경쟁으로 읽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김정원 외(2016)는 남북한 교육통합 시 남북한 교사 재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남북한 교사 집담회를 통해 남북한 교육통합 시 제기될 쟁점에 대한 남북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육통합 시 예상되는 쟁점으로 교사 역할 관련 쟁점, 남한 내 북한 교사 임명 관련 쟁점,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남북한 차이로 인한 쟁점 등이 지적되었다. 교사 역할 관련 쟁점으로는 북한 교사들이 당정책화를 위한 수업,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의식을 탈피해야 하는 문제, 북한은 교사가 학생을 책임지는데 남한에서는 부모가 책임지고 교사는 직업인으로 인식된다는 점, 북한 교사는 교과 수업만 하는데 비해 남한 교사에게는 행정 업무가 많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남한 내 북한 교사 임용 관련 쟁점으로는 교사 임용 과정에서 북한 교사 전체에 대한 차별 가능성, 혁명역사 전공 교사에 대한 대응 문제, 북한에 대한 남한 교사의 공감적 소통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이 도출되었다. 교육목표 및 내용상의 차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당과 수령에의 충실성 중심인데 비해 남한은 개인의 꿈과 목표 설정 중심이라는 점, 남북한 교수용어 차이, 교육내용과 방법의 차이 등이 쟁점으로 도출되었다.⁵⁾

최근에는 남북한 교육과정의 통합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진숙 외(2014)는 교육과정 부문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으

4)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및 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5), p. 196, p. 219.

5) 김정원 외,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사 재교육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6), p. 154.

로서, 남북한 초·중등학교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고, 2015년의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 교과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 교과 구성체계와 교육내용 및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을 총론 중심으로 제안하고 사회과 교육통합 사례를 제시하였다.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를 통해서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홍후조 외(2015)는 남한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년 교육강령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교육과정 기준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정아 외(2016)는 남북한 교육과정 총론 및 주요 교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한 교육과정의 특성과 교과별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별로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남북 교육통합 관련 연구는 주로 전문가 조사와 집담회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부분적으로 교사 등 특정 집단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면접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기는 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교육통합에 관한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남북한 통합이 남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장기적인 협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임을 생각할 때, 교육통합에 관하여 북한 출신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남북한 주민들 간에 교육통합에 관한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통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남북한 교육 및 교육통합 방식과 교육통합 관련 정책 쟁점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연령, 성별, 북한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와 남한 사회 거주기간, 남한 학력, 남한 계층 등 남한 사회 적응 변수에 따라 남북한 교육 및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변수 중 남북한의 직업은 전체 표집 규모에 비해 직업 분류 범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북한 계층 변수도 해석상의 의미가 크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북한 학력 변수는 설문지 상에서는 북한 교육경험 없음, 소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대학 중퇴, 대학 졸업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각 구간별 사례수가 적어 ‘교육경험 없음’, ‘소학교 졸업 및 중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및 대학 중퇴’, ‘대학 졸업’으로 일부 구간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소학교 졸업 및 중학교 졸업’은 북한에서 의무교육 기간의 교육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대학 졸업’은 고등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의미한다. 남한 학력도 ‘남한 교육경험 없음’,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및 기능대학 졸업’,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간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남한 계층 중에서 상층은 사례수가 매우 적어 중상층을 통합하고, 중상층과 하층의 두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이 절에서는 연령, 성별, 북한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와 남한 학력, 남한 계층, 남한 사회 거주기간 등 남한 사회 적응 변수에 따라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결과를 남한 주민 및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사한 조사결과와 비교·검토하였다.

가. 남한 교육에 대한 평가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5점 척도 환산 기준으로 3.4점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와 동일한 설문 문항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에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남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한 주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점수는 5점 척도 환산 점수로 평균 2.58점으로, ‘보통’에 못 미친다.⁶⁾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일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에 제한이 있지만,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 주민에 비해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에 남북하나재단이 2015년 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만 8세에서 만 18세까지의 탈북청소년 8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현재 받고 있는 교육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5점 척도 환산 점수로 평균 3.8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과 구체적인 조사 문항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결과 또한 탈북청소년들의 교육만족도가 일반 국민들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단별로 보면,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연령대이다. <표 V-1>은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 점수 변환 후 분산 분석한 결과이다.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한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연령층인 40대의 경우 30대에 비해 남한 교육에 대한 평가가 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한에서 학교 교육을 직접 받거나 최근에 경험한 20대 이하와 그들의 부모들이 다른 연령대

⁶⁾ 임소현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6), p. 273.

에 비해 남한 교육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 변수별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연령대	20대 이하	65	3.15	.972	6.063 ***	50대 이상 > 20대 이하, 40대
	30대	66	3.44	1.010		
	40대	81	3.22	.949		
	50대 이상	84	3.73	.782		
성별	남	88	3.30	1.105	1.384	
	여	198	3.44	.881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5	2.60	1.140	1.709	
	소학교, 중학교	197	3.40	.912		
	전문학교, 대학 중퇴	58	3.53	.883		
	대졸	36	3.31	1.167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159	3.43	.931	.713	
	중고등학교 졸	32	3.47	1.047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29	3.41	1.119		
	대졸 이상	66	3.24	.895		
남한 계층	하층	177	3.46	.911	1.709	
	중상층	119	3.31	.998		
거주 기간	1년 이내	9	3.44	1.130	.532	
	1년~3년 이내	31	3.42	.958		
	3년~5년 이내	36	3.33	.894		
	5년~10년 이내	90	3.51	.877		
	10년 초과	130	3.33	.999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필자 작성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질문을 한 조사에서도 5점 척도 환산 점수가 20대 미만 2.44점, 30대 2.58점, 40대 2.53점, 50대 2.65점, 60대 이상 2.73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40대는 30대보다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러한 결과는 남한의 일반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자신이 지금 학교 교육을 받고 있거나 학부모인 경우에는 직접 각종 교육 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표 V-2>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남한의 교육 기회 평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변환 점수의 평균을 보면 여성은 4.25점으로 '잘하고 있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3.92점으로 '잘하고 있다'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진행되지만, 고등교육기관 취학자 중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다. 2014년 기준으로 16세 이상 전문학교 학생 중 여성의 비율은 도시지역 46.79%, 농촌지역 41.62%이며, 16세 이상 대학생 중 여성의 비율은 도시지역 28.64%, 농촌지역 25.05%에 불과하다.⁸⁾ 또한 2014년 기준으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남성이 10.9%인데 비해 여성은 7.2%이다.⁹⁾ 이와 같이 북한은 남한에 비해 교육 기회의 평등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교육의 기회 평등에 관해 남성 북한이탈주민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⁷⁾ 위의 책, p. 273.

⁸⁾ UNESCO. "Education for All National." *EFA 2015 Review*; DPR Korea (2015), p. 53.

⁹⁾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yongyang: 2015).

표 V-2 변수별 교육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연령대	20대 이하	63	3.97	1.177	1.546	
	30대	63	4.29	.958		
	40대	80	4.11	1.091		
	50대 이상	84	4.31	1.041		
성별	남	85	3.92	1.197	5.740 *	여>남
	여	195	4.25	1.012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4	4.00	.816	1.269	
	소학교, 중학교	191	4.14	1.097		
	전문학교, 대학 중퇴	59	4.41	.893		
	대졸	36	4.03	1.207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156	4.26	1.046	2.253	
	중고등학교 졸	30	4.07	1.143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29	4.45	.827		
	대졸 이상	65	3.92	1.163		
남한 계층	하층	173	4.22	1.039	.715	
	중상층	117	4.11	1.120		
거주 기간	1년 이내	9	4.56	.726	.742	
	1년~3년 이내	29	4.38	.775		
	3년~5년 이내	36	4.06	1.094		
	5년~10년 이내	86	4.20	1.104		
	10년 초과	130	4.12	1.121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교육과 사회적 성취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V-3>과 같이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교육과 사회적 성취와의 연관성 인식에 대한 5점 척도 변환 점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교육이 직업 획득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획득에 도움이 되는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만큼 거

주기간이 길어야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이 사회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교육과 사회적 성취와의 연관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3 변수별 교육과 사회적 성취와의 연관성 인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연령대	20대 이하	64	3.61	1.149	1.451	
	30대	65	3.55	1.104		
	40대	78	3.24	1.142		
	50대 이상	78	3.55	1.335		
성별	남	85	3.59	1.147	1.182	
	여	191	3.42	1.215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4	3.00	1.155	.890	
	소학교, 중학교	189	3.54	1.173		
	전문학교, 대학 중퇴	58	3.45	1.157		
	대졸	34	3.24	1.372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152	3.50	1.157	.382	
	중고등학교 졸	30	3.67	1.213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29	3.38	1.147		
	대졸 이상	64	3.42	1.245		
남한 계층	하층	169	3.44	1.239	.396	
	중상층	116	3.53	1.130		
거주 기간	1년 이내	9	4.44	.726	2.598 *	
	1년~3년 이내	31	3.16	1.098		
	3년~5년 이내	36	3.42	1.156		
	5년~10년 이내	84	3.36	1.258		
	10년 초과	125	3.59	1.178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남한 교육의 문제점 인식에서는 <표 V-4>와 같이 연령대별, 남한 학력별, 남한 거주기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입시 위주 교육'을 남한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남한에서 초중등교육을 받고 있거나 초중등교육을 이수한 지 얼마 안되는 20대 이하의 경우 60%가 입시위주 교육을 남한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남한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집단의 응답 경향이 다른 집단과 약간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대졸 이상 고학력 집단의 과반수가 남한 교육의 문제점으로 입시위주 교육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함께 여타 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 빈도를 보인 것이다. 또한 계층 간·지역 간 교육 격차와 과도한 사교육을 지적한 비율도 타집단에 비해 높았다.

거주기간별로는, 남한 거주 1년 이내인 북한이탈주민 중 66.7%가 '입시 위주 교육'을 남한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물론 남한 거주 1년 이내의 총 빈도수가 9명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은 남북한 교육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초기 정착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더욱 큰 문제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V-4 변수별 남한 교육의 문제점(1순위)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입시 위주 교육	배우는 과목이 많고 내용이 어려움	경쟁 주요적 학교 문화	학교 폭력	교사 권위 하락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	과도한 사교육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39	6	8	3	3	2	4	65	29.046 *
		%	60.0%	9.2%	12.3%	4.6%	4.6%	3.1%	6.2%	100.0%	
	30대	빈도	28	9	9	7	0	7	6	66	
		%	42.4%	13.6%	13.6%	10.6%	0.0%	10.6%	9.1%	100.0%	
	40대	빈도	29	13	6	11	7	7	9	82	
		%	35.4%	15.9%	7.3%	13.4%	8.5%	8.5%	11.0%	100.0%	
50대 이상	빈도	33	18	15	7	4	2	6	85		
	%	38.8%	21.2%	17.6%	8.2%	4.7%	2.4%	7.1%	100.0%		
성별	남	빈도	41	9	16	3	5	6	8	88	11.208
		%	46.6%	10.2%	18.2%	3.4%	5.7%	6.8%	9.1%	100.0%	
	여	빈도	85	37	22	24	9	9	14	200	
		%	42.5%	18.5%	11.0%	12.0%	4.5%	4.5%	7.0%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2	0	2	0	1	0	0	5	23.948
		%	40.0%	.0%	40.0%	.0%	20.0%	.0%	.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80	34	23	20	8	13	20	198	
		%	40.4%	17.2%	11.6%	10.1%	4.0%	6.6%	10.1%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30	9	8	6	0	2	4	59	
		%	50.8%	15.3%	13.6%	10.2%	.0%	3.4%	6.8%	100.0%	
대졸	빈도	17	3	5	2	5	3	1	36		
	%	47.2%	8.3%	13.9%	5.6%	13.9%	8.3%	2.8%	100.0%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66	33	20	14	8	6	14	161	36.036 **
		%	41.0%	20.5%	12.4%	8.7%	5.0%	3.7%	8.7%	100.0%	
	중고등 학교 졸	빈도	16	6	2	4	1	1	2	32	
		%	50.0%	18.8%	6.3%	12.5%	3.1%	3.1%	6.3%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8	5	5	7	1	2	1	29	
		%	27.6%	17.2%	17.2%	24.1%	3.4%	6.9%	3.4%	100.0%	
대졸 이상	빈도	33	1	9	2	4	9	8	66		
	%	50.0%	1.5%	13.6%	3.0%	6.1%	13.6%	12.1%	100.0%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입시 위주 교육	배우는 과목이 많고 내용이 어려움	경쟁 주요적 학교 문화	학교 폭력	교사 권위 하락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	과도한 사교육	전체	χ^2	
남한 계층	하층	빈도	67	29	26	21	6	13	17	179	10.926
		%	37.4%	16.2%	14.5%	11.7%	3.4%	7.3%	9.5%	100.0%	
	중상층	빈도	62	17	12	7	8	5	8	119	
		%	52.1%	14.3%	10.1%	5.9%	6.7%	4.2%	6.7%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6	0	0	1	0	0	2	9	37.336 *
		%	66.7%	.0%	.0%	11.1%	.0%	.0%	22.2%	100.0%	
	1년~3년 이내	빈도	12	6	3	7	2	1	0	31	
		%	38.7%	19.4%	9.7%	22.6%	6.5%	3.2%	.0%	100.0%	
	3년~5년 이내	빈도	15	11	3	3	3	0	2	37	
		%	40.5%	29.7%	8.1%	8.1%	8.1%	.0%	5.4%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38	17	14	6	5	5	5	90	
		%	42.2%	18.9%	15.6%	6.7%	5.6%	5.6%	5.6%	100.0%	
	10년 초과	빈도	58	12	18	11	4	12	16	131	
		%	44.3%	9.2%	13.7%	8.4%	3.1%	9.2%	12.2%	100.0%	
전체	빈도	129	46	38	28	14	18	25	298		
	%	43.3%	15.4%	12.8%	9.4%	4.7%	6.0%	8.4%	100.0%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남한 교육 중 ‘교육통합 후 적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성별, 남북한 학력별, 남한 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이 ‘학생들의 창의성 함양’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 존중’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교육의 장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거의 동일하며, 이러한 인식은 남한 사회 거주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V-5 변수별 남한 교육 중 교육통합 후 적용 희망 사항(1순위)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것을 중요시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존중	교사가 권위주의 적이지 않고 친절	개인의 선택권 많음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 가능	교육환경, 시설 좋음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41	16	2	2	3	1	65	21.176
		%	63.1%	24.6%	3.1%	3.1%	4.6%	1.5%	100.0%	
	30대	빈도	39	13	4	2	6	2	66	
		%	59.1%	19.7%	6.1%	3.0%	9.1%	3.0%	100.0%	
	40대	빈도	40	10	5	7	15	5	82	
		%	48.8%	12.2%	6.1%	8.5%	18.3%	6.1%	100.0%	
	50대 이상	빈도	52	9	7	3	10	4	85	
		%	61.2%	10.6%	8.2%	3.5%	11.8%	4.7%	100.0%	
성별	남	빈도	53	12	4	5	7	7	88	8.049
		%	60.2%	13.6%	4.5%	5.7%	8.0%	8.0%	100.0%	
	여	빈도	114	35	13	9	25	4	200	
		%	57.0%	17.5%	6.5%	4.5%	12.5%	2.0%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2	0	0	0	3	0	5	20.756
		%	40.0%	.0%	.0%	.0%	60.0%	.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110	34	16	9	22	7	198	
		%	55.6%	17.2%	8.1%	4.5%	11.1%	3.5%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37	8	1	2	7	4	59	
		%	62.7%	13.6%	1.7%	3.4%	11.9%	6.8%	100.0%	
대졸	빈도	23	6	1	3	2	1	36		
	%	63.9%	16.7%	2.8%	8.3%	5.6%	2.8%	100.0%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것을 중요시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존중	교사가 권위주의 적이지 않고 친절	개인의 선택권 많음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 가능	교육환경, 시설 좋음	전체	χ^2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88	29	14	9	15	6	161	20.994
		%	54.7%	18.0%	8.7%	5.6%	9.3%	3.7%	100.0%	
	중고등학교 졸	빈도	17	3	2	2	4	4	32	
		%	53.1%	9.4%	6.3%	6.3%	12.5%	12.5%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15	7	2	1	3	1	29	
		%	51.7%	24.1%	6.9%	3.4%	10.3%	3.4%	100.0%	
대졸 이상	빈도	46	8	0	1	10	1	66		
	%	69.7%	12.1%	.0%	1.5%	15.2%	1.5%	100.0%		
남한 계층	하층	빈도	104	25	13	7	23	7	179	3.817
		%	58.1%	14.0%	7.3%	3.9%	12.8%	3.9%	100.0%	
	중상층	빈도	68	23	5	7	11	5	119	
		%	57.1%	19.3%	4.2%	5.9%	9.2%	4.2%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5	3	0	0	1	0	9	17.943
		%	55.6%	33.3%	.0%	.0%	11.1%	.0%	100.0%	
	1~3년 이내	빈도	22	3	2	0	3	1	31	
		%	71.0%	9.7%	6.5%	.0%	9.7%	3.2%	100.0%	
	3~5년 이내	빈도	18	10	2	0	5	2	37	
		%	48.6%	27.0%	5.4%	.0%	13.5%	5.4%	100.0%	
	5~10년 이내	빈도	50	14	9	6	8	3	90	
		%	55.6%	15.6%	10.0%	6.7%	8.9%	3.3%	100.0%	
	10년 초과	빈도	77	18	5	8	17	6	131	
		%	58.8%	13.7%	3.8%	6.1%	13.0%	4.6%	100.0%	
전체	빈도	172	48	18	14	34	12	298		
	%	57.7%	16.1%	6.0%	4.7%	11.4%	4.0%	100.0%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나.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북한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평가에서는 <표 V-6>과 같이 연령대별, 남한 학력별, 남한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북한 교육을 좋게 평가하였다. 단, 30대가 5점 척도 환산 점수 2.71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고난의 행군기’라고 불리는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난 시기에 북한의 학교 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학교 운영이 서서히 정상화되었는데, 20대와 30대는 경제난 시기와 이 이후 시기에 초중등 교육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 비해 북한 교육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 학력별로도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 학력별 집단 중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집단은 대졸 이상자 집단으로, 이 집단과 다른 집단의 차이는 타 집단 간의 차이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북한 교육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기존에 자신이 받았던 북한 교육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계층별로도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중상층과 하층의 5점 척도 환산점수를 비교하면, 중상층은 3.13점, 하층은 2.8점으로, 중상층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학력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 사회에서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이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남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크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북한 교육에 대한 불만족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남한 사회에서 하층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북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표 V-6 변수별 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연령대	20대 이하	65	2.75	1.061	3.124 *	50>30
	30대	66	2.71	1.004		
	40대	82	2.99	1.222		
	50대 이상	85	3.20	1.121		
성별	남	88	2.89	1.198	.112	
	여	200	2.94	1.108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5	2.20	.837	1.422	
	소학교, 중학교	198	2.88	1.141		
	전문학교, 대학 중퇴	59	3.07	1.015		
	대졸	36	3.11	1.214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161	2.95	1.128	3.323 *	
	중고등학교 졸	32	3.19	1.03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29	3.07	.998		
	대졸 이상	66	2.55	1.126		
남한 계층	하층	179	2.80	1.147	6.260 *	중상>하
	중상층	119	3.13	1.065		
거주 기간	1년 이내	9	3.33	1.323	.951	
	1년~3년 이내	31	2.65	1.018		
	3년~5년 이내	37	3.03	1.013		
	5년~10년 이내	90	3.00	1.122		
	10년 초과	131	2.91	1.167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필자 작성

북한 교육의 문제점 인식에서는 <표 V-7>과 같이 북한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타집단과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에서 학교 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총 5명에 불과해, 이러한 차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V-7 변수별 북한 교육의 문제점

		과도한 정치사상 교육	학생 들에 과도한 노력 동원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이 떨어짐	학교 시설과 환경이 낙후	교사가 권위 주의적	대학 진학 시 출신 배경이 크게 작용	대학 진학 선택 등 개인의 선택 기회가 너무 적음	세계 부담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큼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49	7	2	2	0	3	2	0	65	28.641	
		%	75.4%	10.8%	3.1%	3.1%	0.0%	4.6%	3.1%	0.0%	100.0%		
	30대	빈도	58	7	1	0	0	0	0	0	0		66
		%	87.9%	10.6%	1.5%	0.0%	0.0%	0.0%	0.0%	0.0%	0.0%		100.0%
	40대	빈도	70	7	0	0	1	3	0	1	1		82
		%	85.4%	8.5%	0.0%	0.0%	1.2%	3.7%	0.0%	1.2%	100.0%		
50대 이상	빈도	60	16	2	2	0	5	0	0	0	85		
	%	70.6%	18.8%	2.4%	2.4%	0.0%	5.9%	0.0%	0.0%	100.0%			
성별	남	빈도	71	7	1	0	1	7	1	0	88	12.173	
		%	80.7%	8.0%	1.1%	0.0%	1.1%	8.0%	1.1%	0.0%	100.0%		
	여	빈도	159	28	4	4	0	4	1	0	200		
		%	79.5%	14.0%	2.0%	2.0%	0.0%	2.0%	0.5%	0.0%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2	1	0	1	0	0	1	0	5	57.805 ***	
		%	40.0%	20.0%	.0%	20.0%	.0%	.0%	20.0%	.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159	25	5	0	1	7	1	0	198		
		%	80.3%	12.6%	2.5%	.0%	.5%	3.5%	.5%	.0%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44	9	0	2	0	3	0	1	59		
		%	74.6%	15.3%	.0%	3.4%	.0%	5.1%	.0%	1.7%	100.0%		
대졸	빈도	32	2	0	1	0	1	0	0	36			
	%	88.9%	5.6%	.0%	2.8%	.0%	2.8%	.0%	.0%	100.0%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131	18	2	3	1	5	1	0	161	19.900	
		%	81.4%	11.2%	1.2%	1.9%	.6%	3.1%	.6%	.0%	100.0%		
	중고등학교 졸	빈도	23	5	1	0	0	2	1	0	32		
		%	71.9%	15.6%	3.1%	.0%	.0%	6.3%	3.1%	.0%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21	4	0	1	0	3	0	0	29		
		%	72.4%	13.8%	.0%	3.4%	.0%	10.3%	.0%	.0%	100.0%		
대졸 이상	빈도	54	9	2	0	0	0	0	1	66			
	%	81.8%	13.6%	3.0%	.0%	.0%	.0%	.0%	1.5%	100.0%			

		빈도	과도한 정치사상 교육	학생들에 과도한 노력 동원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이 떨어짐	학교 시설과 환경이 낙후	교사가 권위 주의적	대학 진학 시 출신 배경이 크게 작용	대학 진학 선택 등 개인의 선택 기회가 너무 적음	세 부담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큼	빈도	χ^2	
			%	%	%	%	%	%	%	%	%		
남한 계층	하층	빈도	141	23	3	3	1	6	1	1	179	2.026	
	%	78.8%	12.8%	1.7%	1.7%	.6%	3.4%	.6%	.6%	100.0%			
	중상층	빈도	96	14	2	1	0	5	1	0	119		
		%	80.7%	11.8%	1.7%	.8%	.0%	4.2%	.8%	.0%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5	3	0	1	0	0	0	0	9	24.383	
		%	55.6%	33.3%	.0%	11.1%	.0%	.0%	.0%	.0%	100.0%		
	1년~3년 이내	빈도	26	2	0	1	0	1	1	0	31		
		%	83.9%	6.5%	.0%	3.2%	.0%	3.2%	3.2%	.0%	100.0%		
	3년~5년 이내	빈도	31	3	1	1	0	1	0	0	37		
		%	83.8%	8.1%	2.7%	2.7%	.0%	2.7%	.0%	.0%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69	13	2	1	0	5	0	0	90		
		%	76.7%	14.4%	2.2%	1.1%	.0%	5.6%	.0%	.0%	100.0%		
	10년 초과	빈도	106	16	2	0	1	4	1	1	131		
		%	80.9%	12.2%	1.5%	.0%	.8%	3.1%	.8%	.8%	100.0%		
	전체	빈도	237	37	5	4	1	11	2	1	298		
		%	79.5%	12.4%	1.7%	1.3%	.3%	3.7%	.7%	.3%	100.0%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북한 교육 중 교육통합 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령대, 성별, 북한 학력 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 경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교육이 없고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을 북한 교육의 장점으로 보고 있지만, 2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응답률이 다소 낮다는 것이다. 북한은 교육법 제2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공고발전원칙'으로 명시

하고 있으며, 2011년에 제정된 「보통교육법」에서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비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하였을 경우’ 행정처벌을 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개인적인 사교육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시장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학교 교육 이외에 개인교사가 학생에게 돈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은 사교육이 대도시 중심구역의 일부 학교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학생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한의 학원과 같은 별도의 사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20대 이하 연령군에서는 북한에서 생활할 때 본인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사교육을 받는 것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없는 것을 북한 교육의 장점으로 보는 비율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교육이 없고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을 꼽은 응답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10% 가량 높았고, ‘교사의 권위가 높고 교사를 존중하는 것’을 꼽은 응답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8% 정도 높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권위와 규율을 중시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북한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다른 응답특성이 나타났으나, 이 집단의 사례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소학교·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집단의 응답을 살펴보면, 고학력일수록 ‘사교육이 없고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높고 교사를 존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8 변수별 북한 교육 중 교육통합 후 적용 희망 사항(1순위)

		사교육이 없고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	교사의 권위가 높고 교사를 존중	엄격한 학교 규율과 질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중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교육	입시위주 교육 보다는 인성 교육에 차중	예체능 교육을 잘 시키는 것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37	12	4	2	2	5	3	65	22.937 **
		%	56.9%	18.5%	6.2%	3.1%	3.1%	7.7%	4.6%	100.0%	
	30대	빈도	46	6	5	3	0	5	1	66	
		%	69.7%	9.1%	7.6%	4.5%	0.0%	7.6%	1.5%	100.0%	
	40대	빈도	52	12	5	7	1	5	0	82	
		%	63.4%	14.6%	6.1%	8.5%	1.2%	6.1%	0.0%	100.0%	
	50대 이상	빈도	59	10	9	5	2	0	0	85	
		%	69.4%	11.8%	10.6%	5.9%	2.4%	0.0%	0.0%	100.0%	
성별	남	빈도	51	17	9	4	4	1	2	88	15.999 *
		%	58.0%	19.3%	10.2%	4.5%	4.5%	1.1%	2.3%	100.0%	
	여	빈도	135	22	13	13	1	14	2	200	
		%	67.5%	11.0%	6.5%	6.5%	0.5%	7.0%	1.0%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1	1	1	0	1	0	1	5	38.830 **
		%	20.0%	20.0%	20.0%	.0%	20.0%	.0%	20.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125	26	18	13	3	10	3	198	
		%	63.1%	13.1%	9.1%	6.6%	1.5%	5.1%	1.5%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42	7	4	1	0	5	0	59	
		%	71.2%	11.9%	6.8%	1.7%	.0%	8.5%	.0%	100.0%	
	대졸	빈도	26	6	0	3	1	0	0	36	
		%	72.2%	16.7%	.0%	8.3%	2.8%	.0%	.0%	100.0%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107	21	11	10	4	7	1	161	17.614
		%	66.5%	13.0%	6.8%	6.2%	2.5%	4.3%	.6%	100.0%	
	중고등학교 졸	빈도	17	6	3	2	1	1	2	32	
		%	53.1%	18.8%	9.4%	6.3%	3.1%	3.1%	6.3%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20	2	3	2	0	1	1	29	
		%	69.0%	6.9%	10.3%	6.9%	.0%	3.4%	3.4%	100.0%	
	대졸 이상	빈도	43	11	4	2	0	6	0	66	
		%	65.2%	16.7%	6.1%	3.0%	.0%	9.1%	.0%	100.0%	

		사교육이 없고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	교사의 권위가 높고 교사를 존중	엄격한 학교 규율과 질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중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교육	입시위주 교육 보다는 인성 교육에 차중	예체능 교육을 잘 시키는 것	전체	χ^2	
남한 계층	하층	빈도	118	23	14	11	3	9	1	179	2.366
		%	65.9%	12.8%	7.8%	6.1%	1.7%	5.0%	.6%	100.0%	
	중상층	빈도	76	17	9	6	2	6	3	119	
		%	63.9%	14.3%	7.6%	5.0%	1.7%	5.0%	2.5%	100.0%	
가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6	1	1	0	0	1	0	9	23.506
		%	66.7%	11.1%	11.1%	.0%	.0%	11.1%	.0%	100.0%	
	1년~3년 이내	빈도	19	5	1	2	0	3	1	31	
		%	61.3%	16.1%	3.2%	6.5%	.0%	9.7%	3.2%	100.0%	
	3년~5년 이내	빈도	20	4	3	6	0	4	0	37	
		%	54.1%	10.8%	8.1%	16.2%	.0%	10.8%	.0%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60	12	5	5	2	4	2	90	
		%	66.7%	13.3%	5.6%	5.6%	2.2%	4.4%	2.2%	100.0%	
	10년 초과	빈도	89	18	13	4	3	3	1	131	
		%	67.9%	13.7%	9.9%	3.1%	2.3%	2.3%	.8%	100.0%	
전체	빈도	194	40	23	17	5	15	4	298		
	%	65.1%	13.4%	7.7%	5.7%	1.7%	5.0%	1.3%	100.0%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3.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

이 절에서는 남북한 교육통합 방식 및 고려사항과 교육통합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가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성별, 북한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와 남한 학력, 남한 계층, 남한 사회 거주기간 등 남한 사회 적응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가. 남북한 교육통합 방식 및 고려사항

통일 후 바람직한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6.4%가 ‘남북한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육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 쪽의 교육을 중심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장단점을 고려한 절충적 방안의 통합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실시했던 선행연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통합 방식으로 ‘남북한 병존형을 거쳐 제3의 대안적 모델로 단계적 추구’와 ‘제3의 대안적 통합형’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¹⁰⁾ 본 조사에서 남북한 교육통합에 일정 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본 조사에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이 선호하는 교육통합 방식은 주로 남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북한 교육통합 방식에 관해서는 북한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집단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집단은 북한에서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이나, 전체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완전히 새로운 교육제도와 내용 도입’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북한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점이 특징적이다. 북한에서의 교육연한이 짧을수록 새로운 제도와 교육내용에 적응하기 쉽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¹⁰⁾ 한만길 외,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2), p. 181.

반면, 전문학교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남북한 교육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육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보다 높았다. 이는 남북한 교육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북한에서 높은 학력을 가진 집단일수록 기존에 받았던 북한 교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대졸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남한식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았고, 소학교와 중학교 졸업 집단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V-9 변수별 남북한 교육통합 방식

		남한의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	남북한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육통합 방안 마련	북한의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유지	완전히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내용 도입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8	41	1	13	63	8.944
		%	12.7%	65.1%	1.6%	20.6%	100.0%	
	30대	빈도	11	48	1	6	66	
		%	16.7%	72.7%	1.5%	9.1%	100.0%	
	40대	빈도	10	59	0	6	75	
		%	13.3%	78.7%	0.0%	8.0%	100.0%	
50대 이상	빈도	10	50	0	11	71		
	%	14.1%	70.4%	0.0%	15.5%	100.0%		
성별	남	빈도	10	62	1	12	85	.979
		%	11.8%	72.9%	1.2%	14.1%	100.0%	
	여	빈도	28	128	1	23	180	
		%	15.6%	71.1%	0.6%	12.8%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0	1	0	4	5	26.402 **
		%	.0%	20.0%	.0%	80.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27	128	2	27	184	
		%	14.7%	69.6%	1.1%	14.7%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6	42	0	4	52	
		%	11.5%	80.8%	.0%	7.7%	100.0%	
대졸	빈도	6	27	0	1	34		
	%	17.6%	79.4%	.0%	2.9%	100.0%		

			남한의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	남북한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육통합 방안 마련	북한의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유지	완전히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내용 도입	전체	χ^2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22	104	0	22	148	11.229
		%	14.9%	70.3%	.0%	14.9%	100.0%	
	중고등학교 졸	빈도	1	22	0	5	28	
		%	3.6%	78.6%	.0%	17.9%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4	21	0	2	27	
		%	14.8%	77.8%	.0%	7.4%	100.0%	
대졸 이상	빈도	10	47	2	6	65		
	%	15.4%	72.3%	3.1%	9.2%	100.0%		
남한 계층	하층	빈도	26	115	2	21	164	2.379
		%	15.9%	70.1%	1.2%	12.8%	100.0%	
	중상층	빈도	13	83	0	15	111	
		%	11.7%	74.8%	.0%	13.5%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2	6	0	1	9	4.188
		%	22.2%	66.7%	.0%	11.1%	100.0%	
	1년~3년 이내	빈도	4	21	0	5	30	
		%	13.3%	70.0%	.0%	16.7%	100.0%	
	3년~5년 이내	빈도	4	24	0	5	33	
		%	12.1%	72.7%	.0%	15.2%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10	60	0	11	81	
		%	12.3%	74.1%	.0%	13.6%	100.0%	
10년 초과	빈도	19	87	2	14	122		
	%	15.6%	71.3%	1.6%	11.5%	100.0%		
전체	빈도	39	198	2	36	275		
	%	14.2%	72.0%	.7%	13.1%	100.0%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 중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북한 지역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표 V-10>과 같이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한 거주기간 1년 이내인 응답자와 1년~3년인 응답자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고, 남한 거주기간 3년~5년, 5년~10년, 10년 초과인 응답자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였다. 즉, 거주기간 3년 이내인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교육내용 차이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감'을 꼽은 비율이 높았고, 거주기간 3년 이상인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도, 정책에 대한 판단과 선택이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응 초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새로운 지식습득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보다 거시적인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정책으로 관심이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거주기간 5년 이내의 응답자의 수가 5년 이상 응답자의 수보다 상당히 적고, 특히 거주기간이 1년 이내인 응답자는 총 9명에 불과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10 변수별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북한 지역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1순위)

		새로운 제도, 정책에 대한 판단과 선택이 어려움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교육내용 차이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감	교육 방법의 차이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북한 출신 학생, 교사에 대한 차별 우려	남북한의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30	9	15	5	6	0	65
		%	46.2%	13.8%	23.1%	7.7%	9.2%	0.0%	100.0%
	30대	빈도	35	11	11	2	5	2	66
		%	53.0%	16.7%	16.7%	3.0%	7.6%	3.0%	100.0%

		새로운 제도, 정책에 대한 판단과 선택이 어려움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교육내용 차이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감	교육 방법의 차이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북한 출신 학생, 교사에 대한 차별 우려	남북한의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	전체	χ^2
연령대	40대	빈도 42 % 51.2%	7 8.5%	18 22.0%	7 8.5%	6 7.3%	2 2.4%	82 100.0%	21.924
	50대 이상	빈도 62 % 72.9%	7 8.2%	10 11.8%	1 1.2%	4 4.7%	1 1.2%	85 100.0%	
성별	남	빈도 54 % 61.4%	8 9.1%	13 14.8%	5 5.7%	8 9.1%	0 0.0%	88 100.0%	5.181
	여	빈도 109 % 54.5%	25 12.5%	40 20.0%	8 4.0%	13 6.5%	5 2.5%	200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0 % .0%	1 20.0%	2 40.0%	0 .0%	2 40.0%	0 .0%	5 100.0%	18.068
	소학교, 중학교	빈도 117	22	36	9	10	4	198	
		% 59.1%	11.1%	18.2%	4.5%	5.1%	2.0%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34	5	10	3	6	1	59	
		% 57.6%	8.5%	16.9%	5.1%	10.2%	1.7%	100.0%	
	대졸	빈도 18	6	6	3	3	0	36	
% 50.0%		16.7%	16.7%	8.3%	8.3%	.0%	100.0%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91 % 56.5%	23 14.3%	26 16.1%	9 5.6%	10 6.2%	2 1.2%	161 100.0%	18.086
	중고등학교 졸	빈도 17	6	5	0	2	2	32	
		% 53.1%	18.8%	15.6%	.0%	6.3%	6.3%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18	2	5	2	1	1	29	
		% 62.1%	6.9%	17.2%	6.9%	3.4%	3.4%	100.0%	
	대졸 이상	빈도 35	3	17	4	7	0	66	
% 53.0%		4.5%	25.8%	6.1%	10.6%	.0%	100.0%		
남한 계층	하층	빈도 107 % 59.8%	22 12.3%	29 16.2%	8 4.5%	11 6.1%	2 1.1%	179 100.0%	3.599
	중상층	빈도 62 % 52.1%	12 10.1%	25 21.0%	7 5.9%	10 8.4%	3 2.5%	119 100.0%	

		새로운 제도, 정책에 대한 판단과 선택이 어려움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교육내용 차이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감	교육 방법의 차이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북한 출신 학생, 교사에 대한 차별 우려	남북한의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	전체	χ^2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4	3	2	0	0	0	9	35.251 *
		%	44.4%	33.3%	22.2%	.0%	.0%	.0%	100.0%	
	1년~3년 이내	빈도	12	9	8	2	0	0	31	
		%	38.7%	29.0%	25.8%	6.5%	.0%	.0%	100.0%	
	3년~5년 이내	빈도	23	4	4	0	6	0	37	
		%	62.2%	10.8%	10.8%	.0%	16.2%	.0%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47	7	20	5	8	3	90	
		%	52.2%	7.8%	22.2%	5.6%	8.9%	3.3%	100.0%	
	10년 초과	빈도	83	11	20	8	7	2	131	
		%	63.4%	8.4%	15.3%	6.1%	5.3%	1.5%	100.0%	
전체	빈도	169	34	54	15	21	5	298		
	%	56.7%	11.4%	18.1%	5.0%	7.0%	1.7%	100.0%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남북한 교육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남한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표 V-11>과 같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남한 교육을 받는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통합 교육과정과 교과서 준비’에 응답한 비율이 44.6%로 높았지만, ‘재정 확보 및 계획 수립’, ‘통일 대비 남한 교사 연수’, ‘남북한 주민 소통을 위한 남한 학부모·학생 교육 실시’ 등에도 비교적 고르게 답하였다. 30대 연령군에서는 다른 연령군보다 ‘재정 확보 및 계획 수립’에 응답한 비율이 10% 이상 높았다. 40대와 50대 이상 연령군에서는 ‘통합교육과정과 교과서 준비’, ‘통일 대비 남한 교사 연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대 이하 연령군보다 높았고 ‘남북한 주민 소통을 위한 남한 학부모·학생 교육 실시’,

‘북한 학부모 행정지원 체제 구축’ 등에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사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V-11 변수별 남북한 교육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남한의 사전 준비 과제(1순위)

		통합교육 과정과 교과서 준비	통일을 대비한 남한 교사 연수	교육 통합 대비 북한 학부모 행정지원 체제 구축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계획 수립	남북한 주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남한 학부모· 학생 교육 실시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29	11	4	12	9	65	23.739 *
		%	44.6%	16.9%	6.2%	18.5%	13.8%	100.0%	
	30대	빈도	28	8	3	20	7	66	
		%	42.4%	12.1%	4.5%	30.3%	10.6%	100.0%	
	40대	빈도	44	12	3	16	7	82	
		%	53.7%	14.6%	3.7%	19.5%	8.5%	100.0%	
	50대 이상	빈도	55	17	2	11	0	85	
		%	64.7%	20.0%	2.4%	12.9%	0.0%	100.0%	
성별	남	빈도	48	13	4	17	6	88	.577
		%	54.5%	14.8%	4.5%	19.3%	6.8%	100.0%	
	여	빈도	101	34	8	41	16	200	
		%	50.5%	17.0%	4.0%	20.5%	8.0%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1	1	1	2	0	5	11.263
		%	20.0%	20.0%	20.0%	40.0%	.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101	31	7	41	18	198	
		%	51.0%	15.7%	3.5%	20.7%	9.1%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33	10	4	10	2	59	
		%	55.9%	16.9%	6.8%	16.9%	3.4%	100.0%	
	대졸	빈도	21	6	0	6	3	36	
		%	58.3%	16.7%	.0%	16.7%	8.3%	100.0%	

		통합교육 과정과 교과서 준비	통합을 대비한 남한 교사 연수	교육 통합 대비 북한 학부모 행정지원 체제 구축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계획 수립	남북한 주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남한 학부모· 학생 교육 실시	전체	χ^2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83	25	7	32	14	161	8.259
		%	51.6%	15.5%	4.3%	19.9%	8.7%	100.0%	
	중고등학교 졸	빈도	14	7	2	5	4	32	
		%	43.8%	21.9%	6.3%	15.6%	12.5%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14	7	1	6	1	29	
		%	48.3%	24.1%	3.4%	20.7%	3.4%	100.0%	
대졸 이상	빈도	38	6	2	16	4	66	100.0%	
	%	57.6%	9.1%	3.0%	24.2%	6.1%			
남한 계층	하층	빈도	93	30	9	36	11	179	2.706
		%	52.0%	16.8%	5.0%	20.1%	6.1%		
	중상층	빈도	63	18	3	23	12	119	
		%	52.9%	15.1%	2.5%	19.3%	10.1%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4	1	0	3	1	9	10.299
		%	44.4%	11.1%	.0%	33.3%	11.1%		
	1년~3년 이내	빈도	15	4	1	8	3	31	
		%	48.4%	12.9%	3.2%	25.8%	9.7%		
	3년~5년 이내	빈도	20	5	3	6	3	37	
		%	54.1%	13.5%	8.1%	16.2%	8.1%		
	5년~10년 이내	빈도	45	15	3	16	11	90	
		%	50.0%	16.7%	3.3%	17.8%	12.2%		
	10년 초과	빈도	72	23	5	26	5	131	
		%	55.0%	17.6%	3.8%	19.8%	3.8%		
전체	빈도	156	48	12	59	23	298	100.0%	
	%	52.3%	16.1%	4.0%	19.8%	7.7%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다음으로,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진 후 교육통합 시 북한 주민들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어할 곳에 대해서는 다음 <표 V-12>와 같이 의미 있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2 변수별 남북한 통일 후 교육통합 시 자녀 교육 희망 지역

			남한 지역	북한 지역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33	5	27	65	8.101
		%	50.8%	7.7%	41.5%	100.0%	
	30대	빈도	44	5	17	66	
		%	66.7%	7.6%	25.8%	100.0%	
	40대	빈도	41	11	30	82	
		%	50.0%	13.4%	36.6%	100.0%	
	50대 이상	빈도	46	5	34	85	
		%	54.1%	5.9%	40.0%	100.0%	
성별	남	빈도	41	11	36	88	4.335
		%	46.6%	12.5%	40.9%	100.0%	
	여	빈도	118	15	67	200	
		%	59.0%	7.5%	33.5%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3	1	1	5	4.479
		%	60.0%	20.0%	20.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116	15	67	198	
		%	58.6%	7.6%	33.8%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28	6	25	59	
		%	47.5%	10.2%	42.4%	100.0%	
	대졸	빈도	17	4	15	36	
		%	47.2%	11.1%	41.7%	100.0%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89	12	60	161	2.662
		%	55.3%	7.5%	37.3%	100.0%	
	중고등학교 졸	빈도	17	5	10	32	
		%	53.1%	15.6%	31.3%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16	2	11	29	
		%	55.2%	6.9%	37.9%	100.0%	
	대졸 이상	빈도	36	7	23	66	
		%	54.5%	10.6%	34.8%	100.0%	

		남한 지역	북한 지역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전체	χ^2	
남한 계층	하층	빈도	97	13	69	179	1.814
		%	54.2%	7.3%	38.5%	100.0%	
	중상층	빈도	67	13	39	119	
		%	56.3%	10.9%	32.8%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6	0	3	9	4.584
		%	66.7%	.0%	33.3%	100.0%	
	1년~3년 이내	빈도	15	1	15	31	
		%	48.4%	3.2%	48.4%	100.0%	
	3년~5년 이내	빈도	21	4	12	37	
		%	56.8%	10.8%	32.4%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52	8	30	90	
		%	57.8%	8.9%	33.3%	100.0%	
	10년 초과	빈도	70	13	48	131	
		%	53.4%	9.9%	36.6%	100.0%	
전체	빈도	164	26	108	298		
	%	55.0%	8.7%	36.2%	100.0%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교육통합 시 남한 출신 교사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북한 출신 교사보다 남한 출신 교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40대가 남한 출신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40대는 또한 남한 출신 교사에 대한 거부감도 연령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연령집단은 현재 중고등학생의 학부모 연령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자녀들이 남한 교육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학부모들의 경우 남한 출신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 사고방식,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 출신 교사들에게는 이질감을 느끼고 배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20대 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 연령집단에서는 남한 출신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40.6%로 4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선호도가 높음과 동시에 거부감도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20대 이하 연령집단은 실제로 학령기에 해당하거나 남한에서 최근 학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결과는 직접적인 교육 당사자의 경우, 남한 출신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부에서는 거부감도 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수용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많았다. 이는 고연령층 집단의 경우, 북한식 통제방식에 익숙하여 통합의 과정에서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V-13 변수별 남한 교사 선호

		북한 출신 교사 보다는 남한 출신 교사에게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남한 출신 교사를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큰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문화, 사고방식,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 출신 교사들에게는 이질감을 느끼고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수용할 것이다	전체	χ^2	
연령 대	20대 이하	빈도	26	13	10	15	64	18.506 *
		%	40.6%	20.3%	15.6%	23.4%	100.0%	
	30대	빈도	23	24	3	15	65	
		%	35.4%	36.9%	4.6%	23.1%	100.0%	
	40대	빈도	35	25	3	16	79	
		%	44.3%	31.6%	3.8%	20.3%	100.0%	
	50대 이상	빈도	30	14	6	27	77	
		%	39.0%	18.2%	7.8%	35.1%	100.0%	
성별	남	빈도	71	42	10	48	171	1.471
		%	41.5%	24.6%	5.8%	28.1%	100.0%	
	여	빈도	43	34	12	25	114	
		%	37.7%	29.8%	10.5%	21.9%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2	1	1	1	5	7.575
		%	40.0%	20.0%	20.0%	20.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75	49	18	51	193	
		%	38.9%	25.4%	9.3%	26.4%	100.0%	

			북한 출신 교사 보다는 남한 출신 교사에게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남한 출신 교사를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큰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문화, 사교방식,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 출신 교사들에게는 이질감을 느끼고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수용할 것이다	전체	χ^2	
북한 학력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20	18	3	11	52	7.860	
		%	38.5%	34.6%	5.8%	21.2%	100.0%		
	대졸	빈도	17	8	0	10	35		
	%	48.6%	22.9%	.0%	28.6%	100.0%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63	38	9	43	153		
		%	41.2%	24.8%	5.9%	28.1%	100.0%		
	중고등학교 졸	빈도	10	8	6	7	31		
		%	32.3%	25.8%	19.4%	22.6%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11	9	2	6	28		
		%	39.3%	32.1%	7.1%	21.4%	100.0%		
남한 계층	대졸 이상	빈도	27	18	5	15	65		3.904
		%	41.5%	27.7%	7.7%	23.1%	100.0%		
	하층	빈도	71	42	10	48	171		
	%	41.5%	24.6%	5.8%	28.1%	100.0%			
중상층	빈도	43	34	12	25	114			
	%	37.7%	29.8%	10.5%	21.9%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5	3	0	1	9	13.335	
		%	55.6%	33.3%	.0%	11.1%	100.0%		
	1년~3년 이내	빈도	11	7	2	9	29		
		%	37.9%	24.1%	6.9%	31.0%	100.0%		
	3년~5년 이내	빈도	16	3	5	12	36		
		%	44.4%	8.3%	13.9%	33.3%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35	23	5	25	88		
	%	39.8%	26.1%	5.7%	28.4%	100.0%			
전체	10년 초과	빈도	47	40	10	26	123		
		%	38.2%	32.5%	8.1%	21.1%	100.0%		
	빈도	114	76	22	73	285			
	%	40.0%	26.7%	7.7%	25.6%	100.0%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나. 남북한 교육통합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

다음으로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남한 대학 입학 시 북한 출신 학생에게 우대정책 제공 여부, 새로운 통합교육과정 도입 시 유예기간, 남북한 학생들의 교육적 이동 제한, 기존 북한 교사 고용 정책 등 네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통일 이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북한 출신 학생이 남한 대학에 입학할 때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데 대한 의견은 모든 집단별로 응답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집단별로 40~50%의 응답자들이 일정 기간 북한 출신 학생들에 대해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북한 출신 학생 우대 정책

		남북한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통일 이후 장기간 북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남북한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북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학생 모두 동등한 학력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15	35	15	65	7.419
		%	23.1%	53.8%	23.1%	100.0%	
	30대	빈도	14	30	22	66	
		%	21.2%	45.5%	33.3%	100.0%	
	40대	빈도	23	33	26	82	
		%	28.0%	40.2%	31.7%	100.0%	
50대 이상	빈도	14	37	34	85		
	%	16.5%	43.5%	40.0%	100.0%		
성별	남	빈도	38	76	65	179	2.921
		%	21.2%	42.5%	36.3%	100.0%	
	여	빈도	28	59	32	119	
		%	23.5%	49.6%	26.9%	100.0%	

		남북한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이후 장기간 북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남북한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북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학생 모두 동등한 학력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체	χ^2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1 % 20.0%	3 60.0%	1 20.0%	5 100.0%	6.508
	소학교, 중학교	빈도 43 % 21.7%	91 46.0%	64 32.3%	198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9 % 15.3%	29 49.2%	21 35.6%	59 100.0%	
	대졸	빈도 13	12	11	36	
		% 36.1%	33.3%	30.6%	100.0%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27 % 16.8%	70 43.5%	64 39.8%	161 100.0%	11.881
	중고등학교 졸	빈도 10 % 31.3%	15 46.9%	7 21.9%	32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6 % 20.7%	16 55.2%	7 24.1%	29 100.0%	
	대졸 이상	빈도 19	32	15	66	
		% 28.8%	48.5%	22.7%	100.0%	
남한 계층	하층	빈도 38 % 21.2%	76 42.5%	65 36.3%	179 100.0%	2.921
	중상층	빈도 28 % 23.5%	59 49.6%	32 26.9%	119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1 % 11.1%	7 77.8%	1 11.1%	9 100.0%	8.969
	1년~3년 이내	빈도 4	17	10	31	
		% 12.9%	54.8%	32.3%	100.0%	
	3년~5년 이내	빈도 8	18	11	37	
		% 21.6%	48.6%	29.7%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26	35	29	90	
% 28.9%		38.9%	32.2%	100.0%		
10년 초과	빈도 27	58	46	131		
	% 20.6%	44.3%	35.1%	100.0%		
전체	빈도 66	135	97	298		
	% 22.1%	45.3%	32.6%	100.0%		

* p<.05, ** p<.01, *** p<.001

출처: 필자 작성

통일 이후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집단별로 응답 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의 모든 집단에서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하는데 있어 3년 이상의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집단에서는 ‘1년~3년’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3년 이상’이라는 응답률과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표 V-15 변수별 통합교육과정 도입 시기

		즉각 도입	1년 이내	1~3년	3년 이상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8	5	21	31	65	13.462
		%	12.3%	7.7%	32.3%	47.7%	100.0%	
	30대	빈도	12	2	17	35	66	
		%	18.2%	3.0%	25.8%	53.0%	100.0%	
	40대	빈도	18	11	19	34	82	
		%	22.0%	13.4%	23.2%	41.5%	100.0%	
	50대 이상	빈도	17	10	30	28	85	
		%	20.0%	11.8%	35.3%	32.9%	100.0%	
성별	남	빈도	36	20	49	74	179	2.952
		%	20.1%	11.2%	27.4%	41.3%	100.0%	
	여	빈도	19	8	38	54	119	
		%	16.0%	6.7%	31.9%	45.4%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1	0	1	3	5	4.660
		%	20.0%	.0%	20.0%	60.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33	18	63	84	198	
		%	16.7%	9.1%	31.8%	42.4%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12	7	16	24	59	
		%	20.3%	11.9%	27.1%	40.7%	100.0%	
	대졸	빈도	9	3	7	17	36	
		%	25.0%	8.3%	19.4%	47.2%	100.0%	

		즉각 도입	1년 이내	1~3년	3년 이상	전체	χ^2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28	21	53	59	161	16.396
		%	17.4%	13.0%	32.9%	36.6%	100.0%	
	중고등학교 졸	빈도	8	1	11	12	32	
		%	25.0%	3.1%	34.4%	37.5%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6	3	6	14	29	
		%	20.7%	10.3%	20.7%	48.3%	100.0%	
대졸 이상	빈도	10	2	15	39	66		
	%	15.2%	3.0%	22.7%	59.1%	100.0%		
남한 계층	하층	빈도	36	20	49	74	179	2.952
		%	20.1%	11.2%	27.4%	41.3%	100.0%	
	중상층	빈도	19	8	38	54	119	
		%	16.0%	6.7%	31.9%	45.4%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3	2	1	3	9	15.224
		%	33.3%	22.2%	11.1%	33.3%	100.0%	
	1년~3년 이내	빈도	4	5	11	11	31	
		%	12.9%	16.1%	35.5%	35.5%	100.0%	
	3년~5년 이내	빈도	7	4	12	14	37	
		%	18.9%	10.8%	32.4%	37.8%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23	5	28	34	90	
		%	25.6%	5.6%	31.1%	37.8%	100.0%	
10년 초과	빈도	18	12	35	66	131		
	%	13.7%	9.2%	26.7%	50.4%	100.0%		
전체	빈도	55	28	87	128	298		
	%	18.5%	9.4%	29.2%	43.0%	100.0%		

* p<.05, ** p<.01, *** p<.001

출처: 저자 작성

통일 이후 일정 기간 전학과 같은 학생들의 교육적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집단별로 응답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집단에서 ‘통일 직후에는 교육적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거주기간 1년 이내 집단에서는 세 가지 선택지의 응답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V-16 변수별 남북한 학생들의 교육적 이동 제한 정책에 대한 견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남북한 학생들 간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통일 직후에는 교육적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 허용해야 한다	통일 직후부터 전면 허용해야 한다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18	27	20	65	10.840
		%	27.7%	41.5%	30.8%	100.0%	
	30대	빈도	6	38	22	66	
		%	9.1%	57.6%	33.3%	100.0%	
	40대	빈도	12	39	30	81	
		%	14.8%	48.1%	37.0%	100.0%	
	50대 이상	빈도	21	39	25	85	
		%	24.7%	45.9%	29.4%	100.0%	
성별	남	빈도	35	77	66	178	4.913
		%	19.7%	43.3%	37.1%	100.0%	
	여	빈도	22	66	31	119	
		%	18.5%	55.5%	26.1%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2	3	0	5	5.349
		%	40.0%	60.0%	.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39	99	60	198	
		%	19.7%	50.0%	30.3%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10	26	23	59	
		%	16.9%	44.1%	39.0%	100.0%	
	대졸	빈도	6	15	14	35	
%		17.1%	42.9%	40.0%	100.0%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남북한 학생들 간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통일 직후에는 교육적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 허용해야 한다	통일 직후부터 전면 허용해야 한다	전체	χ^2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33	76	52	161	8.655
		%	20.5%	47.2%	32.3%	100.0%	
	중고등학교 졸	빈도	9	16	7	32	
		%	28.1%	50.0%	21.9%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8	11	10	29	
		%	27.6%	37.9%	34.5%	100.0%	
대졸 이상	빈도	6	36	24	66		
	%	9.1%	54.5%	36.4%	100.0%		
남한 계층	하층	빈도	35	77	66	178	4.913
		%	19.7%	43.3%	37.1%	100.0%	
	중상층	빈도	22	66	31	119	
		%	18.5%	55.5%	26.1%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3	3	3	9	4.799
		%	33.3%	33.3%	33.3%	100.0%	
	1년~3년 이내	빈도	4	14	13	31	
		%	12.9%	45.2%	41.9%	100.0%	
	3년~5년 이내	빈도	6	19	12	37	
		%	16.2%	51.4%	32.4%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16	41	32	89	
		%	18.0%	46.1%	36.0%	100.0%	
10년 초과	빈도	28	66	37	131		
	%	21.4%	50.4%	28.2%	100.0%		
전체	빈도	57	143	97	297		
	%	19.2%	48.1%	32.7%	100.0%		

* p<.05, ** p<.01, *** p<.001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남북한 교육통합 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통일 이후 북한 현직교사의 재임용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구동독 교원을 거의 80%나 재임용하여 빠른 교육적 안정은 이루었으나 재임용 후 구동독 교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하여 민주적 가치를 체득하지 못한 구동독 교원이 민주주의적 교육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다.¹¹⁾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한 교육 통합 논의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의 현직 교사 중 인권탄압이나 정치적 활동을 했던 경력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 심사를 거쳐 해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사상교과를 담당할 교원들도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재 북한의 정치사상 교과의 교사들은 북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든지 현재 북한 교육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한편, 특정한 교과나 신분의 교사를 처음부터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기보다는 북한체제에서의 활동은 불문에 부치고 북한 교사 전원을 재임용 대상에 포함하는 대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¹²⁾ 이러한 의견들은 남한 학계 내의 의견인데, 실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져 교원통합 문제가 제기된다면 북한 교사 재임용 문제가 북한 지역의 교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교사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표 V-17>과 같이 북한 최종학력과 남한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심사를 거쳐 자

11)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2012), p. 58.

12) 김정원 외, 『남북한 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사 재교육 방안』, p. 66.

격을 갖춘 자를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학력수준에 따라 응답률에 차이가 있었다.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만을 이수한 집단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집단보다 심사를 거쳐 재고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집단에서는 '전원 재고용'과 '간부급과 정치사상 교과 담당교사를 제외한 교사 전원 재고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중등교육 이수 집단보다 더 높았다. 특히 대졸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재심사 과정 없이 전원 재고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제 교원 대학(유치원 및 초등 교원)이나 4년제 사범대학(중등 및 대학 교원) 이상을 졸업해야 한다. 북한 학력별 응답의 차이는 북한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북한 학력의 가치를 중요하다고 보고 남북한 통합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에서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자를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남한 학력수준에 따라 응답률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한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집단을 보면, 남한 취득 학력이 높을수록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자를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전원 재고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다만, 전문학교·기능대학 졸업자 집단에서는 '전원 재고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남한에서 고학력을 취득한 집단일수록 조건 없는 재고용보다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집단이 실제로 남한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남북한 교육의 차이를 경험한 집단으로, 남한에서 자신이 취득한 학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한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집단의 경우 '모든 교사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그중 자격을 갖춘 자를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표 V-17 기존 북한 교사 재고용에 대한 견해

			재심사 과정 없이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	간부급을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	간부급과 정치사상 교과 담당 교사를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	모든 교사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그중 자격을 갖춘 자를 재고용	전체	χ^2
연령대	20대 이하	빈도	6	2	4	53	65	2.960
		%	9.2%	3.1%	6.2%	81.5%	100.0%	
	30대	빈도	4	3	5	54	66	
		%	6.1%	4.5%	7.6%	81.8%	100.0%	
	40대	빈도	10	4	5	63	82	
		%	12.2%	4.9%	6.1%	76.8%	100.0%	
50대 이상	빈도	9	2	7	67	85		
	%	10.6%	2.4%	8.2%	78.8%	100.0%		
성별	남	빈도	20	6	9	144	179	3.738
		%	11.2%	3.4%	5.0%	80.4%	100.0%	
	여	빈도	9	5	12	93	119	
		%	7.6%	4.2%	10.1%	78.2%	100.0%	
북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1	0	1	3	5	24.929 **
		%	20.0%	.0%	20.0%	60.0%	100.0%	
	소학교, 중학교	빈도	11	6	11	170	198	
		%	5.6%	3.0%	5.6%	85.9%	100.0%	
	전문학교, 대학 중퇴	빈도	8	5	5	41	59	
		%	13.6%	8.5%	8.5%	69.5%	100.0%	
대졸	빈도	9	0	4	23	36		
	%	25.0%	.0%	11.1%	63.9%	100.0%		
남한 학력	교육경험 없음	빈도	15	6	4	136	161	22.187 **
		%	9.3%	3.7%	2.5%	84.5%	100.0%	
	중고등학교 졸	빈도	3	3	4	22	32	
		%	9.4%	9.4%	12.5%	68.8%	100.0%	
	전문학교, 기능대학 졸	빈도	6	1	2	20	29	
		%	20.7%	3.4%	6.9%	69.0%	100.0%	
대졸 이상	빈도	4	0	9	53	66		
	%	6.1%	.0%	13.6%	80.3%	100.0%		

			재심사 과정 없이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	간부급을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	간부급과 정치사상 교과 담당 교사를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	모든 교사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그중 자격을 갖춘 자를 재고용	전체	χ^2
남한 계층	하층	빈도	20	6	9	144	179	3.738
		%	11.2%	3.4%	5.0%	80.4%	100.0%	
	중상층	빈도	9	5	12	93	119	
		%	7.6%	4.2%	10.1%	78.2%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빈도	0	1	0	8	9	17.596
		%	.0%	11.1%	.0%	88.9%	100.0%	
	1년~3년 이내	빈도	2	4	1	24	31	
		%	6.5%	12.9%	3.2%	77.4%	100.0%	
	3년~5년 이내	빈도	5	0	1	31	37	
		%	13.5%	.0%	2.7%	83.8%	100.0%	
	5년~10년 이내	빈도	10	1	6	73	90	
		%	11.1%	1.1%	6.7%	81.1%	100.0%	
	10년 초과	빈도	12	5	13	101	131	
		%	9.2%	3.8%	9.9%	77.1%	100.0%	
전체	빈도	29	11	21	237	298		
	%	9.7%	3.7%	7.0%	79.5%	100.0%		

* p<.05, ** p<.01, *** p<.001

출처: 저자 작성

4.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이들의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교육통합 방식 및 교육통합 관련 정책 쟁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령, 성별, 북한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와 남한 사회 거주기간, 남한 학력, 남한 계층 등 남한 사회 적응변수에 따라 이러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남북교육통합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남한의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보완적으로 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면접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연령대, 성별, 학력별, 계층별로 다양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및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관과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남북한 교육통합 방식 및 교육통합 관련 정책쟁점 등에 관해 집단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 중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보이는 항목이 있고, 교육통합의 방식 및 정책쟁점에 관한 항목 중 북한 학력과 남한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교육 및 교육통합에 관한 인식은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이 비교적 균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한 조사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다. 절반 이상이 '대학 졸업', 45% 이상이 '대학원 졸업'이라는 교육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는 남북한 통일 이후에 고등교육 기회의 배분이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교육에 비해 남한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입시 위주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을 남한 교육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남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일반적인 남한 주민의 교육만족도보다 높다. 남한 교육의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40% 이상이 각각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입시 위주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을 지적하였고, 특히 남한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있거나 최근에 학교 교육을 경험했을 연령대인 20대 이하에서는 입시 위주 교육을 남한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남한의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의식은 북한 교육의 장점으로 65% 이상의 응답자가 사교육이 없고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응답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편향된 정치사상 교육과 같은 북한 교육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남한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진학 목적의 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됨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통합의 방법과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6%가 남북한 교육의 장단점을 고려한 절충적 통합을 선호했으며, 북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절충적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더 컸다. 이에 비해 남한 교육 중심의 통합방안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13%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교육통합은 남한 교육 중심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북한의 기존 교육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교육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남북한 교육통합 시 북한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과반수가 '새로운 제도, 정책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어려움'을, 약 20%의 응답자가 '교육내용 차이로 인한 새로운 지식, 정보 습득 부담'을 꼽았다. 특히 남한 거주기간이 3년 이내로 비교적 짧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지식,

정보 습득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북한 통합 초기에 북한 주민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지식과 정보 습득에 관한 인식의 확장 및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식 습득 방식에 관한 교육, 사회통합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적, 문화적 조치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연령대, 성별, 계층, 학력에 상관없이 과반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통일 이후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곳으로 남한 지역을 선택했다. 또한 약 40%의 응답자가 남한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선호를 나타냈고, 7% 정도가 거부감을 나타냈다. 특히 학부모 연령층인 40대에서 남한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거부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 당사자 연령층인 20대 이하에서는 남한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거부감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남북한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진학, 전학 등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이동의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교육적 이동 허용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 학력 인정, 입학 선발기준, 남북한 교육시설과 교원 자질 등 학교 간 격차 등의 문제가 정책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의 학교에서 남한 출신 및 북한 출신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향후 남북한 교육통합 논의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관해 집단 간 차이가 없이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북한 학생이 남한 대학 입학 시 우선선발원이나 인원할당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연령대, 성별, 계층, 학력에 상관없이 45%가 '일정 기간 우대가 필요하다', 22%가 '장기간 우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북한 학생들이 남한의 학교에

서 수학하게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상당한 기간 우대혜택을 받기를 기대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는 실제로 남북 간의 교육이동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남한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배분과 선발기준을 둘러싸고 남북한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교육과정을 대폭 수정한 통합교육과정을 북한 지역에 도입할 경우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에 못 미쳤고, ‘1년~3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29%, ‘3년 이상 장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3%에 달했다. 연령대, 성별,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과반수의 응답자가 남한 학교 적응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움’을 꼽았다는 점과 연결시켜 보면, 통일 이후 통합교육과정을 북한지역에 적용할 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과 학생들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교육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과 함께, 통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과도기를 두고 단계별로 통합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남북한 지역 간의 교육적 목적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약 과반수가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친 후에 교육적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약 20% 정도는 통일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육적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연령대, 성별,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북한 통일 방식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남북한 간의 교육적 이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남한 주도 통일 시 북한 교사 재임용 정책에 관해서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자를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로, 특정 직급, 교과 교사를 배제하지 않되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는 남북한

학력에 따른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북한 학력 기준 고학력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 없는 재고용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남한 학력 기준 고학력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결국 남북한 모두 고등교육 이수 집단이 자신의 학력에 대한 인정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남한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교사의 재임용 문제는 남북 교육통합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정책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쟁점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얽혀있다. 북한의 체제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교육 간부 및 정치사상 교육 담당교사들에게 심사 및 재교육의 과정을 거쳐 교직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와 대다수 교사들에게 재고용을 위한 심사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그것이다. 본 조사결과를 보면 ‘간부급 또는 정치사상 교과 담당 교사의 재고용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본 응답자는 10% 정도에 불과했으며, ‘심사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80% 정도로 나타난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절차, 심사에 따른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교육 및 교육통합에 관한 인식은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이 비교적 균질적이라는 점이 이 조사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결론이다. 연령대, 성별, 북한 학력, 남한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관,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 남북한 교육통합 방식, 교육통합 관련 정책쟁점 등에 관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북한 교육통합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본 조사 결과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통합의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남한식 교육의 일방적인 적용이 아닌 서로의 장점을 살린 교육통합, 단기간 내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통

합, 북한 주민과 교사학생들이 받아온 기존 교육에 대한 존중과 관련 자격의 인정 등이 그러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통합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 교육통합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한 사회 내에서 해나갈 수 있는 교육통합의 준비를 먼저 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준비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통합 과제 중의 하나는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이해를 넓히고 교육통합을 비롯한 각 분야의 사회통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 문제는 더 이상 한민족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다양한 구성원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통일 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통일 한국의 민주적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 행동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의 교육부터 민주주의 역량, 다양성의 존중,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 능력 등 21세기 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본 조사에서 남한 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입시위주의 경쟁주의적 교육 풍토 개선과 과도한 사교육 개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제, 교육과정, 교원 양성 및 재교육, 교육행정체제 등 남북 교육통합의 구체적인 방식과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구체적인 통합방안 준비와 남북한 교육통합을 대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예산·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및 교육통합에 대한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주로 남한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교육통합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였다. 실제로 교육통합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교육 경험을 지닌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교육통합의 분야별로 교육통합에 관한 남북한 주민들의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교육통합 방안을 도출하는데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히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비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출발점으로서 우리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남과 북의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중 상호 적대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공존과 협력,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재서술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평화통일 교육을 확대하고 도덕 및 사회과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과목의 기본 관점으로 평화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의 시각을 도입해야 한다. 통일교육, 평화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의 확대는 남북한 사회와 주민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정, 동질성의 추구를 통해 남북한 주민의 내적 통합을 기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안, 교수 매체들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남북한 교육과정의 공통성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차후 남북한 공동의 통합교과서와 교재의 개발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정치사상과 관련이 적은 분야의 교육내용 조정과 교재 공동개발로부터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통합의 정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넷째, 통일 이후 완전한 교육통합에 이르는 과도기 단계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북한에 대한 교육지원과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의 교육 격차와 남북한 교육의 이질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 북핵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되면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현재 북한의 교육재정이 취약하고 교육시설이 낙후되어있는 실정이므로, 통일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의 교육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간의 지나친 교육 격차는 남북한 교육통합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지만, 통일 이후 북한지역 거주 주민의 남한 지역으로의 대거 이주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북한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교육 재정 지출과 관련된 남한 지역 주민의 불만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¹³⁾ 현재 남북한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시점에서 그 격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교육 부문의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의 교육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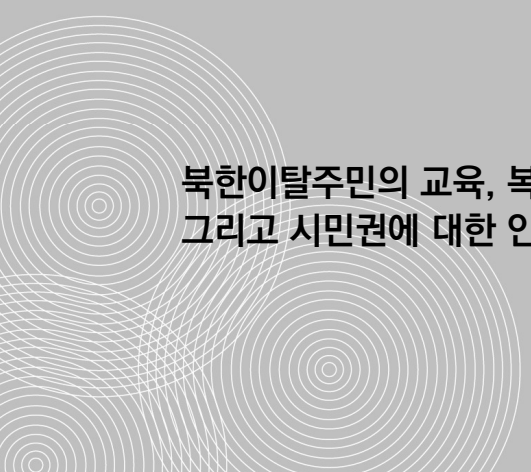
또한, 경제난 이후 쉽게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교육적 공백은 청소년들이 통일한반도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시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영유아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통일 1세대들의 신체적, 지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¹⁴⁾

13) 류방란 외, 『교육정책여건 분석: 사회변화를 중심으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p. 146.

14) 한민길 외,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p. 4.

Ⅵ. 심층분석(2):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특징과 통일 이후 복지정책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1. 연구주제와 방법

가. 연구주제

통일이 실제 닥쳤을 때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비용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서독은 통일을 결단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해 그리 걱정하지 않았다. 당시 서독의 재정 상황이 매우 건전했고 동독의 경제 상황도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좋았기 때문에 동독의 재산을 처분하면 적지 않은 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유럽과 서독의 민간 자본 투자로 동독의 산업을 복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 없이도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통일 후 20년 동안 동독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2조 유로(2.3조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통일 30년이 다 되어 오는 오늘도 통일세가 존속되고 있다. 독일 통일에 지불한 비용 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이 지출된 분야는 사회복지였다. 자료에 의하면 인프라 재건, 경제 활성화 지원 기부금, 기타 지출과 같은 물리적 개발과 연관된 지출 50.8%, 사회보장성 지출 49.2%가 들었다.¹⁵⁾ 독일 복지제도의 통합은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동독에 그대로 확장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과 거의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통일 후 북한에서 복지정책의 실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독일 통일 시 너무 무리한 복지비용을 지출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로 인해 동독의 정

¹⁵⁾ 1991년~2003년 기간 독일 통일 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도로, 철도, 도시개발 등 인프라 재건 지출 1,600억 유로(12.5%),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지원 등 경제활성화 지원지출 900억 유로(7%), 연금, 노동시장보조, 육아보조 등 사회보장성 지출 6,300억 유로(49.2%), 통일기금, 주 재정균형 등 임의 기부금지출 2,950억 유로(23.0%), 인건비 및 국방비 등 기타 지출 1,050억 유로(8.2%)이다. 통일부,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4』 (서울: 통일부, 2013), p. 111.

치적 안정이 보장되었다는 반론도 있다. 복지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만족감을 높여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독일 통일처럼 할 수 없다. 한국은 통일 당시의 독일에 비해 재정 건전성도 약하고 경제 규모도 크지 않다. 그리고 북한은 동독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발전 수준도 남한에 비해 20~40배 낮다. 앞으로 남북통일 시에도 사회보장성 지출에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조건에서 고도의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 들어 통일 과정에서 복지문제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지만 특히 복지정책에서는 정책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복지 요구와 기대수준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 접근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 주민의 복지경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가치관과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와 변화를 조사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를 통해 통일 시 남북한 일시적 분리운영의 가능성과 북한 주민의 복지기대 수준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조사연구 결과는 앞으로 통일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 선행연구

지난 시기 진행된 통일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남북한 복지제도 통합의 기초연구로서 북한의 복지제도와 현 실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남북한 복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복지제도의 특징과 구조가 밝혀졌다. 여러 국제

기구의 보고서와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조사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복지제도는 형식만 남아있을 뿐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로, 남북한 복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금, 고용 보험,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통합 방안, 법제 분야 통합 방안,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방안 등이 연구되었다. 셋째로, 통일자금 복지재정 추정 연구가 진행되었다. 복지태도는 복지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의식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2006년부터 진행하는 한국 복지 패널조사에서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 포함 58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회조사(ISSP)에서 복지태도와 관련한 여러 문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1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uxembourg Income Study)는 복지실태에 대한 조사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엔의 1994년, 2008년 북한 인구조사 과정에 북한 주민의 복지실태를 일부 조사했지만 복지의식조사에 관한 문항은 없었다.

다. 복지태도의 개념과 이론

복지태도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에 대한 규범적 지향성을 통해 복지의 책임주체 및 복지기능의 정당성, 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 원리의 선호성 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실천의지와 상호 결합을 통해 형성되고 학습된 경향’을 말한다.¹⁶⁾

¹⁶⁾ 류진석,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4호 (2014), p. 83.

복지태도의 하위 요소로 가치 차원과 태도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치 차원은 복지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가치 차원 요소로는 현실에서 평등 정도 인식, 빈곤 원인 인식, 계층 의식과 정치성향, 복지정당성 인식,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가치관 등이 있으며 태도 차원으로는 공공복지제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지지 정도, 복지책임의 주체(국가, 시장, 공동체 등)에 대한 인식, 복지영역별(노인, 장애인, 아동, 빈곤층 등) 재정지출에 대한 의견, 복지수급 대상 집단에 대한 국가책임지지도, 복지조세 부담 의사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복지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역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있다. 또한 복지 이해관계,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가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 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정치 성향이 현실적 복지정책의 선호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태도는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전승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적 성격을 띤다.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은 70여 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살아왔으므로 복지태도도 차이날 것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의 확대와 발전은 정치적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사회복지는 주민들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의 영향을 받으며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표출되고 실현된다.

사회주의는 이념상 사회적 평등을 주장한다. 평등에 관한 이념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 과정을 직접 조직하며 창조된 부도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할한다. 그러므로 주민복지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에 의한 식량공급, 주택공급, 의료보건, 육아와 교육이 무료로 보장되는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이를 자본주의와 대립되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선전을 강도 높게 진행해왔다. 그러한 영향으로 북한에서 복지는 전적으로 국가책임이라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북한 복지시스템은 대부분 작동하지 않고 있으나 시스템은 여전히 남아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주민들은 시장 활동을 통해 자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20여 년 지속되었으므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의식과 태도도 적지 않게 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과 태도는 사회복지의 실현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통일 시 복지정책에서 쟁점으로 되는 것은 통일 이후 남북한 복지제도의 통합 시기에 관한 문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2000년대 초에는 독일과 같이 즉시 남북한 복지제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점진적으로 복지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을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¹⁷⁾ 그리고 복지의 수준도 북한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낮은 단계로부터 시작하며 발전수준에 따라 점차 높여나가야 복지재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통일 된 다음에 북한 주민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된 상황에서 남북의 차이나는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유의해야 할 문제이다.

¹⁷⁾ 김석진·이규창,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15); 연하청·황나미, 『통일 대비 사회복지 및 보건 정책과제』(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전홍택 편,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 방안』(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

라.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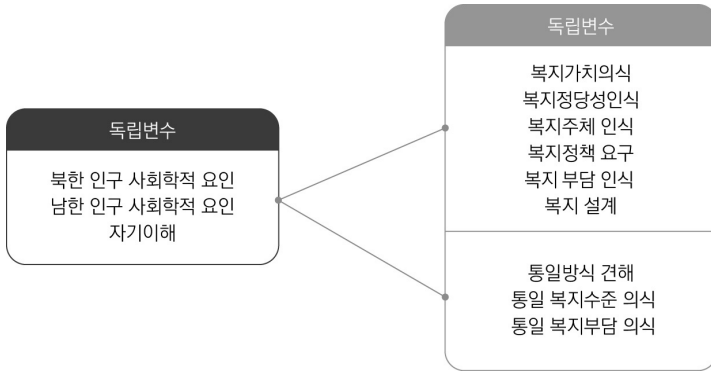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복지태도를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복지태도와 통일 방식에 대한 의식, 복지욕구 지형을 추론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의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복지태도의 변화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발전과 평등분배에 대한 인식, 현실적 평등성 인식, 빈곤의 원인에 대한 견해, 사회복지 실시 목적과 복지의 정당성 인식,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와 요구, 복지 부담에 대한 요구, 복지제도에 대한 지향을 조사하려고 한다. 또한 통일방식에 대한 견해와 통일 후 복지제도의 선호차, 통일 후 복지수준과 복지비용 조달에 관한 요구를 조사 분석하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는 북한 및 남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 연령, 학력, 정치이념을 남북 요인으로 분리해서 조사 분석하려고 한다. 탈북 연령, 북한 학력, 그리고 북한에서의 정치이념은 당원 유무로 대치하여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 정치신분과 경제적 계층, 시장에서 장사활동 참여 유무의 영향도 분석해보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면 북한에서 가졌던 복지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게 된다. 남한에서 복지태도는 연령, 남한 거주기간, 남한 교육, 정치적 성향, 남한에서의 수입, 종사상 지위, 계층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림 VI-1 연구모형



출처: 필자 작성

통일 이후 북한 복지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의식의 특징, 특히 남한 주민과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주민 조사를 별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기도민 복지의식과 비교 고찰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설문 문항을 설계할 때 필요한 문항은 2012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조사 발행한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¹⁸⁾의 조사 문항과 같게 만들고 경기도민 조사결과 보고서에 서술된 결과와 단순 비교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자기이해

자기이해는 복지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해관계이다. 자신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지 제공자인지, 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복지인식과 태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자기

¹⁸⁾ 경기도민 복지인식 조사는 2012년 3월 경기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517명, 인터넷조사 583명 진행하였으며 그 중 1,061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이준우 외, 『경기도민 복지인식 조사와 정책방향』 (경기: 경기복지재단, 2012), p. 43.

이해 변수는 가구 내 영유아 수, 초중고생 수, 대학생 수, 장애인 수, 노인 수와 같은 가구 내 복지 대상자 수와 복지지위를 나타내는 복지 수급자, 복지 납세자, 복지 제공자, 복지 종사자 여부로 측정했다.

(1) 가구 내 복지대상자수

자기이해를 나타내는 가구 내 복지 대상자 수를 조사한 데 의하면 가구 내 영유아 수는 ‘없음’ 241명, ‘1명’ 39명, ‘2명’ 14명, ‘3명 이상’ 3명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초등중등학교 학생 수는 ‘없음’ 201명, ‘1명’ 63명, ‘2명’ 30명, ‘3명 이상’ 3명이었다. 가구 내 대학생·대학원생은 ‘없음’ 198명, ‘1명’ 87명, ‘2명’ 10명, ‘3명 이상’ 2명이었다. 가구 내 노인 수는 ‘없음’ 239명, ‘1명’ 44명, ‘2명’ 14명이었다. 경기도민과 비교할 때 노인 수가 크게 차이 났다.(<표 VI-1> 참조)

표 VI-1 가구 내 복지대상자 수

		북한이탈주민		경기도민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가구내 영유아 수	없음	241	81.1	629	74.4
	1명	39	13.1	156	18.5
	2명	14	4.7	54	6.4
	3명 이상	3	1.0	6	0.7
가구 내 초등중등 학생 수	없음	201	67.7	536	60.4
	1명	63	21.2	185	20.8
	2명	30	10.1	155	17.5
	3명 이상	3	1.0	3	0.3
가구 내 대학 (대학원)생 수	없음	198	66.7	507	59.4
	1명	87	29.3	238	27.9
	2명	10	3.4	94	11.0
	3명 이상	2	0.7	14	1.6

		북한이탈주민		경기도민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가구 내 노인 수	없음	239	80.5	408	48.2
	1명	44	14.8	281	33.2
	2명	14	4.7	158	18.6
합계		297	100.0	0	0

출처: 필자 작성

(2) 복지 지위

가구원 내 복지 수급자 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45명(48.8%)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 내 실업급여를 받아 본 경험 여부는 56명(18.9%)이었으며 장애인 수당 수급자 여부는 28명(9.4%)이었다.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가구 구성원 중 복지 수급자를 조사한 것이고 경기도민은 본인에 한해서 조사한 것이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중 거의 절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경기도민 3.6%에 비해 매우 높았다.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도 10% 이상 많고 장애인 수급자도 7% 높아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복지 수혜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표 VI-2> 참조)

표 VI-2 가구 내 수급자 여부

		북한이탈주민(가구 내)		경기도민(본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가구원 내	예	145	48.8	36	3.6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니오	147	49.5	976	96.4
수급자 여부	무응답	5	1.7		
가구원 내	예	56	18.9	41	4.1
실업급여를 받아본	아니오	225	75.8	966	95.9
경험 여부	무응답	16	5.4		
가구원 내	예	28	9.4	21	2.1
장애인 수당	아니오	252	84.8	986	97.9
수급자 여부	무응답	17	5.7		

출처: 필자 작성

가구의 복지 지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구원 내 고용주, 자영업자는 38명(12.8%)이며 그 중 노동자 고용비율은 22명(7.4%)이었다. 가구 내 사회복지종사자는 20명(6.7%)이었다.(〈표 VI-3〉 참조) 가구의 복지 지위도 경기도민에 비해 낮았다. 본인이 아닌 가구원 내 고용주 자영업자 비율이 낮았고 노동자 고용 여부는 30%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VI-3〉 참조)

표 VI-3 가구의 복지 지위

		북한이탈주민		경기도민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가구원 내 고용주(사장), 자영업자 여부	예	38	12.8	183	18.2
	아니오	244	82.2	824	81.8
	무응답	15	5.1		
가구원 내 노동자 고용 여부	예	22	7.4	374	37.3
	아니오	258	86.9	628	62.7
	무응답	17	5.7		
가구원 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여부	예	20	6.7	86	8.5
	아니오	261	87.9	921	91.5
	무응답	16	5.4		
	합계	297	100.0		

출처: 필자 작성

(3) 복지제도 가입 여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자기이해는 복지제도 참여 여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복지제도에 가입한 여부를 조사했다. 그에 의하면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119명(41.8%),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96명(3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39명(48.9%),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는 153명(54.1%), 세금 납입자는 112명(39.4%)으로 나타

났다.(<표 VI-4> 참조)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보다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것이 주목된다.

표 VI-4 복지제도 가입 여부

		빈도	퍼센트
국민연금 가입	예	119	41.8
	아니오	166	58.2
	합계	285	100.0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예	96	34.0
	아니오	186	66.0
	합계	282	100.0
국민건강보험 가입	예	139	48.9
	아니오	145	51.1
	합계	284	100.0
개인의료보험 가입	예	153	54.1
	아니오	130	45.9
	합계	283	100.0
세금 납입	예	112	39.4
	아니오	172	60.6
	합계	284	100.0

출처: 필자 작성

나.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의식

(1) 경제발전과 평등분배 의식

경제발전과 평등분배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경제발전이 평등분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1점, ‘조금 더 중요하다’ 2점, ‘평등분배가 경제발전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3점, ‘훨씬 더 중요하다’ 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구했다.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은 2.42점

으로 경기도민 2.43점과 유사했다.¹⁹⁾

(2)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

빈곤의 원인을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운이 없어서’,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경쟁에 뒤쳐져서’는 개인적 요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일할 기회가 없어서’,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 비율(59%)이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찾는 비율(37.5%)보다 더 높았으며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 비율이 남한 주민(51.2%, 44.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I-5〉 참조)

표 VI-5 빈곤의 원인 비교

(단위: %)

	북한이탈주민	경기도민
개인적 요인	운이 없어서	4.8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24.5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7.7
	경쟁에 뒤쳐져서	14.2
	합계	51.2
사회구조적 요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20.1
	교육을 받지 못해서	10.4
	일할 기회가 없어서	13.9
	합계	44.4

출처: 필자 작성

(3) 복지정당성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정당성 인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평등한 사회가 된다’,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

¹⁹⁾ 이준우 외,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p. 32.

리이므로 몇몇한 일이다’, ‘복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 ‘사회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의욕이 없어진다’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환산하여 동의 정도를 평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복지 정당성에 동의하고 그 정도에서 남한 주민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평등한 사회가 된다’, ‘복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는 항목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동의도가 경기도민보다 더 높고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도가 더 낮다. 사회복지 제도와 일할 의욕과의 관계는 남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VI-6> 참조)

사회주의 사회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이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까지 이러한 원칙에서 국가를 운영하여 왔고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된 오늘까지도 현실과 달리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선전선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은 복지제도의 평등사회 지향, 복지의 서로 돕는 기능에 대한 지지도는 남한 주민보다 높다. 그러나 북한의 복지제도는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를 국가의 수혜로 생각하며,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혜택이 국민의 권리이고 몇몇한 일이라는 데 대한 동의가 남한 주민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VI-6 복지 정당성 평균값

(단위: 점)

내용	북한이탈주민	경기도민
1)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면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된다	3.76	3.5
2)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몇몇한 일이다	3.58	3.73
3) 복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	3.87	3.62
4)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의욕이 없어진다	2.76	2.77

출처: 필자 작성

복지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요인을 찾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분산분석)'를 사용하여 F-검증 값을 구해 각 집단 간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²⁰⁾ 복지제도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요인들 중 유의미한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북한에서 비당원보다 당원이었던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값이 높았다.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떳떳하다는 데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학력(F값=2.60; P값=0.08), 남한에서 학력(F값=4.15; P값=0.00)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당원이 비당원보다 평균값에서 낮았다.

복지제도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는 데서는 진보적 성향(F값=3.43; P값=0.03)을 가진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F값=10.89; P값=0.00)이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더 높았다.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문항에서 북한 학력(F값=3.19; P값=0.04)이 높을수록,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 성향(F값=6.97; P값=0.00)을 가진 사람보다 동의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이 동의하는 정도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표 VI-7> 참조)

²⁰⁾ F값이 충분히 커서 P값(p-value)이 0.05보다 작은 경우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95% 수준에서, 0.1보다 작은 경우 9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VI-7 복지제도의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복지가 확대되면 평등한 사회가 된다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뜻밖한 일이다.				복지는 사람들끼리 돕게 만든다				복지가 확대되면 일할 능력 없어진다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연령	20대	64	3.78	.88	64	3.80	.82		64	3.92	.80		64	2.72	1.00	
	30대	65	3.74	.99	65	3.66	.99		65	3.98	.78		65	2.54	.99	
	40대	82	3.68	1.02	81	3.49	1.01		81	3.83	.95		81	2.81	1.15	
	50대	47	3.70	.98	47	3.40	1.14	1.58 (.18)	48	3.67	.97	1.14 (.34)	47	2.85	1.20	1.35 (.25)
	60대 이상	35	4.06	.87	35	3.43	1.07		35	3.97	.89		36	3.03	1.21	
	합계	293	3.76	.96	292	3.58	1.00		293	3.87	.88		293	2.76	1.10	
연도	2005년 이전	89	3.70	1.03	89	3.53	.99		89	3.75	.87		89	2.83	1.13	
	2006년- 2010년	105	3.77	.94	104	3.63	1.02	.30 (.74)	105	3.85	.90	2.09 (.13)	104	2.75	1.06	.25 (.78)
	2011년 이후	99	3.82	.92	99	3.56	1.00		99	4.01	.86		100	2.72	1.13	
	합계	293	3.76	.96	97	3.58	1.00		293	3.87	.88		293	2.76	1.11	
교육 수준	초등 이하	33	3.61	1.03	33	3.94	.75		33	3.97	.73		33	2.70	.85	
	중고등	168	3.79	.86	167	3.55	.95	2.60 (.08)	167	3.86	.79	.22 (.80)	167	2.65	1.03	3.19 (.04)
	전문대이 상	92	3.78	1.10	92	3.49	1.14		93	3.86	1.07		93	3.00	1.27	
	합계	293	3.76	1.00	292	3.58	.95		293	3.87	.86		293	2.76	1.05	
교육 수준 및 취업 상태	남한학력 없음	159	3.72	1.01	158	3.41	1.03		159	3.84	.89		158	2.80	1.09	
	중고등 학교	32	3.94	.72	32	3.91	.89		32	4.00	.80		32	3.03	1.06	
	전문대/ 기능 대학	27	3.96	.90	27	3.93	.78	4.15 (.01)	27	4.00	1.00	.656 (.58)	28	2.79	1.29	1.32 (.27)
	대학 졸업 이상	66	3.62	.99	66	3.65	.94		66	3.79	.87		66	2.58	1.10	
	합계	284	3.75	.90	283	3.57	.91		284	3.86	.89		284	2.77	1.13	
성별	남성	86	3.64	1.05	86	3.65	.99		86	3.60	1.05		86	2.90	1.21	
	여성	197	3.83	.90	196	3.56	.99	.49 (.48)	197	3.97	.77	10.89 (.00)	197	2.69	1.05	2.08 (.15)
	합계	283	3.77	.97	282	3.59	.99		283	3.86	.91		283	2.75	1.13	

		복지가 확대되면 평등한 사회가 된다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뜻뜻한 일이다.				복지는 사람들끼리 돕게 만든다				복지가 확대되면 일할 능력 없어진다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당 원 여 부	당원	36	4.00	.83	2.59	36	3.33	1.17	2.33 (.13)	36	3.72	1.06	1.16 (.28)	36	2.86	1.29	.32 (.57)
	당원 아님	256	3.73	.97		(.11)	255	3.60		.97	256	3.89		.85	256	2.75	
	합계	292	3.76	.90		291	3.57	1.07		292	3.87	.96		292	2.76	1.18	
정 치 성 향	진보	66	3.86	.94		66	3.68	.98		66	4.00	.86		66	2.38	.96	
	중도	126	3.84	.86	2.29	125	3.59	.97	.89	125	3.95	.77	3.43	125	2.77	1.07	6.97
	보수	99	3.60	1.08	(.10)	99	3.47	1.05	(.41)	99	3.69	1.01	(.03)	100	3.02	1.17	(.00)
	합계	291	3.76	.96		290	3.57	1.00		290	3.87	.88		291	2.77	1.07	

출처: 필자 작성

경기도민의 경우 연령은 ‘복지확대가 평등에 기여’, ‘복지는 국민의 권리’, ‘복지가 근로의욕을 약화시킴’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학력은 ‘복지 확대가 평등에 기여’, ‘복지가 근로의욕을 약화시킴’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민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복지확대가 순기능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²¹⁾ 또한 정치이념은 ‘복지확대가 평등에 기여’, ‘복지는 국민의 권리’, ‘복지가 근로의욕을 약화시킴’ 항목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²²⁾

북한이탈주민은 경기도민과 비교할 때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북한 학력은 ‘복지는 국민의 권리’ 및 ‘복지가 근로의욕을 약화시킴’ 항목에서 경기도민과 달리 부정적 성향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다.

21) 경기도민의 연령과 학력은 복지제도 정당성을 인식하는데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가 확대되면 평등한 사회가 된다’의 F값은 연령 4.21** 학력 4.70**,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뜻뜻한 일이다’의 F값은 연령 7.19**, ‘복지가 확대되면 일할 능력이 없어진다’의 F값은 연령 3.99** 학력 4.86**였다. 이준우 외, 『경기도민 복지 의식조사와 정책방향』, pp. 64~69.

22) 위의 책, p. 70.

(4) 복지주체에 대한 견해 비교

복지주체에 대한 견해를 자기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주민, 지방자치단체, 정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동의한 비율을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라는 비율이 남한 주민보다 뚜렷하게 높고 반대로 자기 자신, 지방자치단체라는 비율이 낮다.(<표 VI-8> 참조) 북한에서 복지는 국가가 담당해왔고 지방자치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I-8 복지 제공 주체 인식 비교

(단위: %)

	복지 제공 주체	북한이탈주민	경기도민
1	자기자신	15.8	23.0
2	가족과 친척	5.4	6.7
3	이웃주민	11.1	7.1
4	지방자치단체	17.8	25.4
5	정부	50.0	37.8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에 주는 연령과 학력의 영향은 남한 주민과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교차분석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복지책임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정부를 선택한 비율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졌지만 20대에서 낮아졌다. 그러나 경기도민은 20대와 30대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²³⁾ 북한이탈주민은 학력 특히 북한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주체로 지방자치단체·정부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경기도민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책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여성보다 남성이, 보수보다 진보가 복지주체를 국가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VI-9> 참조)

²³⁾ 위의 책, p. 71.

표 VI-9 인구사회학적 요인

	바람직한 복지기관			바람직한 복지기관					
	개인 친척 이웃	지방자치 단체 국가	전체	개인 이웃 친척	지방자치 단체 국가	전체			
연령대	20대	21 32.8%	43 67.2%	64 100.0%	남한 학력 없음	54 33.8%	106 66.3%	160 100.0%	
	30대	17 25.8%	49 74.2%	66 100.0%	중고등학교	13 40.6%	19 59.4%	32 100.0%	
	40대	24 29.3%	58 70.7%	82 100.0%	남한 학력 전문대/ 기능대학	9 31.0%	20 69.0%	29 100.0%	
	50대	15 31.3%	33 68.8%	48 100.0%	대학졸업 이상	16 24.2%	50 75.8%	66 100.0%	
	60대 이상	18 48.6%	19 51.4%	37 100.0%	전체	92 32.1%	195 67.9%	287 100.0%	
	전체	95 32.0%	202 68.0%	297 100.0%	남성	25 28.7%	62 71.3%	87 100.0%	
	남한 거주 기간	2005년 이전	23 25.8%	66 74.2%	89 100.0%	성별 여성	67 33.5%	133 66.5%	200 100.0%
2006년-2010년		38 35.5%	69 64.5%	107 100.0%	전체		92 32.1%	195 67.9%	287 100.0%
2011년 이후		34 33.7%	67 66.3%	101 100.0%	북한 당원 여부	14 38.9%	22 61.1%	36 100.0%	
전체		95 32.0%	202 68.0%	297 100.0%		당원 아님	81 31.2%	179 68.8%	260 100.0%
초등 이하		10 30.3%	23 69.7%	33 100.0%		전체	95 32.1%	201 67.9%	296 100.0%
북한 학력	중고등	57 33.7%	112 66.3%	169 100.0%	정치 성향	13 19.4%	54 80.6%	67 100.0%	
	전문대 이상	28 29.5%	67 70.5%	95 100.0%		중도	47 37.0%	80 63.0%	127 100.0%
	전체	95 32.0%	202 68.0%	297 100.0%	보수	32 32.0%	68 68.0%	100 100.0%	
	전체	92 31.3%	202 68.7%	294 100.0%	전체	92 31.3%	202 68.7%	294 100.0%	

출처: 저자 작성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복지책임 정도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환산하여 동의 정도를 평가했다. 구체적 대상에 대한 복지책임 정도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경기도민은 차이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어린이는 어머니와 가족이, 부모는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남한보다 높아 남한에 비해 전통의식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할 능력 있는 사람까지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은 남한보다 낮았다.(<표 VI-10> 참조) 이는 북한에서 형성된 복지개념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복지는 높은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북한에서 복지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VI-10 구체적인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문항	북한이탈주민	경기도민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봐야 한다	3.53	3.37
부모에 대한 부양(요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3.32	2.88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2.86	3.13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	4.01	3.93

출처: 저자 작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아노바 분석을 한데 의하면 자녀부양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연령에 따르는 차이($F_{값}=2.88$; $P_{값}=0.02$)가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가 높았다. 부모부양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데 주는 연령의 영향($F_{값}=2.43$; $P_{값}=0.05$)은 50대가 가장 낮고 위아래로 높아졌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동의하지 않았으며($F_{값}=2.91$; $P_{값}=0.02$) 북한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인 사람에 비해 동의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F값=6.89; P값=0.00).(<표 VI-11> 참조)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책임이라는 데 대해서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은 대다수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민의 어린 자녀 돌봄 책임에 관한 의식, 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의식, 노동 가능자에 대한 최소 생계 보장의 의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의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의 연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은 부모부양 책임의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표 VI-11 복지 당사자 태도 분석

	어린 자녀는 어머니나 가족이 돌봐야 한다				부모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소 생계를 국가가 보장				정부가 책임이 크다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연령	20대	64	3.39	1.23	2.88 (.02)	64	3.50	1.02	2.91 (.02)	64	2.98	1.18	1.43 (.23)	64	4.06	.81	1.08 (.36)
	30대	66	3.59	1.19		66	3.29	1.15		66	2.71	1.15		66	4.02	.90	
	40대	82	3.52	1.20		82	3.12	1.04		81	2.84	1.07		82	3.94	.99	
	50대	47	3.23	1.35		47	3.15	1.18		46	2.67	1.16		48	4.19	.82	
	60대	37	4.08	1.01		37	3.76	1.09		37	3.16	1.21		37	3.81	1.00	
	이상																
합계	296	3.53	1.22	296	3.32	1.10	294	2.86	1.14	297	4.01	.91					
연도	2005년 이전	89	3.63	1.22	.39 (.68)	89	3.24	1.17	.41 (.66)	89	2.90	1.14	.53 (.59)	89	4.06	.97	1.25 (.29)
	2006년-2010년	106	3.50	1.23		106	3.37	1.087		104	2.91	1.20		107	4.07	.76	
	2011년 이후	101	3.49	1.23		101	3.36	1.077		101	2.76	1.10		101	3.89	.99	
	합계	296	3.53	1.22		296	3.32	1.107		294	2.86	1.15		297	4.01	.91	

²⁴⁾ 경기도민의 구체적 복지대상별 책임주체에 관한 아노바분석에 의하면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자녀는 어머니나 가족이 돌봐야 한다' F값은 2.59**, '부모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의 F값은 5.55**,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최소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F값은 2.56**, '소득격차 해소에서 정부책임이 크다'의 F값은 5.30**이었다. 성별에 따르는 차이는 부모부양책임에서만 나타났으며 F값은 4.88**이었다. 이준우 외, 『경기도민 복지 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pp. 77~78.

	어린 자녀는 어머니나 가족이 돌봐야 한다				부모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최소 생계를 국가가 보장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부 한 학 력	초등 이하	33	3.70	1.05		33	3.58	.94		33	3.39	1.17		33	3.97	.810
	중고등	169	3.51	1.24	.33	169	3.20	1.09	2.85	167	2.78	1.10	4.18	169	3.93	.939
	전문대 이상	94	3.51	1.25	(.72)	94	3.47	1.15	(.06)	94	2.80	1.17	(.02)	95	4.15	.875
	합계	296	3.53	1.22		296	3.32	1.10		294	2.86	1.15		297	4.01	.908
남 한 학 력	남한 학력 없음	159	3.57	1.21		159	3.35	1.10		158	2.83	1.11		160	3.93	.92
	중고등학교	32	3.59	1.27		32	3.53	1.05		31	3.23	1.26		32	4.09	.89
	전문대 /기능대학	29	3.48	1.35	.32	29	3.17	1.10	1.01	29	3.03	1.05	1.36	29	4.03	.94
	대학졸업 이상	66	3.41	1.20	(.82)	66	3.17	1.13	(.39)	66	2.79	1.21	(.26)	66	4.09	.92
합계	286	3.53	1.23		286	3.31	1.10		284	2.88	1.15		287	3.99	.92	
성 별	남성	87	3.52	1.26		87	3.39	1.12		87	3.15	1.27		87	4.07	.950
	여성	199	3.54	1.21	.02	199	3.30	1.11	.39	197	2.77	1.07	6.89	200	3.98	.90
	합계	286	3.53	1.22	(.90)	286	3.33	1.11	(.53)	284	2.88	1.15	(.01)	287	4.00	.919
당 별	당원	36	3.64	1.15		36	3.53	1.06		36	3.03	1.16		36	4.00	.99
	당원 아님	259	3.52	1.24	.29	259	3.30	1.11	1.38	257	2.83	1.15	.91	260	4.00	.90
	합계	295	3.54	1.23	(.59)	295	3.33	1.11	(.24)	293	2.86	1.15	(.34)	296	4.00	.91
정 치 성 향	진보	67	3.61	1.31		67	3.40	1.05		66	2.83	1.16		67	3.91	.93
	중도	127	3.58	1.21	.83	127	3.35	1.10	.58	126	2.86	1.09	.02	127	4.06	.81
	보수	100	3.40	1.18	(.44)	100	3.23	1.16	(.56)	100	2.87	1.23	(.98)	100	4.02	1.02
	합계	294	3.53	1.22		294	3.32	1.11		292	2.86	1.15		294	4.01	.91

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1) 복지비용 부담 의사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식과 소득에 따르는 증세에 대한 동의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에 대한 대답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했다. 그에 의하면 경기도민은 4.3점으로 북한이탈주민 3.93점보다 더 높았고 세금지불의사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VI-12〉 참조)

표 VI-12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점)

문항	북한이탈주민	경기도민
1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3.93	4.3
2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3.38	3.37

출처: 저자 작성

북한이탈주민은 유의하지는 않지만 누진세 동의 정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 학력이 높을수록,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경기도민 역시 유의하지 않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누진세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에 따르는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세금부담 의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며($F_{값}=3.11$; $P_{값}=0.00$) 남한에서 학력, 특히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일 높았다($F_{값}=4.98$; $P_{값}=0.00$). 그리고 연령이 낮은 집단이($F_{값}=3.44$; $P_{값}=0.01$), 비당원이 당원보다($F_{값}=-2.08$; $P_{값}=0.04$), 정치성향이 진보적인 집단이($F_{값}=4.12$; $P_{값}=0.02$) 세금부담 의지가 높았다.(〈표 VI-13〉 참조) 그러나 경기도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세금부담 의지가 높았다.²⁵⁾

표 VI-13 복지비용 부담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

	N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연령	20대	64	4.00	.94		3.73	.90	
	30대	66	3.91	.99		3.41	1.02	
	40대	82	3.73	.98	2.27	3.24	.98	3.66
	50대	48	4.25	.96	(.06)	3.08	1.03	(.01)
	60대 이상	37	3.97	.96		3.32	.94	
	합계	297	3.94	.98		3.37	.99	
남한 입국 연도	2005년 이전	89	4.00	1.00		3.33	.94	2.45
	2006년-2010년	107	4.06	.93	1.66	3.53	1.02	(.09)
	2011년 이후	101	3.77	.99	(.19)	3.24	.99	
	합계	297	3.94	.98		3.37	.99	
북한 학력	초등 이하	33	3.97	.95		3.67	.96	
	중고등	169	3.86	.97	1.66	3.31	.94	1.82
	전문대 이상	95	4.08	.99	(.19)	3.38	1.07	(.16)
	합계	297	3.94	.98		3.37	.99	
남한 학력	남한 학력 없음	160	3.89	.94		3.19	1.02	
	중고등학교	32	3.75	1.08		3.78	.91	
	전문대/기능대학	29	3.97	.91	1.19	3.45	.78	4.98
	대학졸업 이상	66	4.11	1.02	(.31)	3.61	.96	(.00)
합계	287	3.93	.98		3.38	1.00		
성별	남성	87	4.07	.96		3.64	1.01	
	여성	200	3.90	.97	1.40	3.26	.96	3.11
	합계	287	3.98	.97	(.16)	3.45	.98	(.00)
당별	당원	36	4.00	1.01		3.06	.98	
	당원 아님	260	3.93	.97	.40	3.42	.99	-2.08
	합계	296	3.97	.99	(.69)	3.24	.98	(.04)

26) 경기도민의 연령별 학력별 세금증납의식에 관한 아노바분석에 의하면 연령별 차이의 F값은 2.52**, 학력별 차이는 F값 3.67**이었다. 연령별 평균값은 20대 3.23, 30대 3.38, 40대 3.39, 50대 3.38, 60대 3.63, 70대 이상 3.30이었다. 학력별 평균값은 초등졸 중퇴 2.88, 중등졸 중퇴 3.39, 고등졸 중퇴 3.27, 전문대졸 중퇴 3.41, 대학원졸 중퇴 3.56이었다. 이준우 외, 『경기도민 복지 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p. 111.

	N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진보	45	4.11	.804		3.58	.866	
정치	중도	100	3.87	.960	1.01	3.32	.952	4.12
성향	보수	80	3.93	1.016	(.37)	3.06	1.060	(.02)
	합계	225	3.94	.952		3.28	.990	

출처: 필자 작성

복지비용 부담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누진세와 세금부담에 대한 의식을 종속변수로 출생연도, 월 소득, 북한 학력과 남한 학력, 이념성향, 북한에서 정치신분과 경제계층, 남한에서 계층, 남한 입국연도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했다. 결과는 표와 같다.(<표 VI-14>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누진세 의식에 관한 회귀분석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누진세 의식에는 계층 의식, 연령, 학력, 정치이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의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이념이 진보일수록 동의도가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세금 부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념성향($\beta = -.300$; $p=0.00$)이 가장 컸고 북한 학력($\beta=.160$; $p=0.03$), 남한 학력($\beta=.119$; $p=0.095$)이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북한 학력과 남한 학력이 높을수록 세금 증납에 찬성하는 정도가 높았다. 경기도민은 연령과 학력이 높고 하층이며 정치이념이 진보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고용주가 아닐수록 세금 증납 의사가 높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연령과 계층 의식은 세금 증납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²⁶⁾ 위의 책, p. 113.

표 VI-14 세금 증납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	P
(상수)	29.292	.	.515	.607
출생년도	.005	.030	.412	.681
현재 소득	.023	-.085	-1.302	.195
남한 학력	.043	.117	1.675	.095
북한 학력	.064	.160	2.219	.028
이념성향	.030	-.300	-4.422	.000
북한 정치신분	.062	.102	1.241	.216
북한 경제계층	.072	-.026	-.312	.755
남한 계층	.070	-.060	-.899	.370
남한 입국 시기	.016	-.037	-.498	.619
통계량	R=.364, R ² =133, 수정된 R ² =.095, F=3.502, P=.000			

일반적으로 복지부담 태도는 자기이해 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회귀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아 상관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복지부담 태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대해서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들의 동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는 세금을 낼 의사가 더 낮은 것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VI-15〉 참조)

표 VI-15 복지부담 태도와 자기이해 변수 간의 상관관계

	국민연금 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개인의료보험 가입	세금납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실업급여 경험 유무	장애인수급자 여부	고용주(사장), 자영업자 여부	노동자 고용 관련 여부	사회복지영유자 총사자 여부	초중고등학생 수	대학(원)생 수	노인 수	
누진세	-0.08	-0.07	-0.06	-0.03	-.12*	0.00	-.12*	-0.02	-0.07	-0.10	-0.07	-.12*	-0.05	0.1	0.01
세금 증납	0.04	-0.02	0.04	-0.02	-0.03	-0.01	-0.03	-0.10	-.13*	-0.22	-0.00	-0.01	-0.03	0.02	-0.07

출처: 필자 작성

(2)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인식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나는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가 복지를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좋다'에 대한 대답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했다. 그리고 그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보기 위해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했다.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 본데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입국연도가 오래수록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이 높아졌으며($F_{값}=4.91$; $P_{값}=0.01$) 여성보다 남성이($F_{값}=2.13$; $P_{값}=0.03$), 비당원보다 당원이 ($F_{값}=2.55$; $P_{값}=0.01$)더 높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1점, '조금 어려운 사람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 2점, '잘사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한다' 3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 의사가 높게 만들었다. 분석한 데 의하면 북한 학력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_{값}=3.61$; $P_{값}=0.03$). 그리고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연령이 낮고 입국연도가 오래수록 보편적 복지 평균값이 높아졌다.(<표 VI-16> 참조)

보편적 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의견은 경기도 조사와 다르게 질문을 했으므로 그 정도를 숫자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북한이탈주민과 경기도민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학력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학력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향이 강했으나 경기도민은 학력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성향이 강화되었다.²⁷⁾

27) 보편-선별 복지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에 대한 아노바분석에 의하면 연령별 차이의 F값은 20.80**, 학력별 차이 F값은 6.56**였다. 연령별 평균값은 20대 2.99, 30대 3.04, 40대 2.72, 50대 2.548, 60대 1.95, 70대 이상 1.96이었다. 학력별 평균값은 초등졸·중퇴

표 VI-16 복지제도 설계

	N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가 복지를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좋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평균	표준편차	F(P)	N	평균	표준편차	F(P)	
연령	20대	64	3.50	.98	1.28 (.28)	63	2.56	1.30	
	30대	66	3.42	1.11		66	2.30	1.23	
	40대	82	3.45	.98		81	2.53	1.26	1.39
	50대	48	3.69	1.03		48	2.10	1.21	(.24)
	60대 이상	37	3.81	1.05		37	2.24	1.14	
	합계	297	3.54	1.03		295	2.38	1.24	
남한 입국 연도	2005년 이전	89	3.51	1.07	4.91 (.01)	89	2.17	1.21	
	2006년-2010년	107	3.77	.98		107	2.50	1.23	1.91
	2011년 이후	101	3.33	1.018		101	2.44	1.27	(.15)
	합계	297	3.54	1.02		297	2.37	1.24	
북한 학력	초등 이하	33	3.52	1.03	.34 (.71)	33	2.88	1.22	
	중고등	169	3.50	.98		169	2.38	1.27	3.61
	전문대 이상	95	3.61	1.11		95	2.21	1.16	(.03)
	합계	297	3.54	1.04		297	2.49	1.22	
남한 학력	남한 학력 없음	160	3.45	1.057	1.46 (.23)	160	2.37	1.24	
	중고등학교	32	3.75	1.05		32	2.52	1.29	
	전문대/기능대학	29	3.79	1.01		29	2.48	1.30	.30
	대학졸업 이상	66	3.50	.97		66	2.29	1.21	(.83)
	합계	287	3.62	1.02		287	2.42	1.26	
성별	남성	87	3.75	1.07	2.13 (.03)	87	2.44	1.23	
	여성	200	3.47	1.01		200	2.35	1.25	.30
	합계	287	3.61	1.04		287	2.40	1.24	(.58)
당별	당원	36	3.94	1.01	2.55 (.01)	36	2.39	1.25	
	당원 아님	260	3.48	1.02		260	2.38	1.24	.02
	합계	296	3.71	1.01		296	2.38	1.25	(.98)
정치 성향	진보	45	3.73	.86	.89 (.41)	45	2.40	1.25	
	중도	100	3.53	.93		99	2.49	1.26	2.90
	보수	80	3.49	1.20		80	2.06	1.15	(.06)
	합계	225	3.56	1.02		224	2.32	1.23	

출처: 필자 작성

2.398, 중등졸·중퇴 1.93, 고등졸·중퇴 2.59, 전문대졸·중퇴 2.71, 대학원졸·중퇴 2.80 이었다. 이준우 외, 『경기도민 복지인식 조사와 정책방향』, p. 115.

(3)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를 항목별로 ‘매우 줄여야 한다’ 1점, ‘약간 줄여야 한다’ 2점,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3점, ‘약간 늘려야 한다’ 4점, ‘매우 늘려야 한다’ 5점으로 평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 요구를 경기도민과 비교할 때 높은 것이 특징이다.(<표 VI-17> 참조)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정책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에 대한 요구 순으로 높았다.

표 VI-17 복지정책 요구 비교

(단위: 점)

	북한이탈주민(A)	경기도민(B)	차이(A-B)
건강과 관련된 정책	4.06	3.74	0.32
노후소득 보장 정책	4.14	3.82	0.32
교육 정책	4.14	3.76	0.38
주거 지원 정책	3.95	3.74	0.21
빈곤층 지원 정책	4.00	3.82	0.18
노인 지원 정책	4.06	3.85	0.21
장애인 생활 지원	4.09	3.87	0.22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	4.37	3.87	0.50
실업대책 및 고용 지원	4.11	3.73	0.38
평균	4.10	3.80	0.30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 요구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남한 거주기간, 북한 학력, 남한 학력, 이념성향, 현재 소득, 성별과의 상관분석을 했다. 그에 의하면 건강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는 남한 거주 연한과 부의 관계(-.126*), 빈곤층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는 북한 학력과 부의 관계(-.117*)가 나타났다. 즉 남한 거주 연한이 적을수록 건강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졌고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층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크지 않았다.(<표 VI-18> 참조)

표 VI-18 복지정책 요구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상관관계

	연령대	남한 거주기간	남한 학력	북한 최종 학력	이념성향	현재 소득	성별
건강관련 정책	-.059	-.126*	.064	-.049	-.053	-.002	-.061
노후소득 보장 정책	.021	-.102	-.004	-.025	.056	-.085	-.087
교육 정책	-.047	-.016	-.034	-.010	-.027	.055	-.047
주거 지원 정책	.072	-.089	-.006	.050	-.051	-.109	.038
빈곤층 지원 정책	-.047	.005	.036	-.117*	-.017	.007	-.009
노인 지원 정책	-.026	.015	-.035	-.047	.018	-.031	.003
장애인 생활 지원	-.075	.047	-.010	-.089	-.058	-.045	-.021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	.083	.060	-.082	.038	.000	-.048	-.045
실업대책 및 고용 지원	.019	-.109	-.011	.075	-.035	.026	-.019

출처: 필자 작성

복지정책 요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구 내 복지 대상자수, 복지지위와의 상관관계분석에 의하면 노후소득 보장 정책은 실업 급여 수급 유무와 정의 관계(.130*)가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정책은 생계비 수급 유무(-.137*), 장애인수당 유무(-.123*), 복지종사자 유무(-.119*)와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영유아수와는 정의 관계(.151*)가 나타났다. 실업 및 고용대책 정책은 장애인수당 유무와 부의 관계(-.131*)를 보였다. 노후소득 보장 정책은 실업수당을 받아본 사람과,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은 가구 내 생계비수급자, 장애인수당자, 복지종사자가 없는 사람일수록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실업 및 고용정책은 가구 내 장애인 수당자가 없는 사람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복지정책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자기이해 변수와 많지 않았고 상관관계도 크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이해관계가 강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는 일반론과 반대 성향을 보였다.(〈표 VI-19〉 참조)

표 VI-19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 요구와 자기이해 변수와의 상관관계

	생계비 수급 유무	실업금 여수급 유무	장애인 수당 유무	자영업 자유무	노동자 고용 유무	복지 종사자 유무	영유아 수	초중 고등 학생 수	대학(원) 생 수
건강 관련 정책	.077	.023	.017	-.039	.060	-.083	.080	-.007	-.037
노후소득 보장 정책	.013	.130*	.049	-.088	.165	-.029	.021	-.051	.114
교육 정책	.019	.000	-.060	-.030	-.138	.003	.047	.103	.003
주거 지원 정책	.078	.073	-.022	-.060	.096	-.093	.030	.015	.032
빈곤층 지원 정책	.022	.067	.078	.013	.153	-.049	.023	.068	-.096
노인 지원 정책	-.069	.103	-.012	.022	.313	.029	.021	.002	-.017
장애인 생활 지원	-.050	.017	-.031	.029	-.070	-.077	-.053	.101	-.027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	-.137*	-.015	-.123*	-.060	-.096	-.119*	.151*	-.008	-.013
실업대책 및 고용 지원	-.033	.086	-.131*	-.067	.179	-.035	-.034	.012	.041

출처: 필자 작성

그러나 경기도민의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는 건강관련 정책은 연령, 노후소득 보장 정책은 연령, 학력, 가족 내 노인 수 교육정책은 연령, 주거정책은 연령, 가구형태, 빈곤정책은 연령, 계층 의식, 노인복지정책은 연령과 가구 내 노인 수, 아동양육정책은 연령, 성별, 영유아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²⁸⁾

28) 이준우 외,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pp. 82~116.

3. 북한이탈주민의 통일복지 의식

가.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남북 분리에 대한 의식

통일 시 남북 분리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결과 평균값은 ‘통일이 되면 남북을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7점, ‘통일되면 가족 친척들에게 남한에 와서 살라고 권고하겠다’ 3.01점,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2.93점,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남한에 오는 것이 더 낫다’ 2.63점, ‘통일이 되어도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살려고 할 것이다’ 2.64점, ‘통일된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내려오는 것을 막으면 불만이 폭등할 것이다’ 3.07점, ‘통일되어도 북한 사람들은 제대로만 실행한다면 사회복지는 남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2.53점이었다. <표 VI-20> 참조)

표 VI-20 통일방식에 대한 의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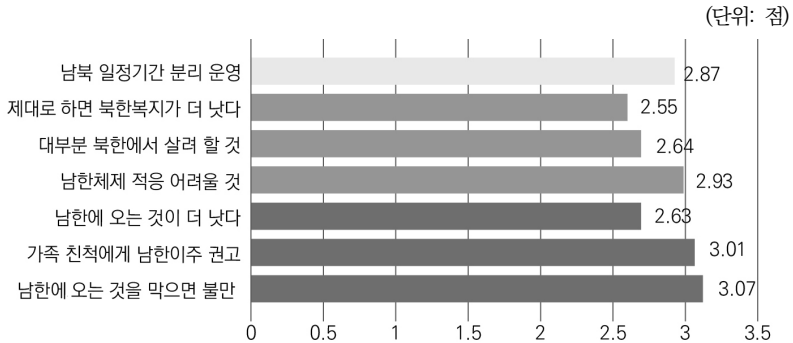
(단위: 점)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통일이 되면 남북을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7	.87
2 통일되면 가족 친척들에게 남한에 와서 살라고 권고 하겠다	3.01	.92
3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2.93	.80
4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남한에 오는 것이 더 낫다.	2.63	.91
5 통일되어도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살려고 할 것이다	2.64	.82
6 통일된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내려오는 것을 막으면 불만이 폭등할 것이다	3.07	.80
7 통일되어도 북한 사람들은 제대로만 실행한다면 사회복지 는 남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2.53	.99

출처: 필자 작성

질문 문항 가운데서 남한 이주와 관련을 가지는 문항의 동의 정도가 북한 거주와 관련된 문항의 동의 정도보다 조금 더 높았다.

그림 VI-2 통일방식에 대한 인식 평균값



출처: 필자 작성

통일 시 남북 분리 가능성 인식과 인구학적 요인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해서 분산분석을 했다. 남북 분리 운영에 대한 견해와 연관이 있는 것은 남한 거주기간 ($F=18.30$; $P=.00$), 북한 학력 ($F=7.92$; $P=.00$), 당원여부 ($F=3.9$; $P=.05$), 정치성향 ($F=3.56$; $P=.03$), 성별 ($F=18.30$; $P=.00$)로 나타나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북한 학력이 높을수록, 당원이, 보수가, 남성이 찬성하는 정도가 높았다.

통일 후 가족 친척에게 남한에서 살 것을 권하겠다는 데서는 북한에서 장사한 사람이 장사 안 한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F=4.51$; $P=.04$). 통일이 되면 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남한으로 오는 것이 낫다는 견해에서는 연령($F=5.55$; $P=.00$), 장사유무($F=6.45$; $P=.01$)가 연관이 있었다. 연령에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동의도가 높아졌는데 1970년대 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1960년 이전 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사에 관여한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동의도가 높았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 살려고 할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연령(F=2.42; P=.05)과 장사유무(F=5.24; P=.02), 북한 학력(F=2.49; P=.08)과 연관이 있었다. 1990년대 생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장사 안 한 사람이, 중고등 졸업생보다 전문대학 졸업생이 동의도가 더 높았다.

남한 이주를 막으면 불만이 폭등할 것이라는 데서는 북한 학력(F=4.74; P=.01), 연령(F=2.20; P=.07)과 연관이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아졌다.

제대로만 한다면 북한 복지 제도를 더 낮게 생각한다는 문항에서는 정치성향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F=2.30; P=.10) 중도가 가장 높고 보수가 가장 낮았다.(<표 VI-21> 참조)

표 VI-21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분류	남북 분리		가족·친척·남한행 운영		체제 적응 권고		체제 적응 어려움		남한 이주가 낫다		북한 거주할 것		남한 이주 막으면 불만		북한 복지가 낫다고 생각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출생연도	1991년 이후	39	2.97	39	2.90	39	3.08	39	2.46	39	2.62	39	2.82	39	2.49	
	1981년-1990년	74	2.76	74	2.99	74	2.91	74	2.51	74	2.41	73	3.08	74	2.46	
	1971년-1980년	73	2.96	73	2.93	73	2.92	73	2.40	73	2.74	72	3.13	73	2.59	
	1961년-1970년	65	2.74	65	3.08	65	2.92	65	2.78	65	2.66	65	3.25	65	2.57	
	1960년대 이전	44	3.05	46	3.20	45	2.84	46	3.09	46	2.83	46	2.93	46	2.46	
	합계	295	2.87	297	3.01	296	2.93	297	2.63	297	2.64	295	3.07	297	2.52	
F(P)	1.46(.21)		.85(.49)		.48(.75)		5.55(.00)		2.42(.05)		2.20(.07)		.26(.91)			
입국연도	2005년 이전	87	3.21	89	3.08	88	2.92	89	2.60	89	2.70	89	3.07	89	2.47	
	2006년-2010년	107	2.96	107	2.93	107	2.93	107	2.74	107	2.62	106	3.06	107	2.50	
	2011년 이후	101	2.50	101	3.04	101	2.93	101	2.53	101	2.60	100	3.09	101	2.58	
	합계	295	2.87	297	3.01	296	2.93	297	2.63	297	2.64	295	3.07	297	2.52	
F(P)	18.30(.00)		.66(.52)		.00(1.00)		1.39(.25)		.35(.71)		.05(.95)		.35(.70)			

분류	남북 분리 운영		가족·친척·남한행 권고		체제 적응 어려움		남한 이주가 낫다		북한 거주할 것		남한 이주 막으면 불만		북한 복지가 낫다고 생각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초등 이하	33	3.30	33	2.79	33	3.06	33	2.45	33	2.61	32	2.75	33	2.39
북한 학력	중고등	168	2.72	169	3.08	169	2.90	169	2.64	169	2.56	168	3.04	169	2.56
	전문대 이상	94	3.00	95	2.98	94	2.93	95	2.66	95	2.79	95	3.23	95	2.48
	합계	295	2.87	297	3.01	296	2.93	297	2.63	297	2.64	295	3.07	297	2.52
	F(P)	7.92(.00)		1.48(.23)		.57(.57)		.69(.50)		2.49(.08)		4.74(.01)		.49(.61)	
	남한 학력 없음	159	2.79	160	3.05	159	2.90	160	2.66	160	2.63	160	3.14	160	2.51
남한 학력	중고등학교	31	2.81	32	3.06	32	3.03	32	2.47	32	2.78	31	3.00	32	2.63
	전문대/기능대학	29	2.97	29	3.07	29	2.90	29	2.90	29	2.79	29	2.86	29	2.69
	대학졸업 이상	66	3.02	66	2.83	66	2.94	66	2.44	66	2.52	65	3.00	66	2.45
	합계	285	2.86	287	3.00	286	2.92	287	2.61	287	2.63	285	3.07	287	2.53
	F(P)	1.22(.30)		.98(.40)		.26(.85)		2.20(.09)		1.18(.32)		1.35(.26)		.50(.68)	
당원 여부	당원	36	3.14	36	3.08	35	2.89	36	2.89	36	2.72	36	3.17	36	2.50
	당원 아님	258	2.83	260	3.00	260	2.93	260	2.59	260	2.63	258	3.05	260	2.52
	합계	294	2.87	296	3.01	295	2.92	296	2.63	296	2.64	294	3.07	296	2.52
	F(P)	3.9(.05)		.26(.61)		.08(.77)		3.40(.07)		.39(.53)		.63(.43)		.02(.90)	
	정치 성향	진보	67	2.90	67	3.00	67	2.93	67	2.45	67	2.46	66	2.98	67
중도	126	2.72	127	3.07	127	2.94	127	2.72	127	2.72	126	3.11	127	2.65	
보수	99	3.03	100	2.92	99	2.93	100	2.61	100	2.64	100	3.09	100	2.38	
합계	292	2.87	294	3.00	293	2.93	294	2.62	294	2.64	292	3.08	294	2.52	
F(P)	3.56(.03)		.76(.47)		.01(.99)		2.05(.13)		2.22(.11)		.56(.57)		2.30(.10)		
성별	남성	86	3.15	87	2.90	86	2.88	87	2.49	87	2.71	86	2.97	87	2.59
	여성	199	2.75	200	3.06	200	2.94	200	2.68	200	2.60	199	3.11	200	2.50
	합계	285	2.87	287	3.01	286	2.92	287	2.62	287	2.63	285	3.06	287	2.53
	F(P)	13.33(.00)		1.80(.18)		.25(.62)		2.56(.11)		1.12(.29)		1.84(.18)		.46(.50)	
	장사 유무	장사 안함	175	2.88	176	2.93	175	2.95	176	2.52	176	2.73	175	3.09	176
장사 함	117	2.85	117	3.16	117	2.85	117	2.79	117	2.50	116	3.05	117	2.43	
합계	292	2.87	293	3.02	292	2.91	293	2.63	293	2.64	291	3.07	293	2.52	
F(P)	.06(.81)		4.51(.04)		.99(.32)		6.45(.01)		5.24(.02)		.13(.72)		1.67(.20)		

출처: 필자 작성

나. 통일 이후 복지비용에 대한 의식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이후 복지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2.32점, 남한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78점으로 남한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분산분석에 의하면 복지비용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북한 학력이 높을수록($F=2.84$; $P=.04$), 당원이 비당원보다($F=3.97$; $P=.05$), 남성이 여성보다($F=3.03$; $P=.08$) 유의미하게 높았다. 남한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1970년대 생이 제일 낮고 위아래 연령대로 가면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졌다($F=3.37$; $P=.01$). (<표 VI-22> 참조)

표 VI-22 통일 이후 복지비용 마련

	스스로 마련				남한의 예산으로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연령	20대	64	2.36	.70	64	2.75	.62	
	30대	66	2.14	.70	66	2.73	.62	
	40대	82	2.34	.76	82	2.66	.74	3.37 (.01)
	50대	48	2.31	.83	48	2.83	.66	
	60대 이상	37	2.51	.90	37	3.16	.80	
	합계	297	2.32	.77	297	2.78	.70	
남한입국 연도	2005년 이전	89	2.36	.815	89	2.79	.746	
	2006년-2010년	107	2.36	.732	107	2.85	.656	1.01
	2011년 이후	101	2.23	.760	101	2.71	.698	(.37)
	합계	297	2.32	.767	297	2.78	.698	
북한 학력	초등 이하	33	2.36	.783	33	2.76	.561	
	중고등	169	2.25	.697	169	2.73	.641	1.45
	전문대 이상	95	2.42	.870	95	2.88	.823	(.24)
	합계	297	2.32	.767	297	2.78	.698	

		스스로 마련				남한의 예산으로			
		N	평균	표준 편차	F(P)	N	평균	표준 편차	F(P)
남한 학력	남한 학력 없음	160	2.23	.711		160	2.80	.742	
	중고등학교	32	2.66	.827		32	2.84	.628	
	전문대/기능대학	29	2.38	.862	2.84	29	2.79	.726	.24
	대학졸업 이상	66	2.32	.807	(.04)	66	2.73	.646	(.87)
	합계	287	2.31	.770		287	2.79	.705	
성별	남성	87	2.43	.858		87	2.86	.650	
	여성	200	2.26	.716	3.03	200	2.76	.703	1.34
	합계	287	2.31	.764	(.08)	287	2.79	.668	(.25)
당별	당원	36	2.56	.809		36	2.92	.732	
	당원 아님	260	2.28	.758	3.97	260	2.77	.694	1.48
	합계	296	2.32	.768	(.05)	296	2.78	.699	(.22)

다. 통일 이후 복지수준에 대한 의식

‘통일 이후 복지수준을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3.16 점, ‘남한보다 낮아도 만족한다’는 3.12점으로 남한과 같은 수준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남한 입국일이 최근인 사람이(F=5.83; P=.00), 남성보다 여성이(F=9.83; P=.00), 남한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F=2.52; P=.06),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생(F=2.90; P=.06)이 동의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남한보다 낮아도 만족한다’는 입장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았고(F=2.85; P=.02) 유의미하지 않지만 북한 학력이 높을수록, 당원이 비당원보다 높았다.(<표 VI-23> 참조)

표 VI-23 통일 이후 복지수준

	남한 수준과 동일하게				북한 실정에 맞게			
	N	평균	표준편차	F(P)	N	평균	표준편차	F(P)
연령	20대	64	3.05	.82	64	2.97	.87	
	30대	64	3.17	.75	66	2.95	1.00	
	40대	82	3.04	.81	82	3.11	.87	2.85
	50대	48	3.31	.80	48	3.31	.75	(.06)
	60대 이상	37	3.43	.83	37	3.43	.77	
	합계	295	3.16	.81	297	3.12	.88	
	남한 입국 연도	2005년 이전	89	2.97	.89	89	3.16	.85
2006년-2010년		106	3.14	.80	107	3.20	.87	1.41
2011년 이후		100	3.36	.70	101	3.00	.92	(.00)
합계		295	3.16	.81	297	3.12	.88	(.25)
북한 학력	초등 이하	33	2.85	.76	33	2.82	.85	
	중고등	168	3.21	.78	169	3.14	.83	2.90
	전문대 이상	94	3.18	.87	95	3.19	.97	(.06)
	합계	295	3.16	.81	297	3.12	.88	(.11)
남한 학력	남한 학력 없음	158	3.25	.84	160	3.15	.90	
	중고등학교	32	3.16	.72	32	3.16	.85	
	전문대/기능대학	29	3.21	.72	29	3.34	.72	2.52
	대학졸업 이상	66	2.92	.79	66	2.92	.93	(.06)
	합계	285	3.16	.81	287	3.12	.89	(.15)
성별	남성	86	2.95	.932	87	3.09	.871	
	여성	199	3.27	.736	200	3.13	.891	9.48
	합계	285	3.18	.812	287	3.11	.883	(.00)
당별	당원	36	3.17	.910	36	3.31	.822	
	당원 아님	258	3.16	.795	260	3.09	.890	.00
	합계	294	3.16	.808	296	3.11	.883	(.96)

출처: 필자 작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의식과 태도 특징

(1) 복지태도 불일치

최근 들어 한국의 복지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이 주목되고 있다. 복지비용 지출에 관한 높은 요구와 낮은 세금부담 의사로 나타나는 일명 ‘넘프(Not Out Of My Pocket)현상’이 남한 주민의 복지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²⁹⁾ 이러한 불일치는 복지비용 지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세금부담 의사에서의 부정적 태도와 같이 상반되는 태도로 나타나지만 복지비용 지출과 세금부담 의사 간의 차이로 표현되기도 한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서도 이러한 불일치가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지출 요구의 평균값은 5점 척도에서 4.0점이었다. 그러나 복지비용 부담 의사는 3.38점으로 복지지출요구가 복지비용 의사보다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비용 부담 의사는 중간 값인 3점보다 높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지출 요구 4.0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민 역시 복지지출 요구는 3.80점, 복지지출의사 3.37점으로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지만 북한 주민이 경기도민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 이후 복지비용과 복지수준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일 이후 복지비용은 ‘북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사는 2.32점, ‘남한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사는 2.78점으로 북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사가 더 낮았지만 복지지출을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요구는 3.16점으로 북한 실정에 맞게 지출하자는 요구 3.12점보다 높았다. 즉 통일 이후 복지 비용부담 의지와 복지지출 요구 사이에서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요구는 특수한 복지 지위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

²⁹⁾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 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1권 1호 (2015), pp. 28~29; 김교성·김운민, “복지태도의 이중성,”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2호 (2016), pp. 27~51.

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위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복지수급 대상자가 더 높은 복지를 요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하면 누구나 복지수급 대상자가 되며 상당 기간 유지한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 구성원 중 복지수급대상이 거의 절반에 달했다.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가구가 아닌 본인의 복지수급유무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수급자는 3.6%밖에 되지 않았다. 상관분석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부지출 요구는 대다수 항목에서 복지수급자 여부와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수급자보다 오히려 미수급자의 복지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복지수급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민의 경우는 나보다는 남한 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실시에 대한 물음이었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요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 시혜적 복지태도

국가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누어진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개인의 실패로 인해 제기되는 복지욕구를 국가가 선택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비율이 제도에서 찾는 비율보다 더 높았고 경제발전을 평등분배보다 더 우선시켰으며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현재 남한 주민의 복지태도도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에 더 가깝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는 남한 주민보다 더 선별주의 경향이 강하다.

시혜적 복지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형식의 복지로 복지 주체가 왕이나 영주이다. 그리고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에서

찾으며 복지 제공자는 우월적 지위, 복지 수혜자는 낮은 지위에서 열등의식을 갖게 한다. 북한 주민의 이러한 복지태도는 북한복지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복지는 당과 수령의 은혜로 선전되어 왔으며 북한에서 복지지출은 무상 치료제와 무료 교육제 등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결되는 면도 있으나 사회보장제나 연로 보장 등은 최저한의 생존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실시되었고 부족한 면은 가족이나 본인이 보충해야 했다. 국가는 빈곤의 책임을 주로 개인과 가족에게 맡겼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던 때에도 애육원, 육아원, 양로원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해서 입원하기 매우 어려웠고 1990년대 이후에 더 열악해졌다. 최근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시혜성 복지를 강화하고 있어 애육원과 육아원, 양로원이 증설, 증축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보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늘에 와서는 의료부담도 전적으로 개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북한 주민은 복지는 당과 수령의 은혜라는 의식과 동시에 복지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과 모순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당과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어려움 특히 외부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자체로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 차단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시혜적 복지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영향이 남한에 와서도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학력과 연령 요인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의식과 복지태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연령, 북한 학력, 남한 학력, 남한 거주기간, 성별, 당별, 정치 성향이였다.

연령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있어서 다 같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남한

주민에 비해 더 작았다. 복지정당성 인식에서 경기도민은 연령에 따르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차이가 없었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인식과 복지제도의 확대가 일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견해에서도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기도민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에게서는 연령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있는 사람에게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과 복지 연령의 영향이 나타났지만 이는 남한은 빠른 발전으로 세대 간 차이가 심한 데 비해 북한 주민은 세대 간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력의 영향이 특징적이었는데 남한 학력은 복지의식과 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데 비해 북한 학력은 복지의식과 태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항목들이 나타났다. 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항목에서 북한 학력은 동의하는 정도를 더 강화했다. 또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복지에서 북한 학력은 선별복지 동의 정도를 강화했고 복지제도의 확대가 일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데 대해서도 학력은 동의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당원 유무가 주는 영향도 북한 학력과 비슷했다. 이는 북한에서 학력이 남한과 달리 보수성을 강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이념과 북한 학력과 관계를 분석한 데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보수성이 더 강화($F=4.63$; $P=.01$)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원은 비당원에 비해 보수성이 매우 높았다($F=39.83$; $P=.00$). (<표 VI-24> 참조)

표 VI-24 북한 학력 및 당원 유무와 정치이념 관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북한 학력	초등 이하	33	4.70	2.17	4.63(.01)
	중고등	167	5.23	1.98	
	전문대 이상	94	5.88	2.41	
당원 유무	당원임	35	6.60	2.64	39.82(.00)
	당원 아님	258	5.21	2.06	

출처: 필자 작성

북한에서 인텔리는 사회주의를 기본이념으로 내세웠던 만큼 북한의 실패 원인을 사회주의체제 자체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주요정책인 평등과 복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4. 정책제언

가. 통일 시 일정 기간 남북 분리정책 실시의 유의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³⁰⁾

분석에 의하면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남북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북한이탈주민 속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남한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남북 분리운영에 대한 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은 실제 경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학력이 높을수록, 당원일수록, 남성일수록 높아서 북한이탈주민 엘리트계층의 동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통일 이후 남한 거주가 낫다는 의식과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살려고 할 것이라는 의식이 비슷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북 분리운영에 대한 지지와 찬성은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남한 이주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내륙지역에 비해 국경지역의 남한 이주에 대한 의사가 높아 앞으로 북한에서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외부정보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유입 되는 조건에서 남한 이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요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³⁰⁾ 김석진·이규창,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연하청·황나미, 『통일 대비 사회복지 및 보건 정책과제』; 전홍택,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 방안』.

그러나 분석결과는 실제적인 실행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아직까지 통일 이후 남북 분리 운영에 관한 법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태도다.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이 남한에 내려오는 것이 좋다는 데 대해서는 유의미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한 이주가 빨리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국경지역 주민들 속에서는 남한에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잘 산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퍼져있으며 확산되고 있다. 통일이 된 후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를 부추긴다면 대량 이주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분리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으면 불만이 폭증할 것이라는 데 대한 의견은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더 동의정도가 높다는 것은 초기에 특히 불만이 높을 수 있으며 북한 고학력자,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동의도가 높다는 것은 북한체제에 세뇌된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북한 주민의 동의정도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이는 앞으로 남북 분리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북한 주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나. 복지정책의 선호차

이번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통일 이후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생계비 지원, 의료보험제도,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을 꼽았다. 이 세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동의비율이 1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통일 이후 제일 먼저 실시해야 할 정책을 기초생계비 지원으로 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건강보험제도를 다음 순으로 추천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건강회복이 매

우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료보장제도의 수립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은 통일 이후 가장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직업을 주는 것이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이 주거지원 대책이었다. 현재 북한의 주택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열악하다. 그러므로 주거지원 대책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다. 통일 이후 복지수준

앞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이후 복지비용 부담과 복지수준에 관한 질문 결과 ‘비용부담은 남한’이, ‘복지수준은 남한과 같게’라는 응답이 ‘스스로 마련’, ‘수준에 맞는 복지’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 통일 후 복지의식은 저부담, 고수준 복지의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비용과 복지수준 문항을 상관분석해 보면 비용을 북한 스스로 마련은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와 역수관계가 나타났고 남한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북한 실정에 맞는 복지수준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VI-25> 참조)

표 VI-25 복지비용과 복지수준 간의 상관관계

	비용 북한 스스로 마련	남한 예산으로 비용 마련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	북한 실정에 맞는 복지
북한 스스로 비용 마련	1	-0.068	-.138*	0.054
남한 예산으로 비용마련	.	1	.141*	.250**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	.	.	1	0.074
북한 실정에 맞는 복지	.	.	.	1

출처: 필자 작성

그러나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특히 입국 연한이 최근으로 올수록 복지 비용을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북한 주민의 시혜적 복지 의식은 복지를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하지만 복지비용에 대한 무책임성을 동반하므로 통일 이전에 비해 높아진 복지 의식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복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남한과 차이 나는 복지를 실시하는 데 대한 불만도 가지게 될 것이다. 북한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은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북한 주민의 입국 연한이 최근일수록, 남한에서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은 집단의 동의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통일 후 남한과 차이 나는 수준의 복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통일 시 남한이 책임지는 일방적인 복지정책은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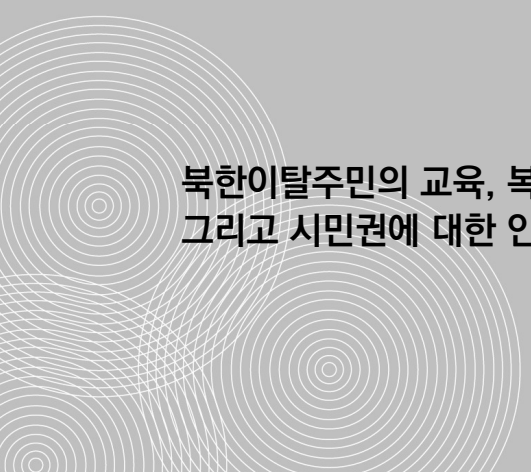
라. 복지정책 실시 시 북한 인텔리의 보수성 고려

정책은 주민들의 수준에 부합될 때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엘리트는 주민들 속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복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만큼 복지정책 실시도 북한 엘리트들의 동의가 중요하다.

북한 엘리트들이 복지정책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통일 후 일정 기간 북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남한과 차이 나는 적정수준에서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북한 엘리트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심층분석(3):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1. 연구주제와 의의

가. 연구주제

본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체제 적응의 한 양상으로 시민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자질’로 정의되는 시민권 즉 시민성에 대해 살펴본다. 과거 시민권은 흔히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로 정의되었다. 특히 법적으로 시민이 되는 자격, 그리고 법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의무와 권리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 시민권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시민이 법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 이상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뒤에는 사회집단의 다양성 증가와 시민 의식 변화라는 사회변화가 있다. 특히 여성, 아동, 인종 소수자 및 이민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법으로 완전한 시민권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시민권의 규정과 내용이 변화해 왔다. 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다른’ 사회구성원과 같은 동등한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했다. 나아가 이들이 속한 집단 특성에 따른 다양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민권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로 외연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민권의 외연 확장은 내용적인 면에서 평등 및 사회정의와 같은 가치의 강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시민권은 다양한 집단과 계층에 속한 사회구성원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녀야 할 시민적 태도와 가치로 확대, 재정의되었다. 다시 말해 시민권 개념이 법적인 시민의 자격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와 사회적 관계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 즉 시민성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의식, 준법정신, 공동체의식, 서로 다른 가치판단에 대한 관용, 타인과 정부 조직에 대한 신뢰 등이 좋은 혹은 바람직한 시민성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장은 시민권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사회 적응 양상을 분석

하고자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규범적인 시민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율적 민주시민의 모습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적응 실태를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을 배양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나. 연구 의의

원칙적으로 시민권은 법적으로 국적 부여를 통해 보장된다. 그래서 많은 1960년대 이전의 시민권 논의는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여성이나 소수 인종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법적인 시민권 실태 분석에 주목했다. 그 후 국제 이민의 확대로 이민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중요해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났다. 이렇듯 많은 시민권 관련 연구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관심을 가져온 이유는 이들에게 권리로서의 시민권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법이나 제도 차원에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어진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유지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안정은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현하려 할 때 가능하다. 즉 바람직한 시민성 배양은 이질적인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줄여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곤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과 안정에 필수적인 사회통합은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된 공동체 인식, 서로에 대한 관용 및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전

반에 함께 참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의 시민권 논의는 국민들이 시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느냐, 즉 시민성에 주목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시민성에 주목한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이민자와 달리 남한에 오면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다시피 주어진 시민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시민권 부여와는 별개다. 북한이탈주민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을 갖게 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성이란 시민 스스로가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³¹⁾ 다시 말해 민주사회 시민이 된다는 것은 시민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남한의 민주주의 시민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이 통일한국에서 민주주의 시민의 자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예상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사회로의 진정한 통합은 그들이 민주시민의 바람직한 자질을 내면화할 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정착실태 그리고 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왔다.³²⁾ 즉,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통합에 대

31) Tuner S. Bryan, "Citizenship Studies: A General Theory," *Citizenship Studies*, vol 1, no. 1 (1997), pp. 1~18.

32)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7~71; 이금순·안혜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pp. 147~171; 서창록,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2권 1호 (2010), pp. 145~174; 정광호·김민연·금현섭,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새로운 이해: 문제정의를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1호 (2010), pp. 71~101.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일당독재 체제를 경험한 북한이탈 주민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시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통일시대에 북한 주민을 민주사회 시민으로 통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함의를 유추하고자 한다.

본 장은 5절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다음 절인 2절에서는 시민성의 개념과 측정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논의한다. 더불어 남한 주민의 시민성과 개괄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3절은 의무적 시민성을 연령, 남한 교육 여부, 거주기간에 따라 검토하고, 4절은 자율적 시민성을 연령, 남한 교육 여부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검토한다. 5절에서는 조사된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을 연령·남한 교육,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을 포괄적으로 논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결론과 더불어 정책적 제언을 한다.

2. 시민성의 개념

가. 시민성의 정의

시민성의 개념은 시민권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사회과학에서 시민권과 관련된 논의는 ‘시민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의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이론과 공동체 이론이 시민권 논의에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관계에 대해서 자유주의이론은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국민들은 법을 지키고, 정부의 권위를 의심하고 공적 담론에 참여하는 등 올바른 시민권을 행사할 때 안정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³³⁾

한편 공동체이론은 시민권은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맞추어 시민권을 확대해온 사실에 주목한다. 시민권은 다양한 집단에 속한 국가 구성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그러한 구성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권은 국가가 그 구성원을 위해 지향하고 있는 혹은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가치실현을 위해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국가와 다양한 사회집단에 속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이론은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공적 담론, 서로 다른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참여 그리고 정치과정 참여를 시민권의 주요 구성요소로 강조한다.³⁴⁾

또한 시민권 연구는 시민권의 개념 정의와 더불어 시민권이 실제로 어떻게 제도화되고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분석해 왔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분석 또는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국적 취득 요건 및 기타 시민권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이들 연구는 제도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³³⁾ William Galston, *Liberal Purposes: Goods, Virtues, and Theory and Duties in the Liberal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1), p. 217, p. 244; Stephen Macedo, *Liberal Virtues: Citizenship, Virtue and Comm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138~139.

³⁴⁾ Gabriel A. Almond and Sy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5); Ralf Dahrendorf, "Citizenship and Beyond: The Social Dynamics of an Idea," in *Citizenship: Critical Concepts*, eds. B.S. Turner and P. Hamilt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pp. 292~309;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Will Kymlicka and Wayne Norman,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Ethnicities*, vol. 104, no. 2, (January, 1994), pp. 352~380; T. 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1964)," in *Citizenship: Critical Concepts*, eds. Bryan S. Turner and Peter Hamilt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Tuner S. Bryan, "Citizenship Studies: A General Theory," pp. 1~18.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질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민주주의가 안정화되고 심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은 무엇인가, 즉 시민성에 주목한다.

정치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제도의 존중, 정부와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이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공론 현장 및 정치과정에 참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자본(social capital)론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용, 사회적 신뢰, 이타심 그리고 자발적 사회 연결망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문화론과 사회자본론은 공통적으로 시민의 자질이 민주주의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본다. 다수의 이질적 사회집단에 동시에 속한 시민들이 보다 큰 공공의 선을 함께 추구하며 신뢰하고 관용할 때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이며 주요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양상을 시민의 자질 혹은 태도로 설명되는 시민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민주사회 시민상(市民像)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통합 및 민주주의 적응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시민성의 측정

시민에게 기대되는 규범의식 및 태도 즉 자질로 설명되는 시민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되고 측정 될 수 있다. 달튼(Dalton)을 시작으로 다수의 연구가 시민성을 크게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과 참여적(관여적) 시민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³⁵⁾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은 전통적인

시민의무와 관련된 시민성이다. 투표의무, 법 준수 의무, 납세의무, 국방 의무 그리고 배심원 봉사 의무 등 사회의 규칙을 중시하는 시민의 자질이다. 즉 규범 의식과 관련 있다. 한편 참여적 시민성은 자발적인 사회·정치 참여, 사회구성원 및 약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율적 의사형성을 중시하는 시민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결사체 참여, 다양한 정치의사형성과정 참여, 정치에 관심, 연대의식, 다른 가치와 생각에 대한 관용 등에 가치를 두는 시민 자질이다. 참여적 시민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탈물질주의 가치의 대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³⁶⁾ 많은 연구들은 민주주의 시민들, 특히 젊은 층의 사회적 연대, 자기표현, 복지와 관련된 참여적 시민성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연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민성을 공공성과 자율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³⁷⁾ 공공성은 공공의식과 관련된 자질로 달톤(Dalton)의 의무적 시민성 개념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공익을 지향하는 반면 계급이익이나 이념성을 지양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율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정부와 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에 가치를 두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성으로 이해된다. 또한 자율성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봉사와 관용 역시 자율성의 주요 요소이다.³⁸⁾ 자율

³⁵⁾ Russell J. Dalton,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vol. 56, no. 1 (2008), pp. 76~98.

³⁶⁾ *Ibid.*, pp. 76~98; Hooghe, Marc and Oser Jennifer, "The Rise of Engaged Citizenship. The Evolution of Citizenship Norms among Adolescents in 21 Countries between 1999 and 2009,"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51, no. 1 (2015), pp. 29~52; Marc Hooghe, "A comparative analysis of 'Good Citizenship': A Latent Class Analysis of Adolescents Citizenship Norms in 38 Countr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7, no. 1 (2016), pp. 115~129.

³⁷⁾ 류석진·허정수,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정치권력 연구,"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 연구(II)』, 제10권 7호 (2010), pp. 1~137; 임희섭,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연구," 『학술원 논문집: 인문, 사회과학편』, 제46권 제1호 (2007), pp. 5~30; 최지영·천희주·이명진, "한국 사회의 세대별 시민성 비교 연구," 『한국 인구학』, 제38권 4호 (2015), pp. 113~137.

성은 달튼(Dalton)의 참여적 시민성의 요소 중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중시하는 태도와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타인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둔 분류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분류법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을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 즉 의무적 시민성과 사회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자율적 관심에 초점을 맞춘 자율적 시민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시민성은 연령과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³⁹⁾ 특히 이민자와 난민과 같은 새로운 사회구성원은 새로운 사회에서 받는 교육이 정치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주민의 사회 및 정치 적응 및 행태는 새로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⁴⁰⁾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 남한에서의 교육 여부,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다.

³⁸⁾ Ronald Inglehart and Christian Welzel,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Russell Dalton, *The Good Citizen: How the Young are Transforming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Q Press 2007), pp. 55~68; Russel Dalton,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p. 80~82.

³⁹⁾ Russel Dalton,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p. 81~84, pp. 86~87; 최지영·천희주·이명진, "한국 사회의 세대별 시민성 비교 연구," pp. 117~118, pp. 123~127.

⁴⁰⁾ Stephen White et al, "The Political Resocialization of Immigrants: Resistance of Lifelong Learn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1, no. 2 (2008), pp. 268~281; Paul M. Ong and Don T. Nakanishi, "Becoming Citizens, Becoming Voters: The Naturaliz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Asian American Immigrants," in *The State of Asian Pacific America: Reframing Immigration Debate*, eds. Bill Ong Hing and Ronald Lee (Los Angeles: LEAP Asian American Public Policy Institute and UCLA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1996), pp. 275~305; Carole J. Uhlaner, "Foundations of Latino Party Identification: Learning, Ethnicity and Demographic Factors among Mexicans, Puerto Ricans, Cubans and Anglos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Papers* (Irvine: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1998), pp. 11~16; Janelle S. Wong, "The Effects of Age and Political Exposure on the Development of Party Identification among Asian American and Latino Immigrants in the U.S.," *Political Behavior*, vol. 22, no. 4 (2000), pp. 341~71.

3.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가. 의무적 시민성 측정과 남한 주민과의 비교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은 투표, 납세 그리고 준법의 의무에 대한 태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 문항은 갤스틴(Galston, 1991)의 시민성 조작 정의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및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등 시민성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표 VII-1>에 제시되어 있다. 의무적 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 좋은 국민이 되는데 무엇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사항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매우 중요하다’에 7점을 준다면 귀하는 다음 사항 각각에 대하여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으로 측정되었다.

표 VII-1 의무적 시민성 문항

의무적 시민성	측정 문항
투표의무 준수	선거 때 항상 투표 한다.
납세의무 준수	결코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다.
법과 규칙 준수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킨다.

출처: 필자 작성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평균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에 보이듯이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 세 항목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평균적으로 5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였다. 세 항목의 평균값은 5.67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문항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보인 높은 수준의 규범적 태도가 남한 사람들의 평균과

비교해서도 높은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일한 문항으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표 VII-2〉의 두 번째 열에 보이듯이 남한 주민이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무적 시민성에 대한 태도가 남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의 조사자료와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료파일을 만들었다. 통합자료파일을 분석하여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T 통계량(T-statistics)에 대한 P 값(P-value)이 0.05보다 작은 경우 95% 수준에서, 0.01보다 작은 경우 99% 수준에서 두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해석된다. 검증 결과 세 가지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 모두에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값이 모두 0에 가까워 거의 10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보이고 있는 투표, 납세 그리고 준법에 대한 인식 차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는 것이다. 통계를 통해 확인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인식 차는 측정 오류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 VII-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비교

	북한이탈주민		남한 주민		F-통계량	P 값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값		
투표의무 준수	297명	5.65	1,370명	6.01	13.2	0.00.
납세의무 준수	296명	5.46	1,370명	6.21	65.1	0.00.
법과 규칙 준수	296명	5.90	1,370명	6.14	8.71	0.00.

출처: 필자 작성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은 7점 척도에서 5점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보인다. 그러나 좋은 국민이라면 투표에 참여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남한 주민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의무적 시민성 항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을 살펴본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투표 참여, 납세 및 법과 규칙 준수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 항목을 연령, 남한에서 교육, 거주기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령의 경우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령대별로 응답자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가장 적다. 구체적으로 20대 64명(19세 1명 포함), 30대 66명, 40대 82명, 50대 48명 그리고 60대 이상이 37명이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의 효과는 교육기간 또는 교육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으로 입국한 연령이 서로 달라 남한에서 받은 교육수준이 교육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에서의 교육은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남한 거주기간은 1년에서 24년까지로 평균 거주기간은 약 8.8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를 거주기간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년~5년, 6년~10년, 11년~15년 그리고 16년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VII-3〉은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을 연령, 남한에서의 교육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표 VII-3〉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와 50대의 북한이탈주민은 투표 참여를 좋은 국민이 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응답자 중 평균값 이상의 6점 또는 7점을 부여한 비율이 60%로, 77%인 30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통 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입국 연령에서는 20대와 30대가 전체 북

한이탈주민의 50%가 넘는다.⁴¹⁾ 그러나 남북하나재단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⁴²⁾ 다시 말해 20대 그리고 30대였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들어와 40대와 50대가 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대 미만을 포함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40대와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0%가 넘는다. 따라서 40대와 50대의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투표 참여를 증시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저조한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40대와 50대의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한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한의 40대와 50대는 핵심 경제활동주체로 생계문제가 큰 관심사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41) 통일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_Policy/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12&mode=view&cntId=54169&category=&pageIdx> (검색일: 2017.7.30).

42)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https://www.koreahana.or.kr/intro/eGovHanaInfographic.jsp>> (검색일: 2017.7.30.).

표 VII-3 투표의무: 연령, 남한 교육 및 거주기간별

(단위: 명(%))

	측정척도	1	2	3	4	5	6	7	Total
연령	20대	4 (6.25)	4 (6.25)	5 (7.81)	1 (1.56)	4 (6.25)	6 (9.38)	40 (62.50)	64 (100)
	30대	5 (7.58)	1 (1.52)	2 (3.03)	4 (6.06)	3 (4.55)	9 (13.64)	42 (63.64)	66 (100)
	40대	8 (9.76)	2 (2.44)	4 (4.88)	4 (4.88)	6 (7.32)	10 (12.20)	48 (58.54)	82 (100)
	50대	11 (22.92)	0 (0.00)	2 (4.17)	2 (4.17)	4 (8.33)	8 (16.67)	21 (43.75)	48 (100)
	60대 이상	5 (13.51)	0 (0.00)	1 (2.70)	2 (5.41)	1 (2.70)	3 (8.11)	25 (67.57)	37 (100)
남한 교육	없다	22 (13.75)	5 (3.13)	8 (5.00)	6 (3.75)	10 (6.25)	14 (8.75)	95 (59.38)	160 (100)
	있다	10 (7.87)	2 (1.57)	6 (4.72)	4 (3.15)	8 (6.30)	21 (16.54)	76 (59.84)	127 (100)
거주 기간	1년~5년	9 (11.39)	4 (5.06)	5 (6.33)	3 (3.80)	5 (6.33)	3 (3.80)	50 (63.29)	79 (100)
	6년~10년	13 (13.00)	0 (0.00)	3 (3.00)	5 (5.00)	9 (9.00)	15 (15.00)	55 (55.00)	100 (100)
	11년~15년	10 (10.10)	3 (3.03)	5 (5.05)	5 (5.05)	3 (3.03)	13 (13.13)	60 (60.61)	99 (100)
	16년 이상	1 (5.26)	0 (0.00)	1 (5.26)	0 (0.00)	1 (5.26)	5 (26.32)	11 (57.89)	19 (100)

출처: 필자 작성

학교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 및 행태를 학습하고 익히는 데 핵심적인 사회화의 장이다.⁴³⁾ 하지만 투표 참여는 북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무로 선거마다 유권자의 100%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남한에서 교육을 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에 큰 중요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학교 교육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더 높은 비율로 투표를 매우 중요한 시민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약 77%가 전통적 시민의무인 투표가 중요하다는 데 높은 점수인 6점 혹은 7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남한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인 68%에 비해 약 9% 정도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에서 받는 교육이 민주주의에서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시민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앞서 40대와 50대의 북한이탈주민이 투표 참여에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40대와 50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남한에서 교육받은 비율이 낮다. 30대의 42% 만이 남한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반면 40대의 66% 그리고 50대의 77%가 남한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50대의 경우 30대와 비교하면 35% 포인트나 높은 비율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즉 40대와 50대의 다수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그들의 낮은 의무적 시민성의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주기간은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표의 의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⁴³⁾ Steven J. Rosenstone and John M. Hansen,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1993), pp. 44~48, pp. 74~77; Sidney Verba and Norman H. Nie, *Participation America*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pp. 85~97, pp. 127~130.

는 남한에서 사는 경험은 민주주의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VII-4 납세의무: 연령, 남한 교육 및 거주기간별

(단위: 명%)

		측정척도	1	2	3	4	5	6	7	Total
연령	20대	4 (6.25)	3 (4.69)	5 (7.81)	5 (7.81)	2 (3.13)	8 (12.50)	37 (57.81)	64 (100)	
	30대	3 (4.55)	0 (0.00)	5 (7.58)	8 (12.12)	4 (6.06)	8 (12.12)	38 (57.58)	66 (100)	
	40대	9 (10.98)	2 (2.44)	5 (6.10)	11 (13.41)	2 (2.44)	9 (10.98)	44 (53.66)	82 (100)	
	50대	8 (16.67)	3 (6.25)	5 (10.42)	4 (8.33)	6 (12.50)	0 (0.00)	22 (45.8)	48 (100)	
	60대 이상	5 (13.89)	1 (2.78)	0 (0.00)	4 (11.11)	1 (2.78)	7 (19.44)	18 (50.00)	36 (100)	
남한 교육	없다	19 (11.88)	6 (3.75)	13 (8.13)	18 (11.25)	10 (6.25)	9 (5.63)	85 (53.13)	160 (100)	
	있다	8 (6.35)	2 (1.59)	7 (5.56)	13 (10.32)	5 (3.97)	21 (16.67)	70 (55.56)	126 (100)	
거주 기간	1년~5년	8 (10.13)	2 (2.53)	5 (6.33)	15 (18.99)	4 (5.06)	5 (6.33)	40 (50.63)	79 (100)	
	6년~10년	9 (9.09)	4 (4.04)	8 (8.08)	7 (7.07)	9 (9.09)	13 (13.13)	49 (49.49)	99 (100)	
	11년~15년	11 (11.11)	3 (3.03)	6 (6.06)	10 (10.10)	2 (2.02)	9 (9.09)	58 (58.59)	99 (100)	
	16년 이상	1 (5.26)	0 (0.00)	1 (5.26)	0 (0.00)	0 (0.00)	5 (26.32)	12 (63.16)	19 (100)	

출처: 필자 작성

납세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50대가 가장 낮은 비율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표 VII-4>에 제시된 바와 같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6점 또는 7점을 부여한 응답자 비율은 64%~80%에 달한다. 그러나 50대의 북한이탈주민 중 납세의무를 지키는 것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

비율은 4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납세의무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72% 이상이 납세의무를 지키는 것에 6점 혹은 7점을 부여하였다. 남한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59%에 비하면 13% 포인트 높다.

또한 투표의 의무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1년~5년인 북한이탈주민의 57%가 평균 이상의 6점 또는 7점을 부여한 반면 11년~15년 거주자의 68%, 16년 이상 거주자의 89%가 6점 또는 7점을 부여하였다.

표 VII-5 법과 규칙 준수: 연령, 남한 교육 및 거주기간별

(단위: 명(%))

측정척도	1	2	3	4	5	6	7	Total	
연령	20대	2 (3.13)	0 (0.00)	2 (3.13)	5 (7.81)	6 (9.38)	8 (12.50)	41 (64.06)	64 (100)
	30대	3 (4.55)	1 (1.52)	2 (3.03)	4 (6.06)	5 (7.58)	14 (21.21)	37 (56.06)	66 (100)
	40대	1 (1.22)	2 (2.44)	1 (1.22)	9 (10.98)	7 (8.54)	14 (17.07)	48 (58.54)	82 (100)
	50대	6 (12.77)	2 (4.26)	3 (6.38)	4 (8.51)	4 (8.51)	3 (6.38)	25 (53.19)	47 (100)
	60대 이상	4 (10.81)	0 (0.00)	2 (5.41)	3 (8.11)	0 (0.00)	8 (21.62)	20 (54.05)	37 (100)
	남한 교육	없다	7 (4.40)	4 (2.52)	3 (1.89)	17 (10.69)	14 (8.81)	18 (11.32)	96 (60.38)
있다		7 (5.51)	0 (0.00)	6 (4.72)	8 (6.30)	8 (6.30)	28 (22.05)	70 (55.12)	127 (100)

		측정척도	1	2	3	4	5	6	7	Total
거주 기간	1년~5년	3 (3.80)	1 (1.27)	2 (2.53)	10 (12.66)	9 (11.39)	6 (7.59)	48 (60.76)	79 (100)	
	6년~10년	7 (7.07)	0 (0.00)	3 (3.03)	7 (7.07)	7 (7.07)	15 (15.15)	60 (60.61)	99 (100)	
	11년~15년	6 (6.06)	4 (4.04)	4 (4.04)	7 (7.07)	6 (6.06)	18 (18.18)	54 (54.55)	99 (100)	
	16년 이상	0 (0.00)	0 (0.00)	1 (5.26)	1 (5.26)	0 (0.00)	8 (42.11)	9 (47.37)	19 (100)	

출처: 필자 작성

〈표 VII-5〉는 연령, 남한 교육 및 거주기간별 법과 규칙 준수에 대한 시민성 조사결과이다.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비율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평균 이상 점수인 6점 혹은 7점을 부여한 50대는 약 60%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서 75% 전후의 응답자가 6점 또는 7점을 부여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50대 중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도 13%로 높다.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다른 의무적 시민성 항목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시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남한에서 교육을 받고 거주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무적 시민성이 대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의 증감과 관련하여 선형(linearity)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50대가 의무적 시민성 전 항목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더불어 연령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60대가 낮은 시민성을 보인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60대는 세 개의 의무적 시민성 항목에서 다른 연령대만큼 높은 점수를 부여한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동시에 낮은 중요성을 부여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의무적 시민성 항목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라고 응답한 60대의 비율이 50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적 시민성

가. 자율적 시민성 측정과 남한 주민과의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적 시민성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일에 대한 관심, 사회정치단체 참여, 타인의 다른 의견 이해 노력, 윤리적 소비 실천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측정 항목은 <표 VII-6>에 제시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 좋은 국민이 되는 데 무엇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매우 중요하다’에 7점을 준다면 귀하는 다음 사항 각각에 대하여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각 항목은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으로 측정되었다.

표 VII-6 자율적 시민성 항목

자율적 시민성	측정 문항
정부 일에 관심	정부가 하는 일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사회·정치단체 참여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타인의 의견 이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윤리적 소비	조금 비싸더라도 정치, 윤리 또는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	나보다 못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출처: 필자 작성

자율성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의무적 시민성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VI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자율적 시민성 항목 중 정부 일에 대한 관심과 다른 생각 이해 노력에 부여하는 중요성에서 5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섯 개의 자율성 문항의 평균값은 의무에 기반을 둔 세 개의 시민성의 평균값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섯 개의 자율적

시민성 항목들의 평균값은 4.75점으로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 항목들의 평균값 5.67점보다 1점 이상 낮다.

그리고 남한 주민의 자율적 시민성의 평균값에 비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적 시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의 두 번째 열은 동일한 항목으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와 비교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모든 자율적 시민성 항목에서 남한 주민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즉 자율적 시민성이 남한 주민보다 평균적으로 낮다.

이러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의 조사 자료와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 검증(T-test)을 통해 검증하였다. T 통계량(T-statistics)에 대한 P 값(P-value)이 0.05보다 작은 경우 두 그룹 간 평균값의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해석한다. 검증 결과는 <표 VII-7>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검증 결과, 사회·정치참여에 가치를 두는 항목을 제외한 4개의 항목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이 정부 일에 대한 관심,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 노력, 윤리적 소비 그리고 어려운 타인을 돕는 일에 부여하는 가치가 남한 주민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모두 사회·정치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모두 다른 자율성 항목에 비해 사회·정치참여의 중요성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좋은 시민의 자질로서 적극적으로 사회나 정치단체에 참여하는 것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VII-7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자율적 시민성 비교

	북한이탈주민		남한 주민		T-통계량	P 값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값		
정부 일에 관심	296명	5.04	1,369명	5.51	-4.51	0.000
사회정치단체참여	296명	4.14	1,369명	4.27	-1.12	-0.26
다른 생각 이해노력	295명	5.09	1,369명	5.57	-4.84	0.000
윤리적 소비실천	294명	4.54	1,368명	5.02	-4.29	0.000
어려운 사람 돕기	297명	4.93	1,368명	5.22	-2.96	0.003

출처: 필자 작성

다음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적 시민성에 관한 5가지 항목을 연령, 남한 교육의 유무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적 시민성: 정부 일 지켜보기, 사회·정치단체 참여, 다른 생각의 타인 이해, 윤리적 소비,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

북한이탈주민은 5가지 자율적 시민성 항목 중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 연령, 남한 교육의 유무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 연령집단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평균 이상의 6점 혹은 7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한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에서의 교육경험 유무와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교육을 받거나 오랜 기간 생활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선형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VII-8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

(단위: 명(%))

측정척도		1	2	3	4	5	6	7	Total
연령	20대	7 (10.94)	3 (4.69)	5 (7.81)	6 (9.38)	12 (18.75)	11 (17.19)	20 (31.25)	64 (100)
	30대	5 (7.58)	3 (4.55)	4 (6.06)	9 (13.64)	12 (18.18)	14 (21.21)	19 (28.79)	66 (100)
	40대	2 (2.47)	4 (4.94)	8 (9.88)	11 (13.58)	15 (18.52)	12 (14.81)	29 (35.80)	81 (100)
	50대	7 (14.58)	3 (6.25)	4 (8.33)	4 (8.33)	6 (12.50)	8 (16.67)	16 (33.33)	48 (100)
	60대 이상	4 (10.81)	2 (5.41)	5 (13.51)	4 (10.81)	4 (10.81)	5 (13.51)	13 (35.14)	37 (100)
남한 교육	없다	13 (8.18)	9 (5.66)	12 (7.55)	18 (11.32)	30 (18.87)	22 (13.84)	55 (34.59)	159 (100)
	있다	9 (7.09)	5 (3.94)	13 (10.24)	15 (11.81)	18 (14.17)	28 (22.05)	39 (30.71)	127 (100)
거주 기간	1년~5년	7 (8.86)	3 (3.80)	5 (6.33)	11 (13.92)	12 (15.19)	10 (12.66)	31 (39.24)	79 (100)
	6년~10년	11 (11.00)	4 (4.00)	9 (9.00)	8 (8.00)	17 (17.00)	16 (16.00)	35 (35.00)	100 (100)
	11년~15년	6 (6.12)	6 (6.12)	10 (10.20)	12 (12.24)	18 (18.37)	20 (20.41)	26 (26.53)	98 (100)
	16년 이상	1 (5.26)	2 (10.53)	2 (10.53)	3 (15.79)	2 (10.53)	4 (21.05)	5 (26.32)	19 (100)

출처: 필자 작성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6점 혹은 7점을 부여한 응답자는 전 연령대에서 50%에 가까웠다. 그러나 사회단체 및 정치단체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VII-9> 참조) 사회·정치단체 참여의 경우 약 30%의 응답자가 6점 혹은 7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0대의 약 21%만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사회·정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좋은 국민이 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이

다. 구체적으로 36%의 사람들이 6점 혹은 7점을 부여하였다. 반면 11년~15년 동안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23%, 16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26%만이 6점 혹은 7점을 부여하였다. 이렇듯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정치단체 참여에 낮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참여 경험의 실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남한에 들어와 살면서 사회·정치단체 참여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자신들이 단체나 조직 참여를 통해 전달한 의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VII-9 사회·정치단체 참여

(단위: 명(%))

	1	2	3	4	5	6	7	Total	
연령	20대	9 (14.06)	4 (6.25)	6 (9.38)	10 (15.63)	16 (25.00)	6 (9.38)	13 (20.31)	64 (100)
	30대	8 (12.12)	4 (6.06)	6 (9.09)	13 (19.70)	11 (16.67)	9 (13.64)	15 (22.73)	66 (100)
	40대	12 (14.63)	7 (8.54)	6 (7.32)	18 (21.95)	16 (19.51)	14 (17.07)	9 (10.98)	82 (100)
	50대	14 (29.17)	5 (10.42)	9 (18.75)	7 (14.58)	3 (6.25)	1 (2.08)	9 (18.75)	48 (100)
	60대 이상	7 (19.44)	4 (11.11)	6 (16.67)	8 (22.22)	1 (2.78)	2 (5.56)	8 (22.22)	36 (100)
남한 교육	없다	34 (21.25)	10 (6.25)	16 (10.00)	31 (19.38)	27 (16.88)	14 (8.75)	28 (17.50)	160 (100)
	있다	15 (11.90)	11 (8.73)	16 (12.70)	22 17.46	20 (15.87)	17 (13.49)	25 (19.84)	126 (100)
거주 기간	1년~5년	11 (13.92)	5 (6.33)	7 (8.86)	10 12.66	17 21.52	8 (10.13)	21 (26.58)	79 (100)
	6년~10년	19 (19.19)	4 (4.04)	11 (11.11)	19 19.19	17 17.17	13 (13.13)	16 (16.16)	99 (100)
	11년~15년	17 (17.17)	13 (13.13)	12 (12.12)	23 23.23	11 11.11	10 (10.10)	13 (13.13)	99 (100)
	16년 이상	3 (15.79)	2 (10.53)	3 (15.79)	4 (21.05)	2 (10.53)	1 (5.26)	4 (21.05)	19 (100)

출처: 필자 작성

〈표 VII-10〉은 다른 의견을 가진 타인에 대한 이해가 민주주의 시민의 자질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6점과 7점을 부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대가 60대보다 낮은 비율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의 50대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1년 생)가 사회집단 간 소통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에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⁴⁴⁾ 즉 북한이탈주민 50대도 남한의 베이비붐 세대와 같이 다른 생각의 타인을 이해하려는 자율적 시민성이 낮다.

표 VII-10 타인에 대한 이해

(단위: 명(%))

	측정척도	1	2	3	4	5	6	7	Total
연령	20대	1 (1.56)	3 (4.69)	3 (4.69)	6 (9.38)	10 (15.63)	18 (28.13)	23 (35.94)	64 (100)
	30대	3 (4.55)	3 (4.55)	3 (4.55)	5 (7.58)	15 (22.73)	15 (22.73)	22 (33.33)	66 (100)
	40대	4 (4.88)	1 (1.22)	6 (7.32)	14 (17.07)	16 (19.51)	17 (20.73)	24 (29.27)	82 (100)
	50대	8 (17.02)	4 (8.51)	4 (8.51)	11 (23.40)	7 (14.89)	3 (6.38)	10 (21.28)	47 (100)
	60대 이상	4 (11.11)	5 (13.89)	1 (2.78)	5 (13.89)	9 (25.00)	4 (11.11)	8 (22.22)	36 (100)
교육	없다	12 (7.55)	10 (6.29)	12 (7.55)	25 (15.72)	33 (20.75)	28 (17.61)	39 (24.53)	159 (100)
	있다	7 (5.56)	4 (3.17)	4 (3.17)	16 (12.70)	22 (17.46)	29 (23.02)	44 (34.92)	126 (100)
거주 기간	1년~5년	5 (6.41)	4 (5.13)	6 (7.69)	11 (14.10)	14 (17.95)	8 (10.26)	30 (38.46)	78 (100)
	6년~10년	7 (7.07)	3 (3.03)	7 (7.07)	10 (10.10)	20 (20.20)	24 (24.24)	28 (28.28)	99 (100)
	11년~15년	8 (8.08)	9 (9.09)	4 (4.04)	15 (15.15)	21 (21.21)	20 (20.20)	22 (22.22)	99 (100)
	16년 이상	0 (0.00)	0 (0.00)	0 (0.00)	5 (26.32)	2 (10.53)	5 (26.32)	7 (36.84)	19 (100)

출처: 필자 작성

44) 최지영·천희주·이명진, “한국 사회의 세대별 시민성 비교 연구,” pp. 211~131.

남한에서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는 시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더 높은 비율로 높은 점수인 6점 또는 7점을 부여하였다.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58%의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6점 또는 7점을 부여하였다. 남한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42%만이 6점 또는 7점을 부여한 것에 비하면 16%나 높은 비율이다.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5년 거주자보다 6년~10년 사이 거주자가, 6년~10년 사이의 거주자보다 16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이 더 높은 비율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의 주요한 자질이라는 데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에서의 교육과 거주기간은 북한이탈주민의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민성 배양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집단의 경우 생각이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비율이 거주기간이 그보다 짧은 두 집단보다 낮다는 것이다. 즉 거주기간이 1년~5년 그리고 6년~10년인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은 20대와 60대가 다른 세대보다 높은 비율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1>에 보이듯이 20대와 60대 응답자의 41%가 6점 혹은 7점을 부여하였다. 반면 실질적인 주요 소비계층으로 알려진 40대 그리고 50대 북한이탈주민의 30% 정도가 6점 혹은 7점을 부여했다. 이러한 양상은 남한 주민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의하면 남한 주민의 20대와 30대가 40, 50대 그리고 60대에 비해 낮은 비율로 6점과 7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40대와 50대는 경제활동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20대와 30대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윤리적 소비를 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 특히 40대 이상은 경제활동 주체로서 남한의 40대 이상보다 경제적 불안감이 더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를 사치로 생각하거나 윤리적 소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자율적 시민성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윤리적 소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는 거주기간이 11년~15년인 집단을 제외하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높은 점수로 강조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남한 거주기간이 1년~5년인 북한이탈주민의 34%가 6점 혹은 7점을 부여한 반면 16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53%가 6점 혹은 7점을 부여하였다.

표 VII-11 윤리적 소비

(단위: 명(%))

	측정척도	1	2	3	4	5	6	7	Total
연령	20대	4 (6.35)	0 (0.00)	3 (4.76)	13 (20.63)	17 (26.98)	13 (20.63)	13 (20.63)	63 (100)
	30대	9 (13.64)	0 (0.00)	8 (12.12)	14 (21.21)	15 (22.73)	7 (10.61)	13 (19.70)	66 (100)
	40대	9 (11.11)	5 (6.17)	10 (12.35)	17 (20.99)	17 (20.99)	12 (14.81)	11 (13.58)	81 (100)
	50대	7 (14.89)	4 (8.51)	3 (6.38)	13 (27.66)	4 (8.51)	6 (12.77)	10 (21.28)	47 (100)
	60대 이상	4 (10.81)	3 (8.11)	6 (16.22)	4 (10.81)	5 (13.51)	7 (18.92)	8 (21.62)	37 (100)

		측정척도	1	2	3	4	5	6	7	Total
교육	없다		22 (13.92)	8 (5.06)	18 (11.39)	35 (22.15)	25 (15.82)	21 (13.29)	29 (18.35)	158 (100)
	있다		9 (7.14)	1 (0.79)	12 (9.52)	25 (19.84)	32 (25.40)	23 (18.25)	24 (19.05)	126 (100)
거주 기간	1년~5년		8 (10.39)	5 (6.49)	6 (7.79)	18 (23.38)	14 (18.18)	7 (9.09)	19 (24.68)	77 (100)
	6년~10년		11 (11.11)	2 (2.02)	9 (9.09)	21 (21.21)	17 (17.17)	18 (18.18)	21 (21.21)	99 (100)
	11년~15년		13 (13.13)	5 (5.05)	13 (13.13)	21 (21.21)	22 (22.22)	15 (15.15)	10 (10.10)	99 (100)
	16년 이상		1 (5.26)	0 (0.00)	2 (10.53)	1 (5.26)	5 (26.32)	5 (26.32)	5 (26.32)	19 (100)

출처: 필자 작성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6점과 7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가 가장 낮은 비율로 6점과 7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는 응답자가 더 높은 비율로 6점과 7점을 부여하였다. 거주기간별로 사람을 돕는 것과 관련된 시민성을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11년~15년인 북한이탈주민 중 6점과 7점을 부여한 응답자는 겨우 33%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반면에 다른 거주기간 집단의 경우 50% 이상의 응답자가 6점과 7점을 부여했다.

표 VII-12 어려운 사람 돕기

(단위: 명(%))

		측정척도	1	2	3	4	5	6	7	Total
연령	20대		1 (1.56)	5 (7.81)	3 (4.69)	9 (14.06)	8 (12.50)	14 (21.88)	24 (37.50)	64 (100)
	30대		2 (3.03)	3 (4.55)	4 (6.06)	10 (15.15)	19 (28.79)	13 (19.70)	15 (22.73)	66 (100)
	40대		7 (8.54)	1 (1.22)	7 (8.54)	19 (23.17)	13 (15.85)	11 (13.41)	24 (29.27)	82 (100)

		측정척도	1	2	3	4	5	6	7	Total
연령	50대	8 (16.67)	4 (8.33)	1 (2.08)	10 (20.83)	8 (16.67)	4 (8.33)	13 (27.08)	48 (100)	
	60대 이상	7 (18.92)	0 (0.00)	5 (13.51)	7 (18.92)	3 (8.11)	8 (21.62)	7 (18.92)	37 (100)	
교육	없다	17 (10.63)	8 (5.00)	13 (8.13)	32 (20.00)	22 (13.75)	24 (15.00)	44 (27.50)	160 (100)	
	있다	7 (5.51)	4 (3.15)	6 (4.72)	22 (17.32)	27 (21.26)	23 (18.11)	38 (29.92)	127 (100)	
거주 기간	1년~5년	6 (7.59)	4 (5.06)	7 (8.86)	15 (18.99)	7 (8.86)	9 (11.39)	31 (39.24)	79 (100)	
	6년~10년	8 (8.00)	4 (4.00)	4 (4.00)	15 (15.00)	19 (19.00)	25 (25.00)	25 (25.00)	100 (100)	
	11년~15년	10 (10.10)	5 (5.05)	9 (9.09)	23 (23.23)	19 (19.19)	12 (12.12)	21 (21.21)	99 (100)	
	16년 이상	1 (5.26)	0 (0.00)	0 (0.00)	2 (10.53)	6 (31.58)	4 (21.05)	6 (31.58)	19 (100)	

출처: 필자 작성

요약하면,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시민성을 제외한 네 개의 자율적 시민성 항목에서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낮은 비율로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연령집단에서는 50대가 다섯 개의 자율적 시민성 항목 중 사회정치참여, 다른 생각 이해하기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돕는 것과 관련한 시민성에 가장 낮은 비율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서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다음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을 연령, 남한 교육 여부 및 거주기간 차이에 따른 집단 간 차이와 특징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5.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가.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남한 교육 여부 및 거주기간별 의무적 시민성

(1) 연령

먼저 연령집단에 따라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했듯이 투표 참여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데는 연령집단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면밀히 연령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One-way ANOVA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F-검증 값을 구해 각 집단 간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F값이 충분히 커서 P값(p-value)이 0.05보다 작은 경우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95% 수준에서, 0.1보다 작은 경우 9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VII-13 의무적 시민성: 연령집단별 평균값

연령	의무적 시민성				
	투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법과 규칙 준수
전체	297명	5.65 (2.07)	296명	5.47 (2.08)	5.90 (1.70)
20대	64명	5.73 (2.00)	64명	5.66(1.97)	6.14(1.46)
30대	66명	5.94 (1.84)	66명	5.82(1.72)	5.99 (1.60)
40대	82명	5.68 (2.02)	82명	5.43(2.12)	6.09(1.39)
50대	48명	5.00 (2.43)	48명	4.77(2.37)	5.28 (2.23)
60대 이상	37명	5.78 (2.14)	36명	5.54(2.22)	5.68 (2.01)
F-검증(P 값)		1.58 (0.18)		2.01(0.09)	2.37(0.05)

*평균값

출처: 필자 작성

〈표 VII-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30대와 60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특히 30대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 국민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2014 한국 종합사회조사(KGSS)에 따르면 동일한 문항에 대해 남한 국민들은 20대와 30대 보다 40대와 50대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투표의 의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집단별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모든 연령집단의 평균값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50대를 제외한 20대, 30대 그리고 60대의 평균값이 비슷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특정 연령집단 간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표 VIII-13>에 보이는 바와 같이 50대와 30대의 평균값 차이는 크다. 분산분석을 통해 50대와 30대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52$; $P=0.02$).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특히 50대가 투표의 중요성에 부여한 낮은 점수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비교적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20대가 두 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반면 50대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집단 간에 나타나는 평균값 차이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30대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50대의 평균값 차이는 1% 미만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48$; $P=0.007$). 그리고 20대와 50대 두 연령집단 간 차이는 5%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65$; $P=0.03$). 종합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 중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납세자로서 높은 시민성을 가지고 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젊은 세대가 더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표 VII-13>의 세 번째 열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대, 30대 그리고 40대가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비록 40대가 30대보다 0.1% 포인트 높은 평균값을 갖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50대와 60대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20대의 평균값이 6.14인 것에 비해 50대는 5.28, 60대 이상은 5.68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령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는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남한 교육

앞서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받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은 비율로 높은 의무적 시민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평균값 비교에서도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받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의무적 시민성을 보였다.(<표 VII-14> 참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투표 참여를 중시하는 시민성은 남한에서 교육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한에서의 교육이 평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투표와 관련한 시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도 투표 참여가 중요한 시민의 자질로 강조되고 동원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투표 참여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의 중요성의 경우도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균값이 5.76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이러한 남한에서의 교육 유무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주의와 다른 경제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에게 납세와 관련한 시민성 배양에 학교 교육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한 시민성의 평균값은 남한 교육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법과 규칙을 실제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남한 교육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북한에서부터 법과 규칙의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이미 사회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남한 주민에 비해 준법의식 시민성의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보아 남한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준법의식 고양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표 VII-14 의무적 시민성: 남한 교육 여부에 따른 평균값

남한 교육	의무적 시민성					
	투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법과 규칙 준수	
전체	287명	5.66	286명	5.48	286명	5.93
없다	160명	5.49	160명	5.25	159명	5.92
있다	127명	5.87	126명	5.76	127명	5.94
T-검증(P-value)	-1.54(0.124)		4.33(0.04)		0.01(0.92)	

출처: 필자 작성

(3) 거주기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무적 시민성의 평균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6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은 의무적 시민성을 보였다. 한편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시민성을 보인 집단은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북한이탈주민이었다. 법과 규칙 준수의 중요성 항목에서 가장 낮은 시민성을 보인 것은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었다. 즉 전반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I-15 의무적 시민성: 거주기간에 따른 평균값

거주기간	의무적 시민성				
	투표 의무		납세 의무		법과 규칙 준수
전체	297명	5.63	296명	5.46	5.90
1년~5년	79명	5.53	79명	5.28	5.92
6년~10년	100명	5.62	99명	5.40	5.95
11년~15년	99명	5.70	99명	5.51	5.76
16년 이상	19명	6.11	19명	6.21	6.21
F검증(P값)	0.41(0.74)		1.08 (0.36)		0.47(0.70)

출처: 필자 작성

그러나 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이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특정 거주기간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는 다수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납세와 관련한 시민성의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하와 16년 이상인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약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 값=3.32; P값=0.07).

결론적으로 남한에서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전통적인 시민의무와 관련한 시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라 보이는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새로운 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은 구체적 요소로 특정하기 어려운 정치사회화 과정 전반을 포괄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한 거주기간이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의무적 시민성을 향상시키기는 하지만 세월의 축적에 비례하는 만큼 의무적 시민성을 배양한다는 기대는 재고되어야 한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은 종합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 항목 세 개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만들었다. 의무에 기반으로 한 시민성 세 가지에 모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 각 항목 최저 점수인 1점의 합산인 3점이 부여된다. 반면 모든 항목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7점을 부여한 경우 21점이 부여된다. 이 지표를 연령, 남한 교육 여부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의 평균값은 17.0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항목으로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합산 지표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 남한 주민은 18.3의 평균값을 보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은 남한 주민의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6〉은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성을 연령, 남한에서 교육 여부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30대가 가장 높은 의무적 시민성을 보였다. 20대와 40대는 30대보다 낮지만 비슷한 수준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집단 간 서로 다른 평균값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30대, 40대 평균값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0대의 낮은 평균값이 다른 연령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각 연령집단 간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장 높은 평균값의 30대와 가장 낮은 50대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한 결과,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값=7.49; P 값=0.007). 다시 말해 30대와 50대의 의무적 시민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이다. 50대와 20대 그리고 50대와 40대의 평균값 차이 역

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6 의무적 시민성

	사례수	평균값	F 값(p값)
연령 20대	64명	17.53	0.68 (0.82)
30대	66명	17.74	
40대	82명	17.18	
50대	47명	15.06	
60대 이상	37명	17.06	
남한 교육			-1.64(0.10)
없다	159명	16.69	
있다	126명	17.63	
거주 기간 1년~5년	79명	16.73	0.78(0.72)
6년~10년	98명	17.05	
11년~15년	99명	16.96	
16년 이상	19명	18.53	

*교육수준의 경우 T-값

출처 : 필자작성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받지 않은 경우보다 종합적으로 의무적 시민성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전통적인 시민의 의무와 관련한 시민성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한에서의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거주기간의 경우 거주기간이 가장 긴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1년~5년 그리고 11년~15년인 집단이 유사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의무적 시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1년~5년 집단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의무, 특히 납세나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그보다 짧은 6년~10년 동안 거주한 북한이탈주민보다 낮은 의무적 시민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거주기간이 11년에서 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 규범에 대해 실망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 남한에서 살면서 실제로 느낀 남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남한 사회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시민상이라는 믿음이 낮아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들이 의무적 시민성을 다하는 시민의 모습에 낮은 가치를 부여한 원인 중 하나는 사회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회 및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가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 혹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민주사회의 제도와 법에 대한 공적 신뢰가 낮아졌을 수 있다. 그 결과 투표를 하고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이 되면서 시민성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주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남한 사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남한 교육 여부 및 거주 기간별 자율적 시민성

(1) 연령

〈표 VII-17〉은 북한이탈주민의 다섯 가지 자율적 시민성 항목을 연령 집단별로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연령집단별로 관찰된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한지 분석한 결과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정부 일에 관심을 갖는 데 40대가 가장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사회·정치단체 참여에 있어

서는 30대가 가장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나머지 세 개 항목, 즉 타인의 이해, 윤리적 소비,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와 관련한 시민성에서는 20대가 가장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반면 50대와 60대는 모든 항목에서 낮은 자율적 시민성을 보였다.

특히 앞서 50대가 타인에 대한 이해, 윤리적 소비,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 항목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평균값에서도 50대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자율적 시민성이 가장 결여된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정하는 4점 혹은 5점을 부여한 비율 역시 낮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50대는 자율적 시민성이 가장 결여된 집단으로 판단된다.

정부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과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시민성의 연령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된 연령집단 간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정치단체 참여, 다른 의견의 이해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와 관련한 시민성의 경우 연령집단별로 보이는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I-17>에 제시된 P값을 보면 사회·정치단체 참여와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의 중요성의 경우 5% 수준에서, 다른 의견 이해의 중요성의 경우 1% 수준에서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적인 유의미성 분석과 더불어 특정 두 연령집단 간 평균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정치단체 참여의 경우 50대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와 각각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를 보였다. 60대 역시 20대, 30대 그리고 40대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50대와 60대의 평균적 사회·정치단체 참여와 관련한 시민성 수준이 20대, 30대, 40대 각각의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과 관련해서도 50대와 60대는 젊은 연령대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하면, 젊은 연령집단이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집단보다 자율적 시민성이 높고 이들이 보이는 높은 시민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표 VII-17 자율적 시민성: 연령집단별 평균값

연령	자율적 시민성									
	정부에 관심		단체 참여		의견 이해		윤리적 소비		사람 돕기	
전체(명)	296	5.04	296	4.14	295	5.09	294	4.54	297	4.94
20대	64명	4.97	64명	4.406	64	5.61	63	5.06	64	5.44
30대	66명	5.09	66명	4.545	66	5.41	66	4.50	66	5.12
40대	88명	5.28	82명	4.182	82	5.24	81	4.33	82	4.94
50대	48명	4.81	48명	3.395	47	4.15	47	4.30	48	4.46
60대 이상	37명	4.86	36명	3.833	36	4.50	37	4.51	37	4.38
F값(P-값)	0.59 (0.67)		2.79 (0.03)		6.48(0.000)		1.71 (0.148)		3.00(0.02)	

출처: 필자 작성

(2) 남한 교육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의견 이해, 윤리적 소비,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 항목에서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이는 높은 시민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사회·정치 참여의 경우는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남한에서의 교육은 타인을 배려하고 관용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데 유효하다 것을 시사한다.

표 VII-18 자율적 시민성: 남한 교육 여부에 따른 평균값

남한 교육	자율적 시민성									
	정부에 관심		단체 참여		의견 이해		윤리적 소비		사람 돕기	
전체(명)	286	5.09	286	4.16	285	5.11	284	4.57	287	4.95
없다	159	5.06	160	4.01	159	4.87	158	4.34	160	4.76
있다	127	5.11	126	4.36	126	5.42	126	4.87	127	5.20
T 값 (P값)	0.03(0.86)		-1.47(0.14)		-2.60(0.00)		-2.40(0.02)		-1.97(0.05)	

출처: 필자 작성

(3) 거주기간

앞서 개별적으로 분석된 의무적 시민성에서 거주기간이 1년~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은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특히 투표 참여와 납세의무와 관련한 규범의식에서 가장 낮은 시민성을 보였다. 그런데 <표 VII-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율적 시민성에서는 거주기간이 16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과 더불어 거주기간이 1년~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거주기간이 1년~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은 정부 일에 관심, 사회·정치단체 참여에서 가장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 사회에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그들이 실제로 정치참여를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II-19 자율적 시민성: 거주기간별 평균값

거주기간	자율적 시민성									
	정부에 관심		단체 참여		의견 이해		윤리적 소비		사람 돕기	
전체(명)	296	5.04	296	4.14	295	5.09	294	4.54	297	4.93
1년~5년	79	5.18	79	4.58	78	5.17	77	4.58	79	5.08
6년~10년	100	5.04	99	4.151	99	5.19	99	4.71	100	5.08
11년~15년	98	4.98	99	3.808	99	4.81	99	4.20	99	4.58
16년 이상	19	4.84	18	4	19	5.73	19	5.32	19	5.53
F-값(P-값)	0.23(0.88)		2.16(0.09)		1.69(0.17)		2.49(0.06)		2.23(0.08)	

출처: 저자 작성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이 짧은, 즉 막 한국에 들어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전혀 다른 정치체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중시하고 적극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타인의 이해나 관용 혹은 탈물질적 가치의 내면화보다 정치사안과 같이 보다 직접적으로 현실과 관련한 시민성 배양이 먼저 일어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남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이나 대북정책 등에 관심이 클 수 있다.⁴⁵⁾ 따라서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응의 결과라기보다 이들이 사회적응의 한 수단으로 사회·정치단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치단체 활동 참여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의견 이해, 윤리적 소비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에서 가장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 그리고 탈물질적 가치를 보다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가치 지향적 시민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거주기간에 따라 모든 범주집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균값 차이는 사회·정치 참여, 윤리적 소비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은 평균값에 있어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자율적 시민성을 보였다. 거주기간이 11년~15년인 집단이 보이는 낮은 평균값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해석

45) 김수암·김희순·민태은·박주화,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183~185.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거주 집단과 비교하였다. 즉 정부 일에 대한 관심, 사회·정치단체 참여 항목의 경우 거주기간이 1년~5년인 집단과 비교하였고, 다른 의견 이해, 윤리적 소비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 항목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인 집단과 비교하였다. <표 VII-20>은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VII-20>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자율적 시민성 항목에서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 집단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집단과 5% 혹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거주기간이 11년에서 1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은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은 시민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표 VII-20 거주기간 11년~15년 집단의 평균값과 최고 평균값 집단 간 분산분석

거주기간	정부에 관심	단체 참여	의견 이해	윤리적 소비	사람 돕기
F 검증	0.48	6.45	4.19	6.27	4.36
p 값	0.4910	0.01	0.04	0.01	0.04

출처: 필자 작성

라.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적 시민성

북한이탈주민의 포괄적인 자율적 시민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섯 가지 항목을 각각 통합하여 하나의 합산 지표(compound index)로 만들었다. 자율성에 기반을 둔 시민성 다섯 가지 항목 모두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 각 항목 최저 점수인 1점의 합산 점수인 7점이 부여된다. 반면 모든 항목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7점을 부여한 경우 35점이 부여된다. 따라서 자율적 시민성의 경우 최저점은 5점, 최고점은 35점이

된다. 이 합산 지표를 연령, 남한 교육 여부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살펴 보았다. 합산 지표에 따른 자율적 시민성의 평균값은 23.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를 위해 같은 항목으로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합산 지표를 만들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남한 주민은 25.6의 평균값을 보였다. 요약하면, 의무적 시민성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적 시민성은 남한 주민의 평균보다 낮다.

〈표 VII-21〉은 자율적 시민성을 연령, 남한에서의 교육 여부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개별 항목을 종합한 자율적 시민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가 가장 높은 자율적 시민성을 보였고 30대가 두 번째로 높은 자율적 시민성을 보였다. 50대의 자율적 시민성은 60대보다 낮지만 분산분석 결과, 50대와 60대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찰된 연령집단 간 자율적 시민성 차이는 10% 수준에서 약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높은 자율적 시민성을 보이는 20대와 가장 낮은 시민성을 보이는 50대의 평균값의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값=4.78; P 값=0.03).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자율적 시민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⁴⁶⁾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젊은 북한이탈주민이 나이가 많은 북한이탈주민보다 보다 높은 참여적 시민성의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모든 개별 자율적 항목에서 예외 없이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합산 지표 역시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율적 시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남한에서

⁴⁶⁾ Russell J. Dalton,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p. 85~91; 최지영·천희주·이명진, "한국 사회의 세대별 시민성 비교 연구." pp. 113~120.

의 교육 여부에 따른 평균값 차이는 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2%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받지 않은 북한이탈주민 간에 관찰되는 시민성 수준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라는 것이다.

개별 자율적 항목의 경우, 항목에 따라 거주기간이 1년~5년인 북한이탈주민과 16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은 자율적 시민성을 보였다. 그러나 합산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은 자율적 시민성을 보였다. 앞서 거주기간 16년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은 의무적 시민성도 가장 높았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이 되면 민주주의 시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인 집단 다음으로 거주기간이 1년~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적 시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 시민성의 경우, 이들은 다른 거주집단과 비교해 가장 낮은 의무적 시민성 보였다. 즉 이들의 경우, 규범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세금을 내고 법과 규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에 막 입국한 사람들은 더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 비해 자율적 시민성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차별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암시한다. 의무적 시민성은 규범적이고 당위적 시민의 자질이다. 따라서 자율적 시민성에 비해 민주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체제에서도 방식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강조된다. 하지만 자율적인 시민 자질의 경우는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의 가치판단을 통해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 판단을 하는 데는 민주사회에서의 일정 정도의 적응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인 사람들의 자율적 시민성이 높은 것은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1년에서 5년 사이의 사람들의 자율적 시민성이 높다

는 것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자율적 시민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거주기간이 1년에서 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가 낮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거주기간이 1년에서 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 79명 가운데 27명, 즉 34%가 20대이다. 거주기간이 1년에서 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연령 효과가 투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자율적 시민성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사람들보다 높은 이유는 자율성과 평등의 가치관을 접하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즉 20년 이상 자율적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러한 자율성과 평등의 가치를 접한 시기는 매우 짧다. 또한 이 거주기간의 연령대를 보면 30대와 40대가 47%로 매우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1년에서 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높은 자율적 시민성을 연령의 효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새로운 민주사회 시민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즉, 자율적 시민성의 가치를 내면화했다기보다 새로운 민주사회에서 접하게 된 자율적 시민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여려는 이들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1년~15년 동안 남한에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은 의무적 시민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율적 시민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장 낮은 자율적 시민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른 자율적 시민성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그러나 전체 비교가 아니라 11년~15년 거주한 집단과 16년 이상 거주한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11년~15년 거주한 집단의 자율적 시민성 평균값이 16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F 값: 3.47, P 값: 0.06).

이렇듯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인 사람들의 시민성이 낮은 이유는 추가 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정치사회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치심리학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낮은 시민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과의 상관관계이다. 자율적 시민성의 경우 50대와 60대의 시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50대와 60대일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거주기간 11년~15년 사이를 구성하는 연령집단 중 가장 많은 다수는 40대였다. 40대가 거주기간 11년~15년인 북한이탈주민의 30%를 차지한다. 반면 50대는 20%, 60대 이상은 14%로 50대와 60대가 11년~15년 사이 거주자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11년~15년인 북한이탈주민보다 자율적 시민성이 높은 16년 이상 집단에서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은 것이다. 16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53%가 50대와 60대이다. 즉 연령의 효과가 거주기간에 투영되어 나타났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이 입국한 시기의 남한 사회 여건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시기는 대략 2002년 초 부터 2006년 말 사이이다. 김대중 정부(1998~2003) 말기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8) 중후반기에 남한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낮은 시민성을 보이는 이유로 당시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탄핵 소추 등 민주주의 정치의 혼란을 경험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즉 입국 시기에 경험한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이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인 시민성을 익히는 데 상대적

으로 불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거주기간이 11년~15년인 북한이탈주민이 소위 ‘정치 알바’에 가장 많이 동원된 집단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실망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즉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10년이 지나면서 자율적 시민성에 부여한 가치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경험하며 자율적 시민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주기간이 11년에서 15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자율적 시민성은 민주주의 체제에 걸었던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양하는 것과 선형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VII-21 자율적 시민성

	사례수	평균값	F 값(p값)	
연령	20대	63명	25.55	
	30대	66명	24.67	
	40대	80명	23.92	1.38(0.10)
	50대	47명	21.19	
	60대 이상	35명	22.42	
남한 교육	없다	154명	23.07	
	있다	124명	25.08	-2.40(0.016)
거주 기간	1년~5년	77명	24.71	
	6년~10년	97명	24.31	
	11년~15년	98명	22.33	0.99(0.48)
	16년 이상	19명	25.42	

*교육수준의 경우 T-값

출처: 필자 작성

6. 정책제언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내면화하는 것은 민주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정치사회화 노력을 요구한다. 특히 다른 나라나 문화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 그 사회화 과정은 이주자와 이주자가 살아갈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해외에서 온 이주자나 조선족과 같은 재외 동포들보다도 매우 이질적인 정치 및 경제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남한에서 민주시민의 자질, 즉 시민성을 획득하고 실천하는 것은 더욱 힘든 과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남한의 완전한 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핵심적인 정치적 가치와 문화를 익히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다 같이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향유는 ‘바람직한’ 동료시민들에게 의존한다. 즉 시민들 모두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다 다양한 사회 집단 간 통합과 안정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민성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특히 낮은 시민성은 낮은 사회 및 개인 간 신뢰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⁷⁾ 낮은 신뢰는 사회갈등의 증가로 이어지며 낮은 신뢰와 높은 사회갈등은 시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이는 타협과 이해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의사결정을 하며 운영되는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사회통합문

⁴⁷⁾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Francis Fukuyama,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The Coming Agenda” *SAIS Review* (2002), vol. 22, no. 1, pp. 23~37.

제와 직결되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무적 시민성의 경우 젊은 층의 시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한에서의 교육은 의무적 시민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규범적 시민성 함양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입국 직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한 입국 후 하나원에서 정착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주기간이 11년에서 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실망이나 소외감으로 바뀌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입국 초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차원의 정치교육이나 제도적 시민교육과 더불어 일상에서의 민주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의된 「민주시민교육법」도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와 발의 법안 안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나 다문화시민이 소외되어 있다. 또한 어떻게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으로 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지에 대한 논의 역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이들의 민주시민으로

로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 교육 안에서 남한 국민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한 국민의 시민성 수준도 함께 높일 수 있다. 즉 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진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포용하는 시민성을 배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일의 과정은 제도적 통합뿐만 아니라 시민의 통합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과정과 통일 후의 모습은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새로운 사회의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기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특징을 DB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경우 새로운 사회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정치적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이민자와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1년~5년인 북한이탈주민은 의무적 시민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율적 시민성의 경우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의무적 시민성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은 의무적 및 자율적 시민성 모두에서 가장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과정을 선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민주 시민으로 적응할

것이라는 기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전반적으로 시민성이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번조사에서만 나타난 특징인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이들의 민주주의 적응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거주기간이 짧은 북한이탈주민보다 11년~15년 동안 한국에서 지낸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이 낮아지는 것은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이들이 민주주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갈등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갈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국 직후가 아니라 입국한 지 10년이 지나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단순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민주시민 적응과정을 돕는 것은 장기적 안목과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과정은 선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남한에서의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거주 주기별(예, 생애주기별과 같이)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주기간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학적 특징들을 DB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거주기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적응 양상을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민주시민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을 북한이탈주민이 속한 다양한 사회기관 및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치단체 참여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정치단체 참여는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⁴⁸⁾ 다시 말해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다양한 참여를 통

해 다른 생각의 이해, 관용 그리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정치단체 참여와 관련하여 낮은 시민성을 보였다. 이는 실제로 낮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낮은 사회 및 정치 참여는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배양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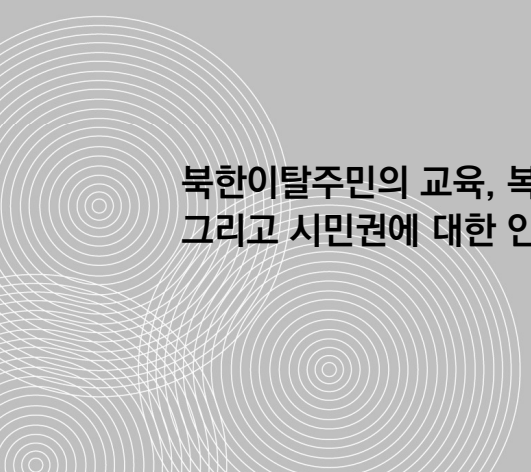
다만 그들의 정치적 의사나 신념과 관계없이 동원되거나, 특정 정파, 이념 또는 정권의 생각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사회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 참여의 경험과 더불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쌓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 동원을 위한 단체 활동을 넘어서 다양한 지식, 경험 그리고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경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별로 재정 및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유지는 지속적으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역량 있는 민주시민이 사회구성원으로 충원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민주시민으로 재사회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들에게 통일의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이전에 이들이 완전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먼저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49) 김영인,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 연구』, 제 14권 6호 (2007), pp. 99~127; 도묘연, “NGO 참여 활동의 시민교육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21세기 정치학회』, 제20권 2호 (2010), pp. 77~100.

VIII.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목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 추진이다. 특히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추진의 방안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이 제시되었다.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 간 서로 다른 대북통일 인식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일기반 조성은 정부 중심의 통일정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사회집단과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관용하는 시민사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견해에 대한 관용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가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집단에 속한 국민들은 서로 다른 이념과 이해관계로 북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대북·통일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국민적 지지와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합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공유된 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하며 신뢰를 쌓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전혀 다른 정치경제 체제에서 온 우리국민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여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특성, 가치 그리고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공동의 사회적 국가적 목표와 가치를 추구할 것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공유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및 복지는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안정화될수록 주요한 쟁점이자 정책 사안이다. 다수의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부족했다. 또한 통일 후 북한 주민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고 통일 국가가 민주적으로 안정화 되는 데도 교육과 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통일비용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도 통일국가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교육 및 복지기대 수준 및 비용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예측 지표가 된다.

학교 교육은 세대를 거듭해 특정 사회가 지향하고 발전시켜 온 지식, 가치, 문화 및 철학을 전달하는 핵심이다. 동시에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를 배우는 곳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이들의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교육통합 방식 및 교육통합 관련 정책 쟁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연령, 교육 수준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 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한 조사결과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교육에 비해 남한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의 기대 수준에 맞춘 교육 기회의 배분이 교육정책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통합의 방법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6%가 남북한 교육의 장단점을 고려한 절충적 통합을 선호했다. 특히 북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절충적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더 컸다. 또한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교육과정을 대폭 수정한 통합교육과정을 북한지역에 도입할 경우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시 남한 교육 중심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북한 교육 방식을 고려한 교육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남북한 교육통합정책과 관련하여 북한 학생이 남한 학교 입학 시 우대혜택이 필요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

간 교육 이동이 본격화되는 경우 남한지역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배분과 선발기준을 둘러싸고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연령대, 성별, 계층, 학력에 상관없이 과반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통일 이후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곳으로 남한지역을 선택했다. 그리고 남한 교사에 대한 선호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교육을 위한 이동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남북한 출신 교사와 북한 출신 학생이 함께 공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남한 주도 통일 시 북한 교사 재임용 정책에 관해서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자를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로, 특정 직급, 교과 교사를 배제하지 않되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남한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교사의 재임용 문제는 남북한 교육통합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정책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교사 재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절차, 심사에 따른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이후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생계비지원, 의료보험제도,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을 뽑았다. 이 세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중요하다고 동의한 비율이 10% 이상 높았다. 이는 통일 후 제일 먼저 실시해야 할 정책이 기초생계비 지원임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한 북한이탈 주민이 많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경우 건강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직후 의료보장제도의 실시가 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통일 후를 대비한 의료보장제도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연령이 많고 북한에서의 학력수준이 높으며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높은 비율로 통일 이후 북한 실정에 맞는 수준의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입국 연한이 최근일수록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가 적정복지 수준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즉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복지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직후 다수의 북한 주민들도 그러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복지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는 통일 후 복지보장제도가 북한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엘리트의 역할을 고려한 복지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당원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높은 비율로 북한 실정에 맞는 복지가 적정 복지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엘리트의 복지정책 태도가 보수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북한 엘리트는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직후 북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엘리트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엘리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복지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 교육과 복지는 모든 국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사안이다. 예외없이 누구나 국민이면 교육 및 복지정책의 대상이며 이해당자사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에 관련정책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기관 및 정부의 역할을 감시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납세 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교육과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민주주의 시민의 역할을 다할 때 바람직한 정책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회에서 온 새로운 사회구성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우리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사회는 민주시민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그러는 민주시민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 즉 시민성은 연령과 교육과 거주기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무적 시민성의 경우 젊은 층의 시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율적 시민성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가 가장 높은 자율적 시민성을 보였고, 30대가 두 번째로 높은 자율적 시민성을 보였다. 50대의 자율적 시민성은 60대보다 낮지만 분산분석 결과, 50대와 60대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교육을 받을수록 민주주의의 의무적 시민성과 자율적 시민성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에서의 교육은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주기간의 영향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거주기간이 1년~5년인 북한이탈주민은 의무적 시민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율적 시민성의 경우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의무적 시민성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은 의무적 및 자율적 시민성 모두에서 가장 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민주 시민으로 적응할 것이라는 기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신 남한에서의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규범적 시민성 함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강화해

야 한다. 예를 들면 남한 입국 후 하나원에서 정착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지역 적응센터(하나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시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시민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을 북한이탈주민이 속한 사회기관 및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그들이 민주시민 교육의 주체가 되는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의식(27문항)

문1. 자녀들이(또는 본인) 교육을 받은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 | | |
|---------------------|---------------|-----------|
| 1) 한국 사회에 적응 | 2) 기본적인 생활 능력 | 3) 인격 배양 |
| 4) 지식과 기술 습득 | 5) 대학 진학 | 6) 좋은 일자리 |
| 7) 인간관계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 | |

문2. 학교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 지식을 배우는 곳
- 2)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 3)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규율을 익히는 곳
- 4) 친구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
- 5) 미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는 곳
- 6) 성공(출세)을 위한 기초를 닦는 곳
- 7) 나라를 발전시킬 인재를 기르는 곳

문3. 남한 사회에서 자녀들이(또는 본인) 어느 단계까지 교육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 | | | | |
|---------|--------|-------|-------|
| 1) 고등학교 | 2) 대학교 | 3) 석사 | 4) 박사 |
|---------|--------|-------|-------|

문4. 남한에 와서 자녀들 또는 본인이 정규 초중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대안학교 제외)

- 1) 본인과 자녀 모두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
 - 2) 본인만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
 - 3) 자녀만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
 - 4) 본인과 자녀 모두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다.
- ※ ①, ②, ③번 응답자는 다음 문항부터 계속 응답해주시고, ④번 응답자는 5-9번 문항은 건너뛰고 10번 문항부터 응답해주시시오.

문5. 자녀들이(또는 본인) 남한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측면은 무엇 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 | | |
|---------------------------|--------------------------|
| 1) 학교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움 | 2)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어려움 |
| 3)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움 | 4)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어려움 |
| 5) 학교 운영 시스템이 북한과 달라서 어려움 | 6) 학교 교칙과 문화가 북한과 달라 어려움 |
| 7) 경제적 부담이 크다. | |

문6. 자녀들이(또는 본인) 남한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과 학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 1) 북한과 교과목과 교육내용이 다르다.
- 2) 배우는 분량이 너무 많고 속도가 빠르다.
- 3) 교육 내용의 수준이 너무 높다(어렵다).
- 4) 교과서에서 쓰는 말이나 교사가 설명하는 말이 북한과 달라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 5) 남북한의 문화가 달라 교과서나 수업시간에 예로 드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 6) 발표나 토론 등 수업방법, 시험방법이 북한과 달라 어렵다.
- 7) 어려운 점이 별로 없었다.

문7. 자녀들이(또는 본인) 남한 학교 적응 시 학교 선생님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무엇인가?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 2)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는 것
- 3) 교사가 탈북학생에게 무관심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 4) 진로지도 등에 있어서 교사가 학부모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 5) 교사가 탈북 학생을 남한 출신 학생들과 차별을 하는 것
- 6) 교사가 자신의(또는 자녀들의) 동의 없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어려움을 겪게 한 것
- 7) 어려운 점이 별로 없었다.

문8. 자녀들이(본인) 남한 학교 적응 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무엇인가?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 말투가 다름
- 2) 문화적 차이(게임, 노래, 옷차림 등) 때문에 같이 어울리기 어려움.
- 3) 남한 친구들의 따돌림과 무시
- 4) 북한 출신임을 숨겨야 해서 갖게 되는 위축감
- 5) 학원에 다니지 못해 학교 외부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됨
- 6) 어려운 점이 별로 없었다.

문9. 자녀들이(또는 본인) 남한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학교 교육 운영이 북한과 달라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 담임이 해마다 바뀐다.
- 2) 성적과 생활지도를 학교에서 맡아서 하기 보다는 학부모 책임으로 돌린다.
- 3) 학교에서 챙겨가야 하는 준비물이나 숙제가 많다.
- 4) 가정통신문이나 성적표 등 학교에서 공지하는 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5) 진로 문제 등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 6) 어려운 점이 별로 없다.

문10. 현재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 1) 매우 잘 하고 있다. 2) 잘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못하고 있다. 5) 매우 못하고 있다.

문11. 한국은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지 않다. 6) 잘 모르겠다.

문12. 한국은 교육을 잘 받으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지 않다. 6) 잘 모르겠다.

문13. 남한 사회에서 학교 교육 이외에 사교육을 받는 것이 자녀(본인)의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도움이 안 된다. 5) 전혀 도움이 안 된다. 6) 잘 모르겠다.

문14. 남한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입시위주 교육
2) 배우는 과목이 많고 내용이 어려움
3) 경쟁주의적 학교문화
4) 학교 폭력(왕따)
5) 교사 권위 하락
6)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
7) 과도한 사교육

문15. 남한 교육의 특성 중 남북한 교육통합 이후 꼭 적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것을 중요시한다.
2)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존중된다.
3) 교사가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친절하다.
4) 개인(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많다.
5)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 교육 환경, 시설이 좋다.

문16. 북한에서 생활하실 당시 북한의 소학교, 중학교(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교육을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 1) 매우 잘 하고 있다.
- 2) 잘하고 있다.
- 3) 보통이다.
- 4) 못하고 있다.
- 5) 매우 못하고 있다.

문17. 북한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 과도한 정치사상 교육
- 2) 학생들에 과도한 노력동원
- 3)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이 떨어진다.
- 4) 학교 시설과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 5) 교사가 권위주의적이다.
- 6) 대학 진학 시 출신배경이 크게 작용한다.
- 7) 대학 진학, 학교 선택 등 개인의 선택 기회가 너무 적다.
- 8) 세 부담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문18. 북한 교육의 특성 중 남북한 교육통합 이후 꼭 적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 사교육이 없고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
- 2) 교사의 권위가 높고 교사를 존중
- 3) 엄격한 학교 규율과 질서
- 4) 학생들의 공동체意識(집단주의) 함양을 중시
- 5)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교육
- 6) 입시 위주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에 치중
- 7) 예체능 교육을 잘 시키는 것

문19. 통일 후 남북한 교육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통합
- 2) 남북한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육통합 방안 마련
- 3)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유지
- 4) 완전히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내용 도입

문20.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 새로운 제도, 정책에 대한 판단과 선택이 어려움
- 2)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 3) 교육내용 차이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감
- 4) 교육 방법의 차이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 5) 북한 출신 학생, 교사에 대한 차별 우려
- 6) 남북한의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

문21. 남북한 교육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 이전에 남한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1) 통합교육과정과 교과서 준비
- 2) 통일을 대비한 남한 교사 연수
- 3) 교육 통합 대비 북한 학부모 행정지원(안내) 체제 구축
- 4)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정(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
- 5) 남북한 주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남한 학부모·학생 교육 실시
- 6) 대북교육지원을 통한 북한의 교육 환경 개선

문22. 북한의 학부모라면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교육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 한 중 어느 지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남한 지역
- 2) 북한 지역
- 3)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문23.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남한 출신 교사가 북한 지역의 학교에 파견되어 배치될 경우 북한 학부모(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북한 출신 교사 보다는 남한 출신 교사에게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 2) 남한 출신 교사를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큰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 3) 문화, 사고방식,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 출신 교사들에게는 이질감을 느끼고 이들에게 배우 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 4)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수용할 것이다.

문24. 통일 이후 북한 학생이 남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때, 선발우선권 또는 인원할당제 등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남북한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통일 이후 장기간 북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2) 남북한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한 기간(예를 들어 5년 이내) 동안 북한 지역 출신 학생들 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북한 학생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남북한 학생 모두 동등한 학력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

문25.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 중 북한 지역에서 기존의 북한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새로운 통합교육과정을 완전히 도입하는데 필요한 과도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즉각 도입 2) 1년 이내 3) 1~3년 4) 3년 이상

문26.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서 통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학생들이 상대편 지역으로 교육적 이동(유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남북한 학생들 간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2) 통일 직후에는 교육적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정기간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 허용해야 한다.
3) 통일 직후부터 전면 허용해야 한다.

문27.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북한 교사의 고용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재심사과정 없이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간부(교장, 부교장)급을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간부(교장, 부교장)급과 정치사상 교과 담당 교사를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교사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그중 자격을 갖춘 자를 재고용해야 한다.

복지(국가 및 사회적 혜택)의식(18문항)

문28. 귀하의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빈칸을 채워주세요. 가구 구성원은 한집에서 사는 식구를 의미하지만 따로 사는 식구 중에 65세 이상 노부모 또는 독신인 학생이 있으면 포함해서 서술해주세요.

항 목	응 답 칸
1) 가구 내 영유아 수 (영유아: 만 6세 미만인 자)	명
2) 가구 내 초중고등학생 수	명
3) 가구 내 대학(원)생 수	명
4) 가구 내 노인 수 (노인: 만 65세 이상인 자)	명

문29. 현재 귀하의 가구구성원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한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가구 구성원은 한집에서 사는 식구를 의미하지만 따로 사는 식구 중에 65세 이상 노부모 또는 독신인 학생이 있으면 포함해서 응답해주세요.

항 목	응 답 칸
1) 가구구성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가구구성원이 실업급여(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돈)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가구구성원 가운데 장애인수당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가구구성원 가운데 고용주(사장), 자영업자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만약 고용주라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까?(해당되는 분만 체크)	① 예 ② 아니오
5) 가구구성원 중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복지기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 연구자·교육자 등)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30.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발전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재산 불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등을 우선하면 경제발전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귀하는 경제발전과 평등 분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제발전이 평등분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 2) 경제발전이 평등분배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 3) 평등분배가 경제발전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 4) 평등분배가 경제발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문31. 남한은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평등
- 2) 약간 평등
- 3) 약간 불평등
- 4) 매우 불평등

문32. 귀하는 빈곤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운이 없어서
- 2)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 3)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 4) 경쟁에 뒤처져서
- 5) 교육을 받지 못해서
- 6) 일할 기회가 없어서
- 7)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 8) 기타 (_____)

문33. 귀하는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
- 2)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
- 3)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
- 4) 빈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 5)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34.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의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된다.					
2)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떳떳한 일이다.					
3) 복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					
4)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의욕이 저하된다.					

문35. 귀하는 다음 보기 중에서, 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를 운영하고 제공하는 주체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자기 자신
- 2) 가족과 친척
- 3) 이웃주민
- 4) 지방자치단체
- 5) 정부

문36. 아래 각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의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나 가족이 돌봐야 한다.					
2) 부모에 대한 부양(요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3)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문37. 다음은 탈북자를 위한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 질문입니다. 아래 정부지출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정부지출	매우 늘려야 한다	약간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약간 줄여야 한다	매우 줄여야 한다
1) 건강과 관련된 정책(건강보험, 보건정책 등)					
2)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3) 교육 정책(교육비 지원, 인재 양성 등)					
4)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임대, 임대료지원 등)					
5)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생활비 보조, 근로참여 등)					
6)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요양, 가사지원, 여가 등)					
7) 장애인 생활지원(장애인수당, 활동보조 등)					
8)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출산장려금, 양육비, 학원비 지원 등)					
9)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직업훈련, 실업수당 등)					

문38. 위의 항목 가운데서 남한에 정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문39. 다음은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의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2) 나는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3) 나는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가 복지를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좋다.					

문40. 사회복지의 혜택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 어떠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2) 잘사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한다.
- 3) 조금 어려운 사람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4)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문41. 국민연금 은퇴 후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월급에서 일정부분 공제되는 국가의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본인이 요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하다 사고가 나거나 실업을 당하면 지급되는 돈으로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만 탈북자의 경우 입국 후 5년까지는 내지 않고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료보험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한 의료보험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따른 본인의 참여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란은 현재 본인이 직접 내고 있는 경우만 가입으로 표시해주세요.

항목	응답칸	
1) 국민연금 가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국민건강보험 가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개인의료보험 가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세금(연말정산 또는 개인소득세) 납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문42. 귀하는 다음 보기 중에서, 북한은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평등
- 2) 약간 평등
- 3) 약간 불평등
- 4) 매우 불평등

문43. 다음은 복지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혜택에 대해 귀하께서 북한에서 받아보신 정도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많이 받아봄	조금 받아 봄	거의 받지 못함	전혀 받지 못함
1) 무상치료제				
2) 무료교육제				
3) 국가 배급				
4) 탁아유치원제도				
5) 연로보장금, 사회보장금				

문44. 통일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래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의 견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통일이 되면 남북을 일정기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일되면 가족 친척들에게 남한에 와서 살라고 권고하겠다.				
3)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4)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남한에 오는 것이 더 낫다.				
5) 통일되어도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살려고 할 것이다.				
6) 통일된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내려오는 것을 막으면 불만이 폭등할 것이다.				
7) 통일되어도 북한 사람들은 제대로만 실행한다면 사회복지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시기 때 실시하던 제도가 남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45. 통일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래의 제도 중에 통일이 된 후 북한 주민들에게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복지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와 2순위만 선택하여 번호를 적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1) 국민건강보험제도
- 2)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제도
- 3)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 임대료지원
- 4) 기초생계비 지원
- 5) 장애인수당, 활동보조 등 장애인 생활지원
- 6) 탁아 유치원 지원
- 7) 직업훈련, 실업수당 및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

문46. 통일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래의 제도 중에 통일이 된 후 북한 주민들에게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복지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의 견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통일 이후 사회복지에 필요한 비용은 필수로 북한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2) 통일 이후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은 남한의 예산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				
3)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를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제공해야 한다.				
4)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 보다 낮은 수준에서라도 실제적인 사회복지혜택을 받으면 만족해 할 것이다.				

정치태도: 정치인식과 참여(16문항)

문47. 귀하는 남한의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5) 모르겠다.

문48. 귀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 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다소 만족한다. 3)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4) 다소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6)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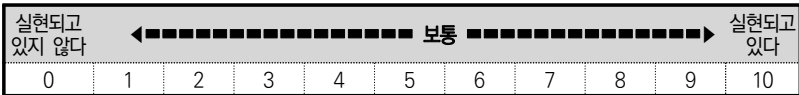
문49. 귀하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 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다소 만족한다. 3)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4) 다소 불 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6) 모르겠다.

문50. 귀하는 본인의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 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다소 만족한다. 3)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4) 다소 불 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6) 모르겠다.

문51.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2. 귀하는 다음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1) 나 같은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 정치와 정부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들은 때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3) 공무원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53. 귀하는 다음의 사회기관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	약간 신뢰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1) 신문사	①	②	③	④
2) TV 및 라디오 방송국	①	②	③	④
3) 국회	①	②	③	④
4) 대법원	①	②	③	④
5) 청와대	①	②	③	④
6) 정당	①	②	③	④
7) 중앙행정부처	①	②	③	④
8) 지방자치정부	①	②	③	④

문54.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항상 신뢰할 수 있다. 2)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3)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4) 항상 조심해야 한다. 5) 모르겠다.

문55. 귀하는 평소에 정치와 정치관련 뉴스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혹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 1) 전혀 관심이 없다. 2) 별로 관심이 없다.
3) 다소 관심이 있다. 4) 매우 관심이 있다.

문56. 귀하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안이나 선거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 하십니까?

- 1) 전혀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한 번 미만 3) 일주일에 1-2 번
4) 일주일에 3-4 번 5) 거의 매일

문57. 귀하는 정부정책이나 정치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해서 접하게 되십니까?

- 1) TV 2) 종이신문 3) 인터넷 4) 페이스 북, 트위터 등 SNS
5) 정당 및 사회 정치단체의 홍보물 6) 가족 및 지인 7) 모르겠다.

문58.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 좋은 국민이 되는데 무엇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매우 중요하다”에 7점을 준다면, 귀하는 다음 사항 각각에 대하여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결코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가 하는 일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조금 비싸더라도 정치, 윤리 또는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보다 못 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9. 귀하는 다음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된 적이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다	소속된 적이 없다
1) 정당	①	②	③	④
2)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3)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4) 스포츠 및 레저모임 등 문화 단체	①	②	③	④
5) 동창모임, 친목단체	①	②	③	④

문60.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귀하는 남한에 와서 다음의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신 적이 없다면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앞으로 할 수 있다
1) 진정서 서명하기	①	②	③
2) 시위에 참가하기	①	②	③
3)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기	①	②	③
4) 정치적 모임이나 집회에 참가하기			
5)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위해 기부하거나 모금하기	①	②	③
6)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관에 접촉하거나 출연하기	①	②	③
7) 인터넷 정치토론이나 댓글에 참여	①	②	③
8) 정치적·윤리적 또는 환경적 이유로 어떤 상품을 불매하거나 사주기			

문61. 귀하는 신문, TV 및 인터넷 매체등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2) 경우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3) 모르겠다.

문62.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매우 중요하다"에 5점을 준다면, 귀하는 다음 사항 각각에 대하여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 모든 국민이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정부가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할 경우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것	①	②	③	④	⑤
5) 정부가 어떤 상황에도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시민권은 없더라도 오랜기간 거주한 사람에게는 전국 선거의 투표권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문63. 귀하는 정당 중 가장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63-1. (가장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① 국민의당 ② 더불어민주당 ③ 바른정당 ④ 자유한국당 ⑤ 정의당 ⑥ 기타정당

63-2. (가장게 느끼는 정당이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그렇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 ① 국민의당 ② 더불어민주당 ③ 바른정당 ④ 자유한국당 ⑤ 정의당 ⑥ 기타정당
⑦ 없다.

문64. 귀하는 2017년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십니까?

- 1) 투표했다 2) 투표하지 않았다

64-1. ("투표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귀하는 투표한 후보자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십니까?

- ① 소속 정당 ② 후보의 도덕성 ③ 후보의 능력·경력 ④ 정책·공약
⑤ 출신지역 ⑥ 기타 ⑦ 모르겠다.

64-2.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는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 ②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
| ③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 ④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어서 |
| ⑤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 ⑥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
| ⑦ 누가 당선될지 뻔해서 | ⑧ 기타 |
| ⑨ 모르겠다. | |

인적 사항(※ 조사원이 직접 기재할 것)

문65. 선생님의 출생년도는?

()년도

문66. 북한에서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북한 거주지: 도 도시 / 농촌 도시인 경우는 _____

문67. 선생님은 북한을 언제 떠나셨습니까?

()년 ()월

문68.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년 ()월

문69. 선생님이 북한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1) 북한 당국의 탄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 2)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식량난 등)
- 3) 남한 혹은 제 3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 4) 북한사회보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 5) 기타(※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세요. _____)

문70. 다시 탈북 한다면 남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1) 선택한다. 2) 선택하지 않는다. 3) 모르겠다.

문70-1. ('남한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캐나다
 6) 영국 7) 독일 8) 호주 9) 뉴질랜드
 10) 캐나다 11) 기타 유럽국가 12) 기타 동남아 국가 13) 기타 아프리카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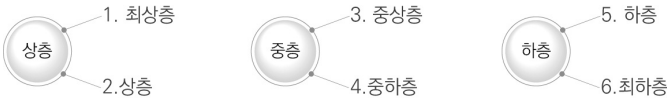
문71. 북한에 계실 때 선생님의 직업은?

- 1) 노동자(일반노동자/작업반장)
- 2) 농민(농장원, 선전원, 작업반장)
- 3) 사무원, 판매원(봉사)
- 4) 관리직(국가, 당기관 간부, 행정간부)
- 5) 군인, 보위부 등
- 6) 학생
- 7) 지식인(교원, 의사, 예술가, 체육, 연구원)
- 8) 기술자(기업소 간부)
- 9) 장사
- 10) 하루별이
- 11) 기타 _____
(기타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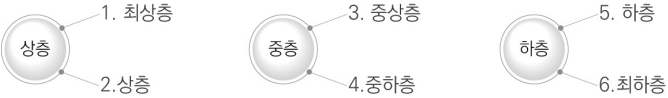
문72. 북한에서 선생님의 주된 직장생활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직장을 매일같이 다녔고 어느 정도 배급도 받았다.
- 2) 직장을 매일같이 다녔고 배급과 직위에서 생기는 부수입이 있었다.
- 3) 직장을 다녔지만, 생기는 게 없어 다른 경제활동(장사, 경작 등)을 병행해야 했다.
- 4) 직장에는 적만 두고 8.3비를 내고 다른 경제활동(장사, 경작 등)을 했다(8.3노동자).
- 5) 소속 직장 없이 개인 장사를 했다.
- 6) 기타 _____ (기타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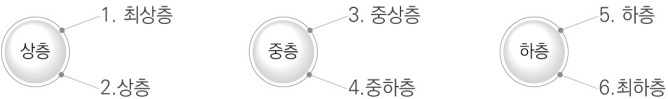
문73. 북한에 살 때 선생님과 가족의 정치신분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74. 북한에 살 때 선생님의 경제적 계층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75. 남한 사회에서 현재 선생님의 계층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76. 선생님은 북한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1) 인민학교(소학교) 졸업
- 2) 전문학교 졸업
- 3) 대학교 졸업 이상
- 4) 고등중학교(중학교) 졸업
- 5) 대학교 중퇴
- 6) 북한에서 학교에 다닌 적 없음

문77. 선생님은 북한에서 당원이셨습니까?

- 1) 당원이다.
- 2) 당원이 아니다.

문78. 선생님은 남한에 온 후 어떤 정규학교를 졸업했습니까?

- 1) 중학교 졸업
- 2) 전문학교/기능대학 졸업(1-3년제)
- 3) 정규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음
- 4) 고등학교 졸업
- 5) 대학교 졸업(4년제)

문79. 남한에서 현재 선생님은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무직이면 과거 직업)

- 1)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 2) 자영업(종업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택시 기사 등)
- 3)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판매원, 세일즈맨 등)
- 4)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운전사, 선반, 목공 숙련공 등)
- 5) 단순노무자(단순 노무, 수위 등)
- 6) 고위 공직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급이상 공무원/교장/기업체 부장 이상)
- 7)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연구원 등)
- 8) 기술직 및 준전문직(기술직, 초/중/고 교사, 5급 공무원 등)
- 9) 일반 사무직(일반회사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사무직 등)
- 10) 주부(가사에만 전념하는 주부)
- 11) 학생
- 12) 남한에서 한 번도 직업가진 적 없음

문80. 선생님은 북한에 계실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가 있었습니까?

- 1) 남한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었다.
- 2) 남한에 가족 친척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연계는 없었다.
- 3) 연계가 전혀 없었다.

문81. 남한에서 선생님의 현재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50만원 미만
- 2) 50 ~ 99만원
- 3) 100만원 ~ 149만원
- 4) 150 ~ 199만원
- 5) 200~ 249만원
- 6) 250 ~ 299만원
- 7) 300~ 349만원
- 8) 350만 원 이상
- 9) 소득이 없음

문82. 선생님은 자신을 진보 혹은 보수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10점 사이 점수를 주세요.



참고문헌

1. 단행본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2015.
- 김석진·이규창.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김수암 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김양분 외.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IV):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6.
-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5.
- _____.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사 재교육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6.
- _____.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6.
- 김진숙 외. 『통일 및 미래사회 대비 남북한 초·중등학교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방향』.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 _____.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5.
- _____. 『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 _____. 『2017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7.
- 류방란 외. 『교육정책여건 분석: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연하청·황나미. 『통일 대비 사회복지 및 보건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유균상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8.

- 이준우 외. 『경기도민 복지인식 조사와 정책방향』. 경기: 경기복지재단, 2012.
- 임소현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6.
- _____.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 _____.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비교를 통한 남북한 통합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세종: 교육부, 2016.
- 장인숙 외.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 _____.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 전홍택.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 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
- 통일부.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4』. 서울: 통일부, 2013.
- 한만길 외.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2.
- 홍후조 외. 『남북한 교육과정 총론 비교와 전망』. 서울: 교육부, 2015.

-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5.
- Dahrendorf, Ralf. “Citizenship and Beyond: The Social Dynamics of an Idea.” In *Citizenship: Critical Concepts*. edited by B. S. Turner and P. Hamilton.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4.
- Dalton Russell, J. *The Good Citizen: How the Young are Transforming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Q Press, 2007.
- Galston, William. *Liberal Purposes: Goods, Virtues, and Theory and Duties in the Liberal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1.
- Lien, Pei-Te. *The Making of Asian America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1.
- Macedo, Stephen. *Liberal Virtues: Citizenship, Virtue and Comm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Citizenship: Critical Concepts*. edited by Bryan, S. Turner and Peter Hamilton. London, New York: Taylor & Francis, 1994.
-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

-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Inglehart, Ronald and Welzel Christian.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Ong, Paul and Don T. Nakanishi. "Becoming Citizens, Becoming Voters: The Naturaliz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Asian American Immigrants." In *The State of Asian Pacific America: Reframing Immigration Debate*. edited by Bill Ong Hing and Ronald Lee. Los Angeles: LEAP Asian American Public Policy Institute and UCLA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1996.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Steven, Rosenstone and John M. Hansen.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1993.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Participation America*.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2. 논문

-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2012.
-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력(초급중학교)." 2013.
- 김교성·김윤민. "복지태도의 이중성."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2호, 2015.
-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 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1권 1호, 2015.
- 김영인.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6호, 2007.
- 도묘연. "NGO 참여 활동의 시민교육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21세기

- 정치학회』. 제20권 2호, 2010.
- 류석진·허정수.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정치권력 연구.”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 (II)』. 제10권 7호, 2010.
- 류진석.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4호, 2004.
- 서창록.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2권 1호, 2010.
- 이금순·안혜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 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 임희섭.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연구.” 『학술원 논문집: 인문, 사회과학편』. 제46권 1호, 2007.
- 정광호·김민연·금현섭.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새로운 이해: 문제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1호, 2010.
- 최지영·천희주·이명진. “한국 사회의 세대별 시민성 비교 연구.” 『한국 인구학』. 제38권 4호, 2015.
- Black, Niemi and Powell Age. “Registance and Political learning in a new environment: The case of Canadian immigrants.” *Comparative Politics*. vol. 20, no. 3. 1987.
- Bryan, Tuners. “Citizenship Studies: A General Theory.” *Citizenship Studies*. vol. 1, no. 1. 1997.
- Cho, Wendy. “Naturalization, Socialization, Participation: Immigrants and (Non)Voting.” *Journal of Politics*. vol. 61, no. 4. 1999.
- Chung, Byung-Ho. “Between Defector and Migrant: Identities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Korean Studies*. vol. 32. 2008.
- Dalton, Russell J.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vol. 56, no. 1. 2008.
- Fukuyama.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The Coming Agenda.” *SAIS Review*. vol. 22, no. 1. 2002.
- Hooghe, Marc and Oser Jennifer. “The Rise of Engaged Citizenship. The Evolution of Citizenship Norms among Adolescents in 21 Countries between 1999 and 2009.”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51, no. 1. 2015.

- Hooghe, Marc. "A Comparative Analysis of 'Good Citizenship': A Latent Class Analysis of Adolescents Citizenship Norms in 38 Countr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7, no. 1. 2016.
- Kymlica, Will and Wayne Norman.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Ethnics*. vol. 104, no. 2. 1994.
- Dalton, Russell J.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vol. 56, no. 1. 2008.
- White, Stephen et al. "The Political Resocialization of Immigrants: Resistance of Lifelong Learn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1, no. 2. 2008.
- Wong, Janelle. S. "The Effects of Age and Political Exposure on the Development of Party Identification among Asian American and Latino Immigrants in the U.S." *Political Behavior*. vol. 22, no. 4. 2000.
- Uhlener, Carole J. and Garcia F. Chris. "Foundations of Latino party identification: learning, ethnicity and demographic factors among Mexicans, Puerto Ricans, Cubans and Anglos in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UC Irvine Research Papers. 1998.

3. 기타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UNESCO. "Education for All National." *EFA 2015 Review*. 2015.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 2015-02 최근 2년 간 마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2016-01 KINU 통일 + Vol. 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6-02 KINU 통일 + Vol. 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 2016-03 KINU 통일 + Vol. 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2016-04 KINU 통일 + Vol. 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욱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욱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욱 외 24,500원

연구보고서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장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차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경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너지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운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론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규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기 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신통일대계 (4/4년차)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